



임상규 농림부장관 또 다른 블루오션,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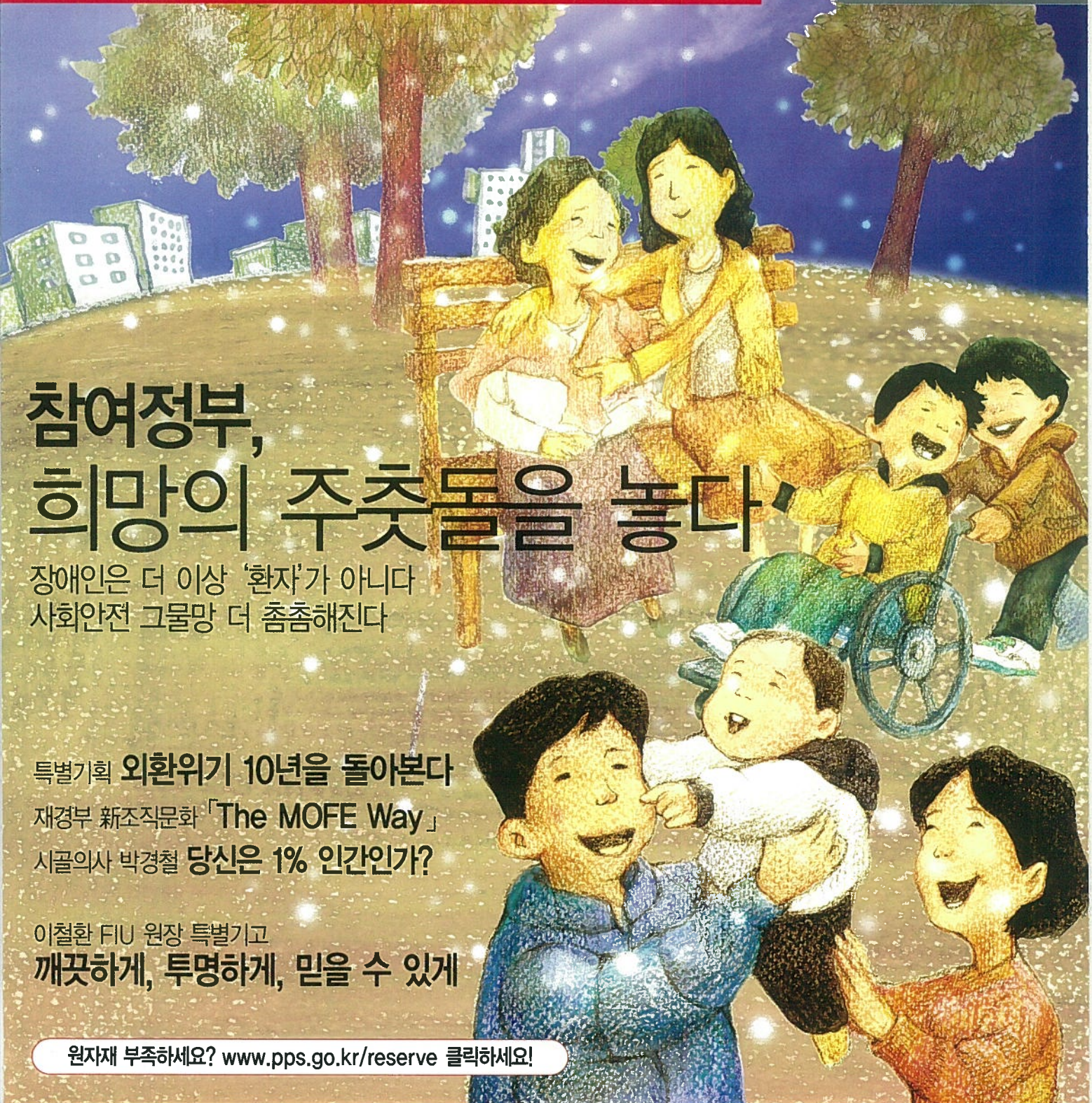
# 나라경제

경제정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잡지!

<http://nara.kdi.re.kr>

# 12

Vol. 205 December 2007



## 참여정부, 희망의 주춧돌을 놓다

장애인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사회안전 그물망 더 촘촘해진다

특별기획 외환위기 10년을 돌아본다  
재경부 新조직문화 「The MOFE Way」  
시골의사 박경철 당신은 1% 인간인가?

이철환 FIU 원장 특별기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믿을 수 있게

원자재 부족하세요? [www.pps.go.kr/reserve](http://www.pps.go.kr/reserve) 클릭하세요!



한 해의 끝이 겨울인 것은 잡다한 장식을 벗고 자신을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해 당신은 얼마나 충만하셨습니까?



2007년 12월 (제18권 12호 통권 205호)



# 009

특집

## 참여정부, 희망의 주춧돌을 놓다

- 010 사회안전 그물망 더 촘촘해진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장
- 012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사망 사고 반으로 줄였다 정익중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016 장애인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권오형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책연구팀장
- 020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 모색이 화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022 기초노령연금 등 질·양적으로 큰 성과 거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026 사회복지 전체 성적표는 B+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030

탐방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 혁신기획단

## 1등 혁신브랜드 '세움터'로 집 지으세요

최석영 서울경제신문 기자

- 095 재정부의 新 조직문화 「The MOFE Way」
- 029 '자금세탁방지의 날' 선포를 기념하며 이철환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 운전대와 휴대폰을 같이 잡으면 사람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통화는 나의 목숨은 물론이고  
남의 생명마저 담보로 잡는 무서운 운전 습관입니다

자동차와 휴대폰을 따로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가 되지만  
같이 쓰면 사람 목숨도 잡을 수 있는 분명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바꿀만큼 위급한 전화는 없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잘못된 운전 습관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제정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잡지!

# 나라경제

2007년 12월 (제18권 12호 통권 205호)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현정택 KDI 원장

편집인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강호인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편집주간  
김동률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실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차영환 정책상황팀장  
외교통상부 최연호 통상홍보기획관  
과학기술부 김주환 종합기획과장  
농림부 김남훈 행정법무팀장  
산업자원부 이준태 법무행정팀장  
정보통신부 김준상 혁신기획관  
보건복지부 하성 재정책획관  
환경부 최홍진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시민석 재정책획팀장  
건설교통부 황성연 기획총괄팀장  
해양수산부 류재형 정책기획팀장  
기획예산처 박준식 중기재정계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치걸 경쟁정책팀장  
금융감독위원회 도규상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선민 총괄조정팀장  
행정자치부 이희봉 재정정책팀장

편집간사  
유수영 재정경제부 정책상황팀

편집장  
김서령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 공은주, 이정미, 이윤우, 길준범

배포 김장철, 김경숙

발행일  
2007년 12월 1일 (매월 1회 발행)  
제18권 12호 (통권 205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12

주소  
(130-012)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02-958-4656, 465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mailto:nara@kdi.re.kr)

기사의문의 02-958-4667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12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인쇄 고려문화사 2277-1508~9

표지 일러스트 남동윤

\*나라경제는 한국인행동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 윤리경영 및 집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C · O · N · T · E · N · T · S



## 051 **만남** 임상규 농림부장관 또 다른 블루오션, 농촌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 035 **초점** 원자재 확보, 내년 우리 경제 희비 가른다

- 036 알미늄, 주식, 구리, 아연이 부족하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040 원자재 가격, 생산성 향상으로 조정하라!  
송송이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 042 원자재 부족하세요? 권재진 조달청 원자재총괄팀장
- 044 원자재 안정 공급, 비상이다 김영삼 산업자원부 철강화학팀장

## 073 **특별기획** 외환위기 10년을 돌아본다

- 074 經濟체질·思想체질 다 바꿨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
- 076 복지예산)경제예산, 복지국가로의 첫 발 때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078 IMF, 금융엔 보약이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제도연구실장
- 080 최저임금 근로자 2.3%→12%로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 082 산업·경제의 '작은 정부', 복지·문화의 '큰 정부' 만들어라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나라경제 시평  
경제정책해설

- 110 자선에 관한 단상 김희삼 KDI 연구위원
- 058 의료기기 표준화 김현일 기술표준원 신산업기술표준부장
- 060 한국의 쿼리부인과 아인슈타인을 기다린다  
박필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장
- 064 유류세 Down보다 에너지 소비 Down을  
이명순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 068 금융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도규상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장
- 104 국가경쟁력 11위! 12계단 뛰어났다  
이찬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 070 카리브의 새로운 시장 아이티 권선홍 KOTRA 산토도망고무역관장
- 063 통계를 알면 대박을 낚는다 윤철환 KDI 경제정보센터 책임전문원
- 094 막 내린 대중 마케팅 시대 IMC 그리고...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 054 삶이 보이는 창 남대문시장 오동명 사진작가
- 088 당신은 1% 인간인가?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 102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 이등순 영남대 국문과 교수
- 091 짬뽕생활사박물관 이정미·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 107 빙글빙글, 울렁울렁 어지러우세요? 김금이 일산서울내과의원 원장
- 085 시리아나 박일한 파이낸셜뉴스 기자

정책담당자 칼럼

해외시장 리포트

풀어보는 경제이야기

광고와 마케팅

화보

박경철 강연

노래 칼럼

이색 박물관

건강

영화 속 경제

# 새돈이 나왔어요

## 1953년 화폐개혁



1953년 2월 17일 서울. 은행원이 교환해줄 신화폐를 바쁘게 세고 있다(출처 : 대한민국 정부기록 사진집).

1953년 2월 15일 화폐개혁이 실시되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6·25 전쟁이 끝나자 물가가 폭등했고 수십 배  
씩 오른 악성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화폐개혁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이때부터 기존에 사용되던 모든 조  
선은행권의 유통을 중단하고 새로운 한국은행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화폐의 단위도 기존 통화기준을  
1/100로 낮춘 '환'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등장했다. 이날 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냈다. 사진 속의 은행  
원은 아예 일어서서 일하고 있다. ■

글 ·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 현재 사용하는 '원' 통화단위는 1962년 화폐개혁 이후부터 사용



# 재정경제부 · KDI<sup>7</sup> 공동 주최

## 제5회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는 미래 사회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경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학교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경제에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참가 대상 개인 및 단체

-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학교별 인원제한 없음)
- \* 5명 이상 참가하고 지도교사를 선임한 학교는 단체자격 부여

### 일시 / 장소

- 대회 일시 : 2008년 1월 19일(토), 오후 2시 ~ 4시
- 대회 장소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강릉 / 제주

### 접 수 인터넷 또는 우편

- 접수 기간 : 2007년 11월 12일(월) ~ 12월 6일(목)
- 접수 처 : KDI<sup>7</sup>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 진행본부 (<http://click.kdi.re.kr>)
- 참가비 : 없음

### 시상 내용

구 분		인 원	시 상 내 역
개 인 상	대 상	1명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상, 장학금 800만원
	금 상	2명	• 대회장상, 장학금 500만원
	은 상	7명	• 대회장상, 장학금 250만원
	동 상	50명	• 대회장상, 장학금 30만원
	장 려 상	성적 상위 5%	• 대회장상, 부상
단 체 상	대 상	1개교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 부상
	우 수 상	16개교	• 시·도 교육감상 또는 대회장상, 학교발전기금 200만원, 부상
	장 려 상	16개교	• 대회장상, 부상
특 별 상	개 인 상	1명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상, 장학금 500만원
	후원기관장상	4개교	• 후원기관장상, 학교발전기금 200만원
	지도교사상	50개교	• 상패 및 부상

**주 관** KDI<sup>7</sup>, 부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후 원**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등

문의 ☎ : 02-958-4668~4670, e-mail : [ecoexam@kdi.re.kr](mailto:ecoexam@kdi.re.kr)

# 참여정부, 희망의 주춧돌을 놓다



참여정부는 복지 분야 투자를 과감히 늘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마지 2010 플랜'을 만들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나라경제』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분야별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모색해 본다. <편집자註>

# 사회안전 그물망 더 촘촘해진다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을 전담하던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소로 등장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일-가족 양립의 논란 속에서 돌봄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장  
(imjk@mohw.go.kr)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은 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 양산 현상이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격차는 사회적 이동성을 차단하여 빈곤의 세습

화와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을 전담하던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역시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소로 등장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일-가족 양립의 논란 속에서 돌봄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 성장잠재력 높이는 사회투자 정책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에 따르는 전통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으로서 사회투자 정책이 화두로 등장했다.

사회투자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과 적응성을 높이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에 정부는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사회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치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해 '참여복지 5개년 계획', '희망한국 2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 2030'을 수립하고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긴급지원제도를 도입('06)했으며,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국가보호 책임을 강화('07)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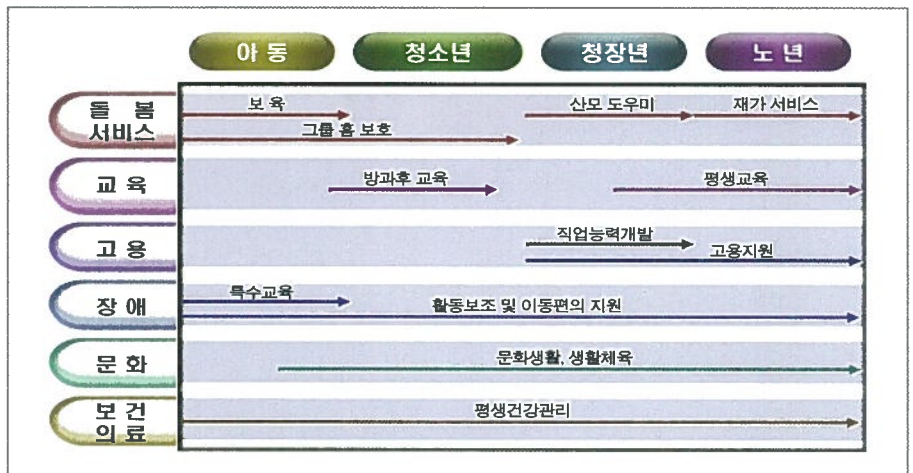
출산과 육아 지원, 건강투자를 강화하여 양질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 제공하고 아동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희망 스타트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계좌(CDA)를 운영('06)했다. CDA는 아동이 월 3만원 적립시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3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이다.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07.4),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07.7)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

<그림>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공급형태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보고회 자료, 2006. 9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일-가족 양립의 논란 속에서 돌봄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지난 10월 10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함께 낳아요 대한민국'에서 참가자들이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원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지난 10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전국민연금 시대 실현,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7~80년대의 경제성장에 이어 90~2000년대에는 사회정책 분야의 압축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기존의 의존형 최소복지를 벗어나 보편적 복지단계로 진입했으며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복지 관련 각종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악화된 후 지난 10년간의 사회정책 추진으로 일부 개선되거나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은 우리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정부가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을 짚어보자.

### 사회투자 정책이 복지의 새 장 연다

'최저생계비'라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는 통합급여 방식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전방식의 지원 이전에 '근로능력 강화, 근로여건 조성, 근로기회 제공'을 패키지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필수외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의 재정형편, 보험정책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등 의료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장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 사회서비스 10대 선도형 사업 발굴한다

지역사회서비스 10대 선도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요의 보편성, 시장창출 가능성, 전략적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서비스 10대 선도형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안전·위생, 건강·정서, 사회적응, 가족통합, 아동 발달, 장애아 발달, 아동건강 발달, 근로여건 지원, 사회참여 지원, 행정법률(10개 선도사업 영역)을 상황에 맞게 서비

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문 경영능력, 마케팅 역량을 갖춰 사회서비스 시장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자체개발사업과 차별화하여 틈새시장과 잠재수요를 발굴·공급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등 성과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인력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요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보육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반 국민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출산·육아 여건을 개선하기 지속적으로 위하여 보편적 출산지원 시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단순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보육여건 보장'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지원 일자리 확충과 함께 민간 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시설과 간병전문인력 등 인프라의 구축, 지자체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08년엔 전체 노인의 60%, '09년엔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A값의 5%, '08년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사망 사고 반으로 줄였다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대처적인 기본 생활보장 성격에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투자' 성격으로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아울러 사후처방적 접근에서 탈피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정익중**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ichung@duksung.ac.kr)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美 Washington대 사회사업학 박사

**아**동을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면서도 정작 아동의 미래는 개별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현실이었다. 각종 정부계획과 선거에서 아동의 정책적 소외가 반복되면서 아동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 결과 여러 사회복지사업 중 1950년대에 가장 먼저 시작된 아동복지사업은 반세기 가 지난 최근까지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라는 성격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유효한 정책방식이었는지 모르지만 2000년대 이후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경향, 디지털화와 지식기반경제로 대표되는 메가트렌드의 환경변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신 예방에 힘쓰는 희망스타트 센터

참여정부 들어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바람직한 기초변화를 일으킨 분야 중 하나가 아동정책이다. 참여정부 아동정책 성과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개념을 아동정책에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참여정부가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 일환으로 아동안전대책 등 보편적 아동서비스를 도입·확대해 나간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대처적인 '기본 생활보장'에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투자'로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표〉).

참여정부 이전에는 문제 발생을 막는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문제가 이미 일어난 후에는 사후처방적 접근만으로 문제의 근본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 예방적 접근은 경제적인 면에서 비용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아동안전대책,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 희망스타트, 아동발달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동발달에 요구되는 서비스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느 한 기관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제공될 수 없고 다양한 서비스 전달 주체가 개입된다. 지방자치단체·학교·민간기관 등으로 아동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으나 연계체계가 미약하여 복지·건강·교육·상당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 따라서

아동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기관간 연계체계 확립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기관들의 구심점이 되는 중심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희망스타트 센터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통합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바우처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재정 측면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2007년 7월부터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등이 실시되면서 아동정책 분야에서도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바우처를 적극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급기관에 재정을 지원하여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던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사후약방문 아니라 조기에방으로

참여정부 아동정책에 있어 그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안전사고에 대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해야 할 일로 여겨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때문에 OECD 회원국 중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

〈표〉 참여정부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요보호아동보호	→ 인적자원개발 위한 사회투자
사후대처적 접근	→ 조기예방적 접근
분절적 서비스 체계	→ 통합적 서비스 체계
기관 중심 전달체계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아동 사고사망이 2002년 1,269명에서 2007년 6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시행했다. 향후 5년간 아동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1/2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아동 사고사망 2002년 1,269명→

2007년 635명)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일궈냄으로써 아동시설 안전점검,

사고가 빈번한 아동용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한해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756명으로 아동 10만명당 8.18명이었다. 계획 수립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가 5년 만에 약 45% 감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둘째, 학대피해·실종 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2005년 복지부 내 아동안전 권리팀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권리에 대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전국 18개소에 불과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43개소로 확대하고 성 학대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학대아동 보호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켰다. 또한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을 통해 실종아동의 조기발견·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권리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동이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신에 맞추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간 것 또한 그 주요성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에 대한 가정 보호와 지역사회 보호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가정 위탁사업의 내실화, 2007년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0만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기능을 강화했으며 지역 아동센터의 확충, 아동 복지교

사의 파견, 아동 급식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인프라를 대폭 확대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했다.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아동정책으로서 아동발달계좌, 희망스타트,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등 미래지향적 사회투자 개념으로서 보편적 아동 보호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참여정부 이후 아동정책은 기존의 '요보호아동 대상의 서비스 체계'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조기개입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성장동력으로서 아동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아동정책 전담기구 생겨야

참여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단초를 마련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인프라가 부족했다. 즉, 아동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빈약한 편이고 아동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구성되는 정도까지로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향후 추진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정책이 보편적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要)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이고 사후대처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정책은 출산율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전혀 없는 중산층의 조세저항에 부딪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 전학생 무료급식, 무상 보육 및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등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내 아동서비스 체계는 공급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체계는 아동 중심의 통합된 체계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범주화된 체계로서, 서비스간의 단절성과 중복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서비스간 역할 분담과 조정,

상호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아동정책의 지원체계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계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보육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08%, 보건복지부 예산의 1.2%에 불과해 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최소한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아동정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전면적인 재편성을 시도하거나 특수 목적세나 부담금의 신설, 아동복지기금의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아동 업무의 주무부처 문제다. 주무는 보건복지부, 보육은 여성가족부,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고 아동 노동에 관해서는 노동부,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정 업무는 법무부가 전담하는 등 아동정책이 서로 다른 법제에 의해 유관부처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선진적인 제도들이 예외적으로 도입되기도 했지만 부처간 실적경쟁 때문에 아동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정책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아동정책의 체계화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 산재된 아동정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부처간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운영이 형식적이고 아동정책 분야에서 부처간 협력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단일화된 아동정책의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혹은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정책의 수

립을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의 구축과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아동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없다. 향후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아동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


### 아동보호와 양육,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아동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와 양육을 가족뿐 아니라 사회도 더불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합의의 단초는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나 연석회의 등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회의는 아동시설단체 및 학회뿐 아니라 정부부처,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 영역을 망라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아동정책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고 재원확보에 대한 전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보다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아동 상황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척도이다. 우리나라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나 재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국가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면 민간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이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동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가장 어려워 보이는 재원 마련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가족은  
칫솔 통에서만 만납니다!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는 집안 일을 이유로.....  
동생은 고3이라는 특혜(?)로.....  
아침마다 북적이지만,  
오늘도 제각각 따로따로.  
말 한마디 나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 가족은 오직 칫솔 통에서만 모입니다.  
오늘은 가족모두 저녁도 함께하고  
상쾌한 양치질만큼 개운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빠는 어깨 짝악! 엄마는 웃음 활짝!  
힘들수록 가족이 힘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 장애인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장애인 복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권오형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책연구팀장 (cortot86@kowpad.or.kr)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 해’로 정하고 1983년부터 1992년을 세계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높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을 제정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보건복지부 내에 공식 설치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본격 실시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는 단순히 스포츠 차원을 넘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는 비로소 사회복지와 국가정책의 주요한 영역이 되었다.

비록 장애인 복지가 국가 차원의 정책영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까지도 장애인 문제는 여전히 소수의 문제이고 국가의 온정주의적 시혜의 산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운동이 본격화 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편의증진법」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차원의 복지틀이 정비되었고, 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담과 계획을 담고 있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외형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한 각종 자료와 지표에 의하면 장애인인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참여정부에 와서도 그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302만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총 195만 장애인 가구 중 26만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 장애인 복지의 기본방향과 현황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통하여 지난 5년간의 장애인 복지를 반추해 보고자 한다.

## 장애인 자립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의 장애인 복지가 형식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장애인 복지가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국가책임이라는 면에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나 형태의 변화 등과 같은 기술적 방법이 아닌 장애와 재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즉 장애인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첫째, 장애인 복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국가가 권리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금까지 장애인의 지위를 환자의 위치로 보고 손상을 치료하여 사회적으로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모델에서, 장애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장애 자체를 사회가 인정하고 장애인의 위치를 소비자라 봐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자립생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복지 정책의 틀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넷째, 시설복지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과 정책 내용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법으로 정했다

참여정부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예방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애 주기에 적합한 건강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억제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에 따라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주적 자립생활을 추진한다. 넷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권리에 기반한 차별금지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보장한다. 여섯째,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일곱째, 사회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여덟째,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달 7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휠체어 댄스스포츠 국가대표인 이영호·이은지 팀이 시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장애인 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소득보장 부분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이다. 이 부분은 다소의 액수 증가는 있었으나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연금 도입은 결국 좌절되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특수교육예산이 2005년 처음으로 3%대로 진입한 것과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은 커다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낮은 교육 수혜율과 지역별 교육격차 그리고 무상교육의 확대 등은 참여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한편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의 핵심인 고용과 직업재활 분야는 의무고용 사업장의 확대와 업종제외율의 축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중심기업 설립을 포

함한 고용정책의 다양화 등을 통해 다소 나아졌지만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낮은 고용률과 낮은 부담금 납부율 그리고 낮은 고용연계 등은 한계였다.

그 밖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포함한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외견상 다양한 이동수단을 강구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명기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등은 이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며 편의시설 설치율 역시 대폭 높아진 점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기대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증진 심의회 신설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편의시설 인증제 등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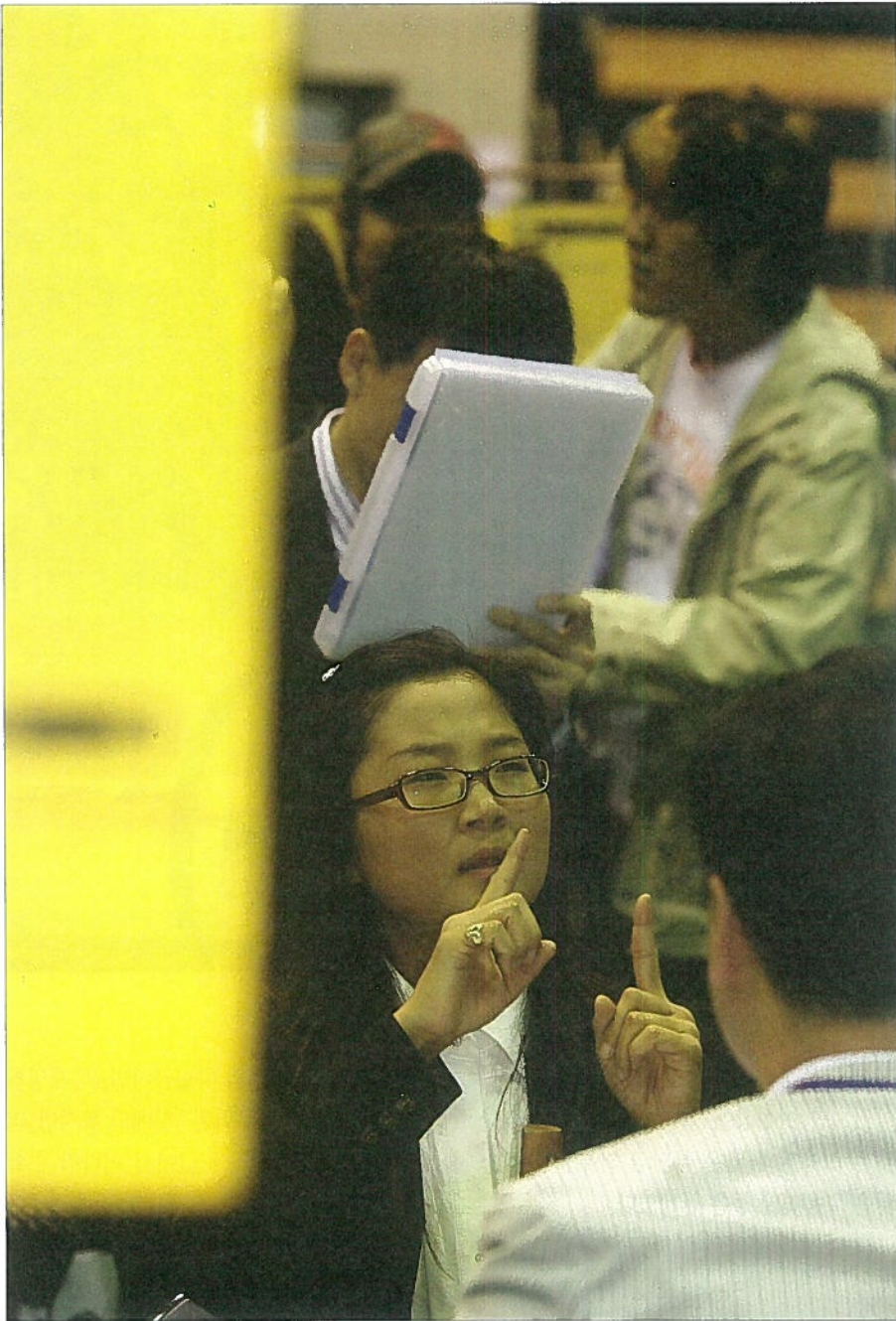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07년 4월에 도입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도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자립생활 등이 명문화된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커다란 수확이라 할 것이다.

#### 연금도입 실패, LPG 보조금 폐지 아쉽다

적어도 장애인 복지정책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참여정부의 정책은 그리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법제도의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인권 그리고 장애인 체육 등 일부 분야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지만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인 소득·의료·고용 등에서 전반적으로 장애계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책 추진율을 보였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16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



수원 이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수화(手話)로 구직 면접을 하고 있다.

대되었던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실패해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세로 전략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진 이후 많은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장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장애인의 삶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시행해 온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인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명분하에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고 올해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한 것은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자녀교육, 직업활동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LPG 지원정책의 폐지로 인해 가계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장애판정과 등록제도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 등 장애인 복지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준과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된다.

특히 당사자의 정책참여 욕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장애인 사회참여평가단과 같이 장애인의 감수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 중 가장 낙후된 분야였으나 최근 당사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장애를 둘러싼 환경이 정책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차기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는 참여정부의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수당 확대 같은 생활안정지원 강화, 장애예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보장 강화와 재활의료서비스 확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과 여건의 조성, 의무고용률 확대를 포함한 직업재활 서비스와 고용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장애인의 삶을 온전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시각이 최대한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주식도 부동산도  
주요 투자도 없다



지폐를 줄였습니다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건강한 소비가 건강한 경제를 만듭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4mm와 8mm 작아진 오천원권, 당신의 지갑을 더 많은 돈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작아진 지폐 만큼 우리도 이제 소비를 조금 줄여야 할 때 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 모색이 화두

근로빈곤층은 빈곤노인 및 장애인의 23%, 빈곤아동의 80%를 보호하는 주요한 부양자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점진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dmno@khasa.re.kr)

- 인하대 정치학과
- 佛 파리2대학 정치사회학 박사
- 사회보장학회 이사

**겨**울은 빈곤층에게 매우 힘든 계절이다. 빈곤층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동절기 지출증가, 그리고 소득감소라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계절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빈곤정책, 정교화보다 내실화를 고민하라

중요한 것은 자연에 계절이라는 시간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생애주기라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지출해야 할 금액도 변화하게 된다.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빈곤정책이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교한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의 정교화를 고민하기에 앞서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현 빈곤정책이 보호하는 빈곤층의 규모가 매우 작아 방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현재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30%, 약 730만명에 달하는 규모이

다. 이 수치는 2005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빈곤정책을 통해 보호받는 빈곤층은 전체 빈곤층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빈곤층의 욕구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서 지원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빈곤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빈곤정책의 내실화 없는 확대는 비효율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에는 추가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수급자간 급여형평성, 과잉·과소 급여, 취업수급자 관리체계 취약 등의 문제는 빈곤층으로 하여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추가적 보호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현실 정치에 있어 빈곤정책의 내실화가 정책 확대의 전제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근로빈곤층에게 취업기회와 인센티브를

최근 우리 사회의 빈곤층 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층은 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1인 이상 있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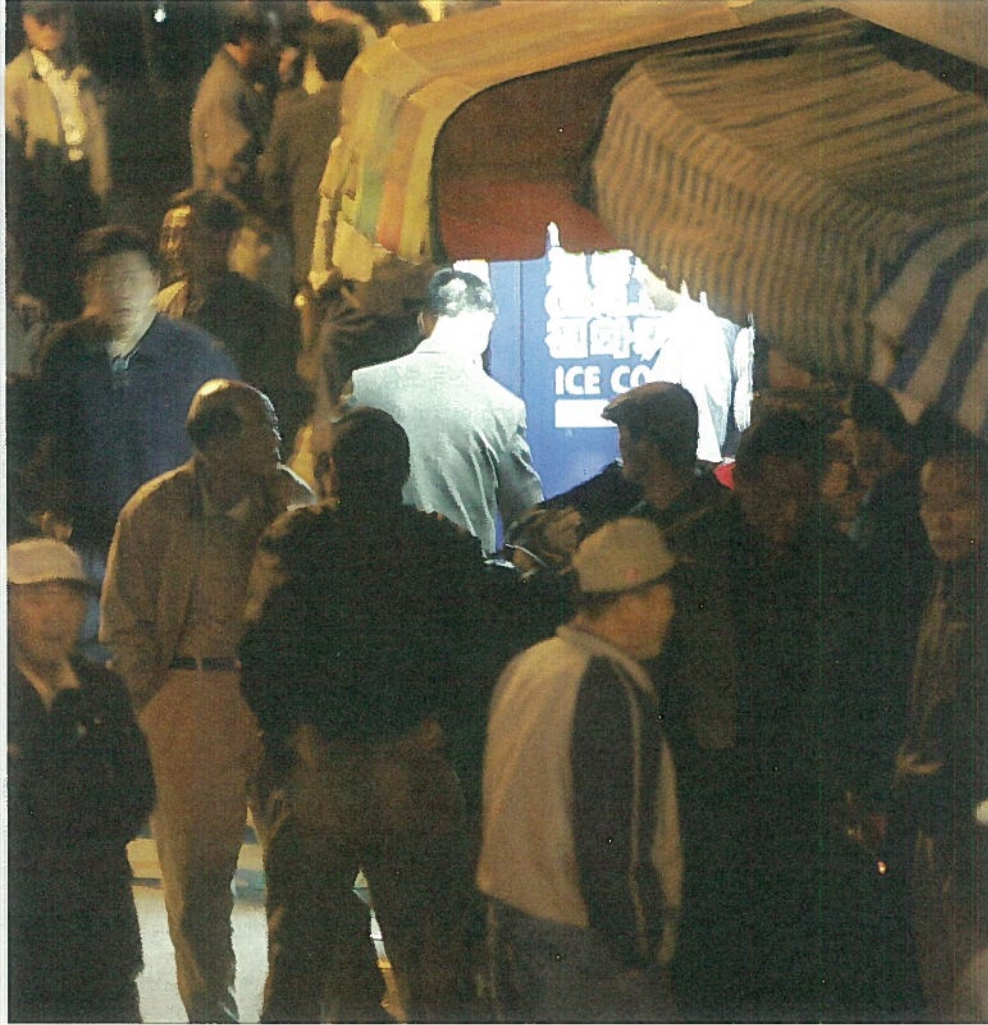
2006년 현재 근로빈곤층은 전체 빈곤층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빈곤층, 즉 노인·장애인 등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노인빈곤층이 생활능력이 없어 한번 빈곤해지면 좀처럼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빈곤층이라면, 근로빈곤층은 고용단절과 소득단절로 인해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인 것이다. 이 점에서 빈곤정책은 이들 빈곤층의 특성에 맞게 다원화·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빈곤층 노인이거나 장애인 그리고 아동은 국가가 관대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들은 소득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아니라 욕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최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빈곤정책의 차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근로빈곤층은 항구적인 보호가 필요하기보다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근로빈곤층에게는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일자리



내실 없는 빈곤정책의 확대는 비효율을 야기할 뿐이다.  
사진은 새벽 시간에 서울 남구로역 주변 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근로자들

를 제공하며, 점진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물급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복지급여에 대한 박탈감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빈곤의 충격을 증폭시키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은 빈곤노인 및 장애인의 23%, 빈곤아동의 80%를 보호하는 주요한 부양자이다. 이들의 빈곤화는 가구 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위협하고, 사회적·재정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빈곤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 주거급여 도입 적극 검토해야

참여정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으며,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빈곤층에 대한 지출확대는 단기적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빈곤정책의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를 과제로 남겨두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비용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문제, 보장(protection)과 활성화(activation)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편 또는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를 남겨둔 것이다.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은 크게 다음 네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에 도입됨에 따라 향후 노인·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제도와 의 관계를 정비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빈곤층 지원 기능이 일정 부분 약화되고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공존할 수 있지만 통합논의에 붙여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별 급여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빈곤층의 욕구에 맞게 지원을 정교화하고, 근로 유인효과를 높여야 한다. 특히 주거복지가 취약한 상황에서 주거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보전세제처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과 자활사업처럼 일자리를 연계하는 정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정책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빈곤정책과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빈곤가구의 지출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제도개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빈곤정책의 패러다임 개편과 관련하여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과 사회서비스의 저발전으로 인해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공공부조지출을 늘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낮은 지출수준을 유지하며 산발적으로 제도를 신설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

# 기초노령연금 등 질·양적으로 큰 성과 거뒀

참여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범정부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노인복지 예산은 2003년 4천억원에서 2007년 8,300억원으로 연평균 20.1% 증가했다.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도입은 노인복지 분야의 획기적인 성과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eokje@hallym.ac.kr)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
- 청와대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참**여 정부는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8.3%에 달한 2003년에 정부 운영을 맡게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전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참여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패러다임과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추진 체계를 설치·가동했다.

## 노인복지 예산 연평균 20.1% 증가

2003년 9월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 기획단’을 만들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을 수립했으며, 2004년 2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추진기구의 하나로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만든 것을 기반으로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9월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12개 부처 장관 및 12명의 민간 전문가가 위원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를 복지부 내 상설조직으로 시스템화했다.

2006년 8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사회 기본계획(2006-2010)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이 수립·발표되었다. 여기에는 2010년까지 32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범정부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추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고령사회 대응 시스템을 특별한 국가아젠다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 하드웨어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 노인복지 예산은 2003년 4천억원에서 2007년 8천300억원으로 연평균 20.1% 증가했다. 참여정부에 의해 도입이 결정되고 2008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예산이 2010

년 기준 각각 3조5천억원, 1조7천억원임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투자는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상호 보완

공적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급여-부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후 소득보장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2007년 4월 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급여 수준과 부담 수준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켜 미래세대로의 부담 이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안이란 3년여의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합의를 통해서가 아닌 여야 표 대결의 결과였다.

부담 수준을 9%로 유지한 채 급여 수준을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60%에서 40% 수준으로 무려 20% 포인트 삭감하는 내용의 개정이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그조차 완전하지는 않다. 적절한 소득보장의 관점에서 상당한 훼손을 감수해야 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는 전노

〈표 1〉 참여정부 노인복지 예산

(단위 :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노인복지 예산 (분권교부세 포함)	4,010	5,004	5,087	6,445	8,345
전년대비 증감(%) (분권교부세 포함)	5.9	24.7	1.6	26.7	29.5
· 경로연금	2,145	2,145	2,126	2,153	2,175
· 노인요양시설 확충	683	953	837	1,065	1,465
· 장사시설 확충	143	125	100	100	216
· 공립치매병원 확충	282	191	119	149	165
· 노인일자리 확충	-	178	267	593	854
· 노인보호전문기관	-	7.8	7.5	12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	19	91	136
· 노인돌봄비 바꾸치	-	-	-	-	321
· 요양시설 입소 본인부담금 지원	-	-	-	-	152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	-	-	-	236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	-	-	4

주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

노인복지 분권교부세 : '05년 1,423억원, '06년 2,228억원, '07년 2,462억원

자료 : 2006 고령자 통계(통계청),



노령근로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교육훈련 시스템이 적극 개발돼야 한다. (사진) 서울 방배동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모델교육에 참가한 노인들.

령계층에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자고 주장하며 압박하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의 연금개혁안에 대응해, 정부가 중하위 노령계층 6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민노당을 제외한 여야합의로 전격 통과되었다.

참여정부의 노후소득보장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완의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안정성도 2060~70년 정도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는 불완전한 개혁이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모두를 받지 못할 노령계층은 2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80%의 공적연금수급자라 할지라도 평균소득 5%에 불과한 기초노령연금으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셋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들 간의 이해가 상충한다는 것이다. 보편적이지 않고 선별적인 공공부조 원리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 원리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각출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상호 보완적이고 정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을 공적연금체계 내로 흡수하여 최저보증연금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노인 일자리 11만개로 늘어나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사회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내용은 '노인은 의존적 부양대상이다'라는 등식을 깨고, 노인이 생산적인 근로계층으로 계속 역할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는 노인 계속근로를 지원하는 사회시스템 구축과 노인 일자리사업에 첫발을 디뎠으나, 그 실질적 성과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을 도입하였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만 2004년 2만6천개에서 2007년 11만개로 늘어났다. 노인일자리 구성도 공공근로형에서 복지형·교육형으로 세분화되고, 일자리 참여기간 및 임금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

<표 2>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 추계

(단위 : 억원/경상기)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28년
총소요예산	22,002	34,133	34,880	59,726	94,235	146,620	370,783
국고	15,841	24,576	25,114	43,003	67,849	105,556	266,964
지방비	6,161	9,557	9,766	16,723	26,386	41,054	103,819

주 : (기본가정) '08~'27년 A값의 5%, '28년 A값의 10%

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700여개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전담인력 배치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실질적 지원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노령에도 계속 일하는 사회가 가능하려면 노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저기 기반한 노동시장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노령근로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심리적 안정감 줘**

참여정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령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을 확정했으며, 2007년 4월부터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국민이 사회연대적으로 조성한 사회보험기금으로 치매·중풍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요양욕구를 평가하여 비교적 많은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3%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와 노인(전문)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빈곤계층에게만 극히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노인요양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도 국가위탁 독점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다수제공자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서비스 시장이 형성됐다. 재정방식도 포괄적 기관운영 국가보조금 방식에서 서비스 실적에 따른 수가보상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및 지역적 불균형 문제와 영리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합리적인 서비스 가격 설정 및 적정 이용자부담, 그리고 서비스 인력의 자격관리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는 요양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일정금액(월 25만원)의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7년 2만5천명의 중하위층 요양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제공되었다. 재원은 조세이며 공급체계는 민간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체계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는 비교적 경증의 요양욕구를 가진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앞서 논의한 주요 제도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2007년부터는 독거노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동사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다.

인 생활지도사 파견을 통해 독거노인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주거지원 차원에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800대씩 공급기로 했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 차원에서 보건소 중심으로 고위험 질환을 관리하고 영양관리 및 건강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령사회 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욕구 충족과 비용부담의 차원에서 정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새롭게 도입한 노인복지 관련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될 세부적인 정책과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요소 추계

	대상자수(천명)			소요재정(억원)			
	시설	재가	소계	보험료	정부지원	본인부담	계
2008년	59	99	158	4,477	3,071	854	8,402
2010년	89	79	169	10,510	4,284	2,118	16,911
2015년	106	94	200	12,418	5,067	2,516	20,001

주 : '08년은 6개월분만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추계.



# 사회복지 전체 성적표는 B+

여전히 2% 부족한 것은 현상성이다. 사회적 담론이 정책의 충위까지 내려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현실세계에서 구현시킬 것인지, 중앙 단위에서 입안된 정책들은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jymoon@sogang.ac.kr)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영 HUI대 사회복지학 박사
-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간사위원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근대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서 건설되었다. 즉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성숙한 '산업화'와 생산된 사회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규칙을

합의하는 '민주화'라는 근대사회의 두 기둥 위에 건설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신생독립국으로서의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두 개의 축으로 하는 근대화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나라다.

## 복지 지출액 국방영역 넘어서

〈그림 1〉은 197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지출을 영역별 비중으로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약 10년 동안 복지 부문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전통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던 경제 영역이나 국방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 지출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 지출은 1990년 7.5조원(GDP 대비 4.04%)에서 2003년 57조원(7.87%)으로

급증하였다. 이 기간(1990년~200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6.8%로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즉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상대적인 규모에서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복지국가로서 발전의 기로에 서있다.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복지 부문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해가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이나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적인 사회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임을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제발전과 달리 복지의 발전은 선진국을

모방하여 이들을 따라잡는 전략(catch-up strategy)만이 능사는 아니다. 복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질적 성숙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 사회적 담론화와 인프라 구축은 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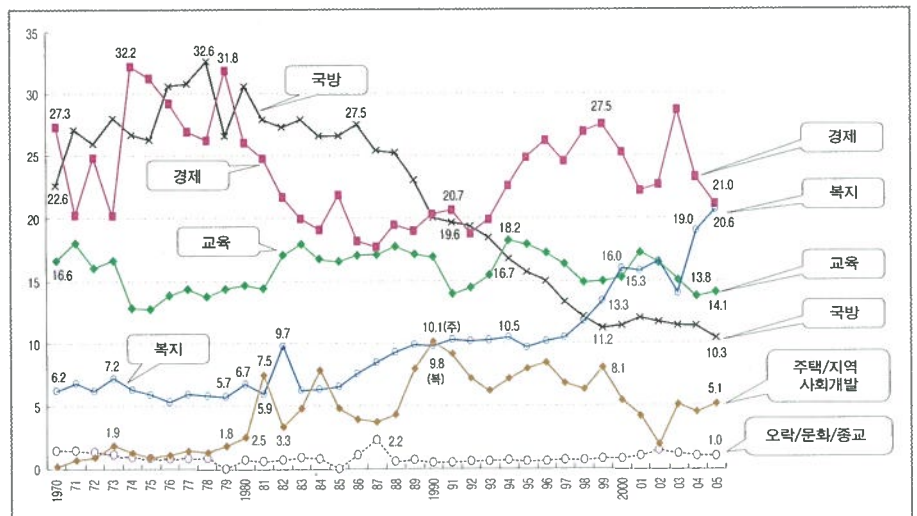
참여정부는 한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기여를 했다.

첫째, 참여정부는 사회적 담론(social discourse)을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출범 초기 '성장과 분배' 논의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사회 양극화와 사회투자국가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먼저 스스로 나서서 그 시대의 문제를 발굴해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서 담론의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너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더불어 국가운영의 한 축을 형성하는 국가정책 목표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복지 인프라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징수의 일원화를 이루어냈고,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03)하여 지역복지 중심의 서비스 신청주의를 도입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그림 1〉 1970년 이후 한국정부 지출의 영역별 비중의 추이

(단위 : %)



주 : 통합재정 결산자료, 복지: 보건지출과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 지출의 합  
자료 : 기획예산처



참여정부는 복지를 사회정책으로 의제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 지난해 8월 30일 세종로청사 별관에서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를 도입했고('05.7부터 본격 출범), 사회복지 지방이양 실시('05),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원('05),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06),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실시('05~'07) 그리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07) 등과 같이 사회복지 인프라의 구축에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얼마나 내실있게 복지의 발전을 견인할지는 미지수다. 이를 사회투자국가 논쟁과 지방이양 사업을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담론 자체보다 사각지대 없애는 게 중요

정부는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양극화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은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창했다. 당시 새로이 출범하였던 노동당 정부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출간하였던 『제3의 길(The Third Way)』에서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형태

로 들고나온 내용이다.

사회투자국가의 근본 목적은 복지가 소비적인 성격보다는 투자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기존에 분리되었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위주로 재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서 고속런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단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 도태되어 방출되는 단순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으로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것을 정부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회투자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기초적인

〈표〉 OECD 기준의 사회복지 지출 추이(1990~2003)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지출액(십억원)	7,547	18,995	47,694	48,052	49,781	57,049
GDP 대비 비중(%)	4.04	4.76 (5.05)*	8.24 (9.14)	7.72 (8.71)	7.28 (8.35)	7.87 (9.26)
연평균 증가율	16.8					

자료 : 고경환, 2007. '사회복지 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규모, 구조, 기능측면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07년도 9월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초생활은 고사하고 광범위한 사각 지대로 사회복지제도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담론 강조보다는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게 바른 길일 것이다.

### 2% 부족한 것은 현상성

사회복지 인프라의 경우, 정부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조금 정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뿌리박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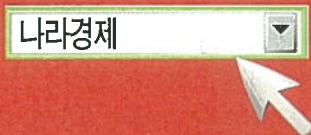
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제공 받은 분권교부세는 소요액의 85%의 수준에 불과하여 이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향은 옳았으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성적표는 '우'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의제화에 성공했고, 나름대로 인프라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 「장애인 차별금지법」('07) 등 사회복지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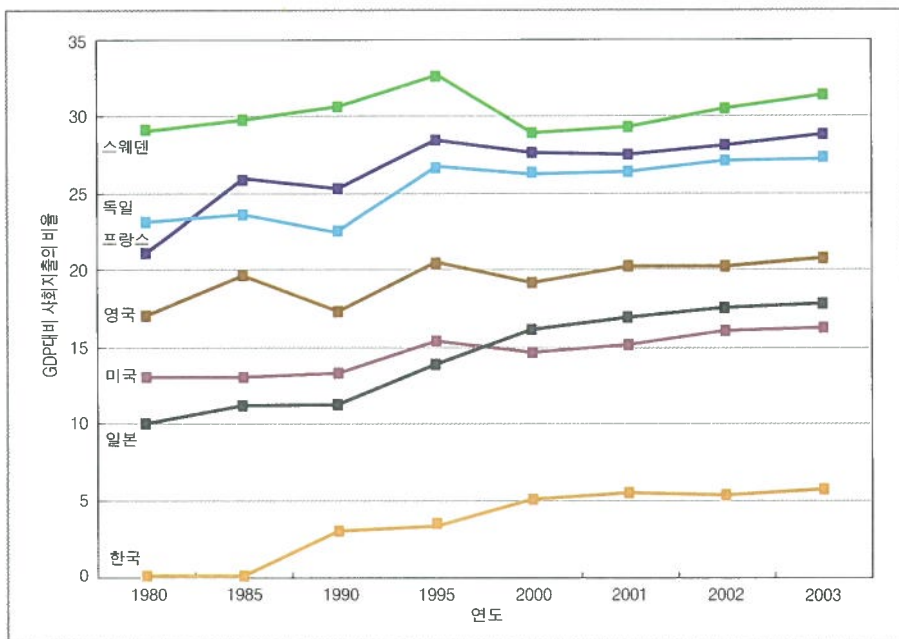
하지만 여전히 2% 부족한 것은 현상성이었다. 사회적 담론이 정책의 층위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현실세계에 구현시킬 것인지, 중앙 단위에서 입안된 정책들은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그리고 지역활동가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현장과 너무 멀리 떨어진 중앙에서 굽어보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시켰다는 혐의가 있다. 그 결과가 2%의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  
**경제정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잡지!**



<http://nara.kdi.re.kr>

〈그림 2〉 공적(public) 사회복지비의 국가간 비교



자료 : OECD 조사

# 깨끗하게, 투명하게, 믿을 수 있게



**이철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 행정고시 20회  
·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담당  
· 재경부 국고국장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일반적으로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유래한다. '알 카포네'와 같은 조직 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탁소의 합법적 수입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시작된 일이다.

자금세탁 행위는 여러 단계를 거쳐 또 다른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침투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그 악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자금세탁의 수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데 자금이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동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세탁행위가 가장 선호된다. 제3자나 위장업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금융시스템을 통한 불법자금 세탁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89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추적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가 설립됐다.

우리 정부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1년 11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 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

립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이후 지난 6년 동안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확산, 이를 통한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국제공조 강화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현행 국내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크게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 목적 등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고객 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이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성이 인정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이다.

셋째는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다. 이 중 핵심적 요소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이며, 고객확인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이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심사·분석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보분석 시스템의 내실화 및 확충 노력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와의 지능형 비즈니스 대상을 수상하고 2007년도 정부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정부부처 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전세계 FIU들의 회의체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선진국들의 회의체인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 등의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6년도에는 FATF 옵저버 자격을 획득했고, 2008년에는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에그몽 그룹 총회의 한국 개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세계 34개국과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테러 자금조달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자금세탁의 개연성이 큰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고객 및 거래유형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여 차등화된 고객확인 의무 시행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제 공조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까지는 FATF 정회원 가입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금융관행 확립을 위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다.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비로소 우리 금융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제도가 처음 시행된 시점인 11월 28일을 '자금세탁 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 선포식을 거행했다. 이를 계기로 깨끗한 자금(Clean),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의 정착(Clear) 및 이를 통한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구축(Credit)이라는 우리 금융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본다.

끝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 혁신기획단

글 최석영 서울경제신문 기자  
사진 길준범 나라경제 기자



정병윤 홍보관리관



강병목 건축기획팀장



배성호 사무관



여운종 사무관



김선일 사무관

**요**즘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청렴도 최하위 부처라는 불명예에 직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든 것이 불과 얼마 전이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바로 혁신의 선도 부처'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참여정부 들어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혁신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용섭 장관이 취임한 이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고 최근 그 결과 물도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

는 성과는 바로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가 '07 정부혁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인허가 반, 공사 반'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허가 과정은 불투명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특히 건축 인허가는 90여 개의 관련 법령, 40여 종의 구비서류, 20여 곳의 내·외부 협의기관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복합민원으로, 민원인은 최소 다섯 번 이상 관청을 방문해야 하고, 민원처리에도 평균 60일 이상이 소요돼 "집 한번 짓고 나면 공자님도 정부를 욕하게 된

# 1등 혁신브랜드 **시움터**로 집 지으세요

건축행정시스템



한만희 혁신정책조정관

박정수 서기관

김태경 사무관

최용제 주무관

김정희 혁신팀장

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에 전교부는 '98년부터 지자체의 건축행정 내부업무를 전산화 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4년부터는 도시환경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축행정정보화 혁신기획단>이 중심이 돼 인터넷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개편했다.

특히 새로 개편되는 시스템에서는 건축·주택 인허가의 신청과 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해 민원인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

었고, 관청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됐다.

또한 관청에 직접 제출했던 신청서와 설계도서 등도 모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해 종이 없는 민원 신청·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제출된 도면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기능의 도입은 인허가 프로세스 전반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모니터를 통해 도면을 검토하고 내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상

에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도면의 보관·관리·유통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지자체로의 본격적인 확산·보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기획단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50년이 넘게 지속



되어 온 뿌리 깊은 건축행정의 관행을 'No Visit No Paper'라는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가워할 일이겠으나, 서비스 제공자인 지자체 공무원과 인허가 협의기관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사이버 협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쉬운 쪽에서 알아서 서류를 들고 방문할 것인데 굳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주된 반발의 이유였다.

따라서 기획단은 이를 단순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혁신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기획단 직원 각자가 프로세스 혁신의 전도사가 돼 전국 248개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설득과 교육을 통해 사용자의 이해를 구했다. 동시에 상급기관과의 MOU 체결 혹은 별도의 전국 단위 성과지표 공개를 통해서 오히려 해당 기관을 역으로 위에서부터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아쉬운 2%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획단은 '혁신성과의 브랜드화'에 주목하고자 했다. 브랜드가 혁신의 과정을 일시적·형식적인 것이 아닌 보다 제도적·지속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브랜드의 확립과 본격적인 홍보의 장으로 '07년 정부혁신브랜드 경진대회를 선택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중앙부처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대회에서 본선 진출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었다. 어느 부처는 4개월 전부터 합숙에 들어갔다는 흥흥한 이야기도 들려왔고, 지난해에 건교부에서 출품한 3개 브랜드 모두가 본선에조차 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작단계부터 기획단의 사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8월 말부터 시작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실사, 3단계 발표심사로 이어지는 두 달여 간의 과정 동안 기획단은 발군의 팀워크로 합숙에 버금가는 강행군을 통해 수준 높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곧 '07년 정부혁신브랜드 1위 수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는 데까지 이어졌다.

혁신브랜드의 추진과정에서 기획단의 이영근 도시환경기획관을 중심으로 한민희 혁신정책조정관, 정병윤 홍보관리관, 김정희 혁



## “토지-도시-건축으로 이어지는 통합 도시건축 시스템 구축할 것”

이영근 도시환경기획관



신팀장과 박정수 서기관, 그리고 강병욱 건축기획팀장 이하 건축기획팀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

특히 이영근 기획관은 과거 건축과장 재임시절 세움터의 전신인 AIS 구축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으로 ‘세움터’ 구축에 책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현재 도시환경기획관실 내의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시스템을 함께 묶어 토지-도시-건축을 아우르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건축 토탈서비스 구축도 구상 중에 있다.

온화한 성품의 한만희 혁신정책조정관은 ‘세움터’가 최고의 혁신브랜드로 우뚝 서기까지 최선의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명쾌한 논리와 과감한 추진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김정희 혁신팀장과 부내에서 보고서를 가장 잘 쓴다는 박정수 서기관은 ‘세움터’의 처음과 끝을 함께했다. 여기에 고객의 관점에서 항상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는 김태경 사무관, 최용제 주무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정병운 홍보관리관 또한 탁월한 카피라이터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세움터’ 브랜드 전략수립 및 홍보는 물론 좌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세움터 탄생의 산파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리고 건축기획팀의 강병욱 팀장은 세움터의 개발과 지자체 확산·보급 과정에서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며, 김선일 사무관은 개발과정에서 각 주체별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여운중 사무관은 사업의 추진·확산·보급 과정에서 굳은 일을 도맡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세움터’의 담당사무관으로서 보고서 작성과 최종발표를 맡은 배성호 사무관은 최종발표대회 직전에 모친상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맘과 눈물을 혁신브랜드에 쏟아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더욱 값지게 만들었다. 특히 어머님의 병상을 지키면서까지 발표시나리오를 외웠다는 얘기가 뒤늦게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응원과 격려의 댓글이 끊이지 않기도 했다.

이렇게 혁신브랜드 대상 수상을 통해 건교부는 그간 청렴 분야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자신감과 혁신이 주는 긍정적 에너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는 브랜드 1등을 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1등 부처가 되어 제2, 제3의 세움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

**Q** 건축행정정보화가 다른 행정 분야의 정보화와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다면?

**A** 건축행정에는 90여 개의 관계법령, 40여 종의 구비서류, 20여 곳의 내외부 인허가 협의기관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복합민원이다. 우선 설계도면을 포함한 40여종에 이르는 구비서류는 그 종류뿐 아니라 분량도 상당해 이를 모두 표준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케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특히 건축행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20여 곳에 이르는 인허가 협의기관의 경우, 시스템의 도입 외에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도 매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다.

**Q** 건축행정의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비결은?

**A** 혁신 과정을 통해서 50여 년간 굳어져 온 과거의 관행을 바꾸는 일이 어려웠다. 특히 협의 과정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우리 부는 ‘세움터’라는 건축행정 혁신브랜드를 중심으로 꾸준한 홍보와 교육,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Q** 차기 정권에서 추진될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을 통해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A**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되는 건축물의 속성 정보, 도면 정보 등을 활용해 위치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간정보로 기능케 할 계획이다. 3차원 경관 분석과 법령 검토 등 민원신청 전 단계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의 사후 유지관리 단계의 기능도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검토-건물신축-사후관리의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토탈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도시계획 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 시스템(LURIS)과 연계해 토지-도시-건축으로 이어지는 통합 도시건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르르러러러  
러러러러러

「문제가」, 「판파라」라 걸시하는 이문들과 사회의 편견속에서  
순수한 노력과 열정만으로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대한민국 B-BOY  
이제 그들의 문화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화로 만들어 갑시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 원자재 확보, 내년 우리 경제 희비 가른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원자재 가격마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나라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과 수급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관련 업계와 정부의 대응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註>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성환  
알미늄, 주석, 구리, 아연이 부족하다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송송이  
원자재 가격, 생산성 향상으로 조정하라!

조달청 원자재총괄팀장 권재진  
원자재 부족하세요?

산업자원부 철강화학팀장 김영삼  
원자재 안정 공급, 비상이다

# 알루미늄, 주식, 구리, 아연이 부족하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shmin@kiet.re.kr)  
· 전북대 무역학과

**국** 제 원자재 가격이 2006년에 이어 2007년 들어서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경기 향방에 있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IMF의 비에너지 상품가격지수와

미국 CRB(Comodity Reserch Bearau, 상품조사국) 상품현물지수는 2006년 중에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으며, 2007년 들어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달러화 대신 영국 파운드화 표시의 Reuter(로이터통신사) 상품가격지수도 지난 1995년 초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2007년 5월에 경신하면서 2007년 9월 말에는 2,500 수준까지 오른 바 있다.

## 국제 원자재 가격, 달라진 시장구조

품목별 가격 추이를 보면 음식료품 가격과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올 들어 모두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확대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IMF 비에너지 상품가격지수의 경우 음식료품 가운데 곡물 등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산업용 원자재도 금속품 가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CRB 상품현물지수의 품목별 상승률을 보더라도 농축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올 들어 크게 확대되면서 산업용 원자재

가격의 상승률과 비슷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품목들의 재고량 추이에서는 상당수의 품목들이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가격 강세의 단초가 되고 있다. 금속품의 경우에는 니켈의 재고량이 2007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알루미늄과 주석을 비롯해 구리·아연·납 등의 재고량이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에도 소맥과 옥수수의 재고량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두의 재고량 수준은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낮은 재고량 수준은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장기

<표 1> 국제원자재 가격 변화 추이(기간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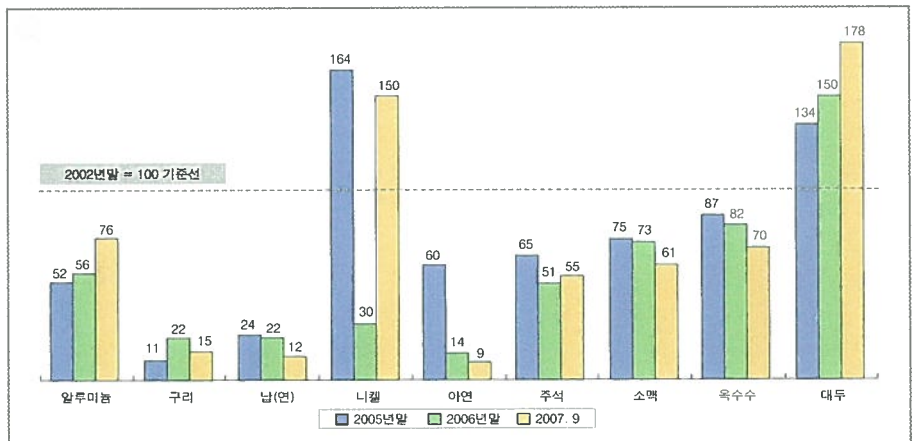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IMF 비에너지 상품가격지수	97.7 (19.0)	107.3 (9.8)	137.8 (28.4)	151.6	165.6	160.9	159.3 (18.5)
- 음식료품	96.8 (15.9)	96.1 (-0.8)	105.2 (9.5)	111.9	114.3	123.2	116.5 (11.9)
- 산업용 원자재	98.5 (21.9)	117.4 (19.2)	167.2 (42.4)	187.3	211.8	194.8	198.0 (22.3)
CRB 상품현물지수	296.9 (14.6)	295.9 (-0.3)	337.3 (14.0)	376.8	406.8	420.2	401.2 (22.0)
- 음식료품	273.1 (13.1)	250.4 (-8.3)	258.9 (3.4)	291.0	313.6	323.5	309.4 (21.7)
- 산업용 원자재	314.5 (16.2)	332.1 (5.6)	404.9 (21.9)	450.3	486.7	503.2	480.1 (22.2)
Reuter 상품가격지수	1,570.8 (10.1)	1,796.6 (2.4)	2,228.6 (20.3)	2,300.4	2,395.3	2,545.5	2,373.2 (19.2)

주: 1) IMF 비에너지 상품가격지수는 1995년=100, CRB 상품현물지수는 1967년=100, Reuter 상품가격지수는 1931년 9월 18일=100 기준임.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비 변화율(%)을 나타냄.

자료: IMF(국제통화기금); CRB(상품조사국); Reuters.

<그림 1> 주요 품목별 재고량 추이



자료: LME(런던금속거래소); USDA(미 농무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세계 경제의 호조와 실물자산 투자 선호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사진) 지난 8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러시아 첼랴빈스크(Chelyabinsk)의 제련소에서 한 노동자가 구리를 제련하고 있다.

간 지속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수요 측면과 금융 측면에서 각각 세계 경기 호조의 지속과 실물자산 투자 선호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소비증가와 대규모 투기자금**

우선, 수요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로권 등 기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을 비롯하여 개도국 경기의 호조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7년 현재까지 연평균

“ 기업들, 과거와 달라진 시장구조에 주목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정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의 최소화 위한 대체자원 개발,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 정착, 원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970년 이후 199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3.6%를 웃돌면서 세계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경기가 주택 및 건설 경기의 침체 여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과 유로권 등 기타 선진국이 내수 회복과 인근 개도국 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도국 경제는 지난 2003년에 사상 처음으로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연간 7%를 웃도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의 호조에 견인차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연간 10%를 웃도는 고성장세를 바탕으로 원자재 소비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3년 연속 10%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7년 들어서도 3분기 연속 11%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부문에서만 보더라도 니켈을 제외한 상당수의 품목들이 지난 2000년을 전후로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 수준에 그쳤으나, 2007년 현재 거의 30%선에 육박하고 있다. 즉, 세계수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소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 측면에서는 미국 달러화 약세 및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와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확대된 점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는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달러화로 결제 받는 원자재 수출국으로 하여금 가격 인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 2002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99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채권 등 금융자산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범위를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원자재와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투기자금이 국제상품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을 지속 상승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현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그 추이와 관련

해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로 세계 경기의 향방과 인플레이션 여부를 꼽을 수 있다. 미국 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개도국의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원자재 수요 우위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국가 간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연쇄적인 긴축 기조를 유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가격 급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가격 수준이 투기적 수요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라면, 가격이 실제 수급을 반영하는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급속한 조정국면을 거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가격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지난 2004년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온 기간에 대다수 전망기관들이 다음 연도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상당수가 가격 하락을 제시해 온 점은 현재의 가격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간접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시사하는 바로는 원자재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원자재 시장도 다른 금융상품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자산으로서의 투자 수요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수요자 입장인 기업들은 과거와 달라진 시장구조에 주목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확대가 국내 경기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시장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자원 개발 및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 원자재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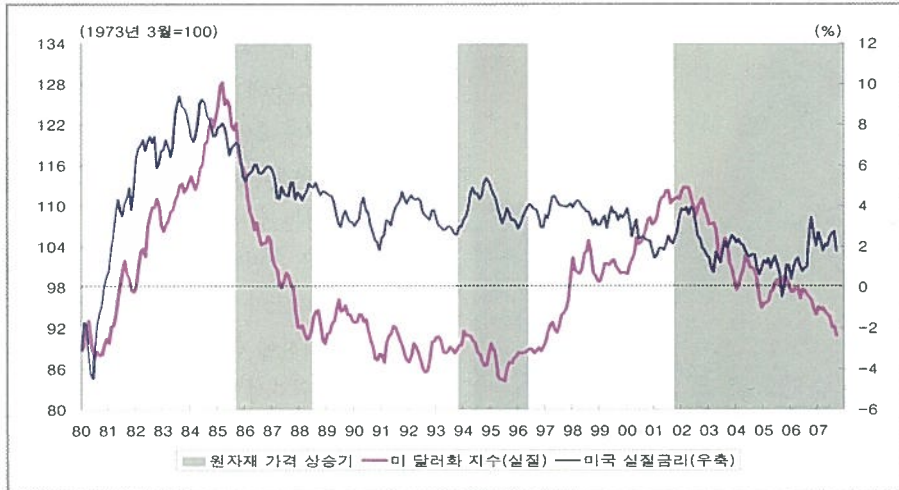
〈표 2〉 중국이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비철금속)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4월)
구리	12.7	15.7	18.2	20.1	20.2	21.8	21.1	26.8
납(연)	10.3	11.7	14.4	17.3	19.9	25.9	27.7	28.7
아연	15.8	17.2	18.0	21.3	25.1	28.5	28.8	29.2
알루미늄	14.0	14.7	16.2	18.8	20.2	22.4	25.4	30.8
니켈	4.9	7.2	7.1	10.7	11.5	15.0	15.3	16.0
주석	18.7	22.1	19.3	23.8	27.6	33.1	31.5	29.3

자료: World Metal Statistics.

〈그림 2〉 미 달러화 가치와 미국 실질금리 추이



자료 : FRB(미 연준).

〈표 3〉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망치)
					1~3분기	(전망치)	
비에너지 상품	6.9	18.5	10.3	28.4	18.5	12.2	-6.7
- 금속품	12.2	36.1	26.4	56.5	27.3	17.9	-12.0
• 구리	14.0	60.9	28.4	83.1	7.4	1.0	-11.8
• 알루미늄	6.1	19.9	10.6	35.4	7.3	3.0	-9.4
• 니켈	42.0	43.5	6.9	63.3	87.7	45.1	-28.6
• 아연	6.3	26.6	31.7	136.6	16.8	2.6	-10.4
• 철광석	8.9	18.6	71.5	19.0	9.5	9.5	-5.5
- 음식료품	5.1	13.2	1.6	9.5	11.9	8.1	-0.8
• 소맥	-1.6	7.4	-2.8	25.8	21.4	14.8	-4.6
• 옥수수	5.9	6.3	-12.0	23.6	45.5	28.3	5.8
• 대두	23.5	18.7	-19.4	-2.5	38.5	28.8	0.0

자료 : IMF(국제통화기금).



갓 태어난 내 아이-  
엄마만 보면 마냥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제 소원은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  
비전2030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는 국가미래전략



## VISION2030

한발 앞선 준비가 한발 앞선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누리는 학생기  
능력개발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청년기  
가정과 직장에서 보람을 찾는 중·장년기  
경제적 안정과 건강이 유지되는 노년기

유년에서 노년까지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는 나라!  
바로 2030년 우리나라입니다.

# 원자재 가격, 생산성 향상으로 조정하라!



송승이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songiee@kila.net)  
· 서울대 외교학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11월 6일 WTI(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으로 배럴당 96.70달러를 기록했으며, 연초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납·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 역시 연초 대비 100% 가량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곡물 역시 유가 상승에 따라 동반상승하면서 연초 대비 50~60%씩 상승하였다.

## 원유 재고량 감소, 두바이유 가격 최고치

유가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수급상황,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원유는 달러화로 결제가 되는데, 현재 달러화는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를 판매해서 보는 이득, 즉 마진이 축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계속되는 달러 약세 속에 미국 FRB(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9월 18일과 10월 31일 두 번에 걸쳐 주택 경기 침체와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를 목표로 금리를 인하했다. 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902원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로인해 세계적으로 넘쳐나고 있는 유동성은 이제 원유와 원자재, 즉 상품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둘째로,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유재고량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연초에만 해도 재고량이 높아 배럴당 50달러 수준이었으나,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이 2006년 두 차례 감산을 결정하면서 재고량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나이지리아 문제뿐 아니라, 터키의 이라크 공습까지 일어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가격 수준은 산유국 입장에서 볼 때 달러 구매력이 축소된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과거 오일쇼크 때처럼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향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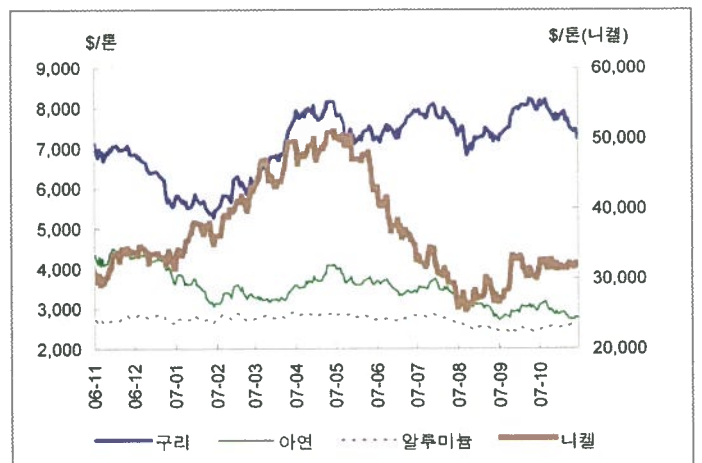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역시 연초 대비 60% 가량 상승하여 11월 7일 현재 배럴당 88.8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기준으로 볼 때 2008년에는 70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다.

## 비철금속, 중국 수요가 관건

비철금속은 품목에 따라 등락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유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납과 니켈은 각각 100%씩 상승하였으며, 전기동 역시 톤당 8천달러를 넘었다.

비철금속의 가격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수급상황이 중요한데, 이런 수급 상황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구리·알루미늄·아연·니켈 등 4대 비철금속의 최대 소비국이며, 전세계 소비량의 20~30%를 차지한다. 게다가 최근 IMF에서 발표한 올해 중국의 실질성장률은 11.5%로 경기과열 우려를 해야 할 정도이다.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구리·니켈·아연 등은 대부분 동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알루미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동폭을 보였다. 이는 알루미늄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인 품목은 자동차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납이다. 납은 중국과 호주가 최대 생산국인데, 생산 차질로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니켈은 톤당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현재 톤당 3만2천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최근 4대 비철금속 가격 추이



자료 : 코리아PDS(www.koreapds.com)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곡물의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도쿄 금융 중심지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는 일본 농업기술자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오히려 비철금속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의 급격한 성장세가 이를 상쇄하면서 비철금속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철금속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내년부터는 생산시설 건설이 완공되면서 생산량 증가로 올해 보다는 타이트한 수급상황이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가격의 상승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수요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작년에도 올해의 경제 성장을 다소 비관했었으나 예상을 뒤집고 올해에도 10% 이상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처럼 중국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의 가격 역시 2007년 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두·소맥·옥수수, 유가와 동반상승

주요 곡물인 대두·소맥·옥수수 등의 가격은 2007년 중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동반 상승 하였는데, 소맥과 대두가 특히 연초대비 약 60%씩 상승하였다. 2006년말부터 에탄올 수요의 증가에 따라 에탄올의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역시 소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금년에는 근 60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경작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및 재고량이 증가하여 옥수수 가격

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대두는 미국의 바이오디젤 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 증대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맥은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로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지원방안이 필요해. 기업도 상품과 시장 다변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부셴당 10달러를 넘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최근 소맥과 대두 가격 강세 기대로 이들의 생산 증대가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옥수수 재배면적이 감소할 전망이므로 옥수수의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두와 소맥은 재배면적이 증가할 전망이나, 소비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원자재 가격 상승, 업계 매출액 도리어 늘릴 수도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56.5%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원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유는 경공업,

중공업에 관계없이 기초원자재로 사용되므로 유가 상승은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항공·선박 등 물류비가 상승하여 수출업체와 물류업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뿐만 아니라,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따라서 우리 기업의 이익 폭을 줄이는 영향을 가져온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는 수출 가격에 전가시키고 일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이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꼭 모든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철강업계는 합금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경우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따라 철강 가격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호황을 누리게 된다. 스테인리스의 주요 원료인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상반기 스테인리스 가격 역시 초강세를 보였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원유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가공해서 만드는 정제유나 기타 석유제품의 가격도 올라서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능력 부족, 즉 정제시설의 부족 때문이었다. 중동이나 중국·인도 등 세계적으로 정제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중동에 정제시설 합작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철강가격 상승으로 인해 석유개발 시추용 철강파이프 가격이 올라 석유개발비용 역시 상승하여 석유화학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경기의 둔화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선물거래 시장에 뛰어들 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기업 자체도 상품과 시장 다변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원자재 부족하세요?

[www.pps.go.kr/reserve](http://www.pps.go.kr/reserve) 클릭하세요



권재진  
조달청 원자재총괄팀장  
(cckwon@pps.go.kr)

**자** 원문제는 기본적으로 수급양면에서 불균형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자원의 유한성, 지역적 편재, 생산 및 판매의 카르텔화 경향 등이 지적될 수 있고, 수요

의 측면에서는 인구의 증가, GNP 증가, 산업고도화에 따른 수요확대 등이 지적될 수 있다.

## 자원의 유한성, 지역적 편재가 이유

국제 원자재 시장 역시 파동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3년 이후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은 중국·인도 경제의 급부상에 따른 수요 급증, 투기적 펀드 유입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큰 급등락과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 원자재의 급격한 시세 변동 및 국제 파동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만일 원자재 파동·공급 중단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막대한 복구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축시설 확보비용 및 비축재고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유통재고 이외의 비축은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는 자원시장 상황에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일찍부터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위기상황의 극복 및 수요공급의 불균형 해소라

는 공통 목적 하에서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신개념 '원자재 공동구매 서비스' 실시

1960년대 이후 우리는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수출지향적 전략을 택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67년도에 조달청 내에 원자재비축국을 신설하여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수요의 일부만 생산되는 산업 기초소재인 알루미늄·구리·니켈 등 비철금속과 펄프·생고무 등 임산물에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정부 비축은 수입 대행기(1967~1969년), 완충재고 비축 확충기(1970~1974년), 종합적 경기대응 비축시기(1975~82년),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상시비축 시기(1983~1994), 민간의 자율적 수급기능 보완차원의 비축(1995~현재)을 거쳐 발전하여 왔다. 또한 1997년 IMF 위기 때에는 비축 원자재(9개 품목)를 시중 가격보다 5~20% 저렴하게 대량 방출(13만5천톤, 2,743억원 규모)하여, 국가 위기의 조기극복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파트너이자,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안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비축물자 상시방출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시중가격 대비 3~5% 저렴하게 상시 방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조달청은 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 5개 품목, 니켈·실리콘 등 희소금속 7개 품목 및 펄프 등 13개 품목을 비축물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알루미늄·구리·니켈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하여 2007년 10월말 현재 4,800억원 상당의 비축물자를

<그림>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 LMEX는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알루미늄, 구리 등 6개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가중평균지수임.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금속 가격지수는 '03년도 대비 3.6배 상승했으며, 구리는 5배, 니켈은 4.2배 이상 상승  
· IT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일부 희소금속의 경우 10배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이 속출(바니듐, 인듐, 몰리브덴, 셀륨 등)

**비축물자 웹사이트**  
Public Procurement Service

비축업무안내 / 국제원자재시정동향 / 국민참여 / 뉴스센터

소달청홈으로

“고객감동을 전달하는 세계/초/인/류 조달기관”

- (2007-11-14) 코발트 파우더 대역 발송 안내
- (2007-08-06) 코발트 파우더 대역 발송 안내
- (2007-06-08) 원상방출 미자출 및 대역 미자출 조정...
- (2007-05-15) 코발트파우더 대역 안내

공시사항    원자재관련보도    \* HRSK    중소기업지원동영상    QUICK MENU

중소기업지원동영상  
고달청비축사업의 중소기업지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검색어이해설    고객센터

원자재 판매가격    (단위 : 원/톤)

종목	판매처명	판매가격 (부가세포함)	판매현도	판매기간
알루미늄(서구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2,640,000 원	50톤/주	2007.11.13-11.19
알루미늄(비서구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2,630,000 원	50톤/주	2007.11.13-11.19
전기동	부산, 인천, 대구, 대전	7,180,000 원	25톤/주	2007.11.13-11.19
연	부산, 대구	3,680,000 원	5톤/주	2007.11.13-11.19
타연	부산, 인천, 대구	3,030,000 원	25톤/주	2007.11.13-11.19
주석(99.85%이상)	부산, 인천, 대구	17,510,000 원	25톤/주	2007.11.13-11.19
주석(98.90%이상)	부산, 인천, 대구	17,580,000 원	10톤/주	2007.11.13-11.19
니켈(입금용)	부산	35,730,000 원	10톤/주	2007.11.13-11.19
니켈(도금용)	부산, 인천	35,940,000 원	2톤/주	2007.11.13-11.19
팔코(NBKP)	전북	790,000 원	200톤/월	2007.11-05-12.03

비축물자 판매대상은 해당 원자재 실수요 제조업체, 중소기업단체(조합)임  
· 본 비축물자는 판매할 수 없으며, 견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후 판매대상에 제한됨

비축물속국제가격(Daily)

알루미늄(액) (2006.11.15-2007.11.15)

종목	종가	변동폭
알루미늄(액)	2,609.0	1.24
주석(액)	17,575.0	3.99
니켈(액)	33,200.0	-0.79
연(액)	2,685.0	0.95
타연(액)	3,535.0	1.49
동(액)	7,130.0	2.98

· 시트기나태시지는 경우 상세설명을 참조

조달청에서는 2003년부터 비축물자 상사방출제도를 도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ww.pps.go.kr/reserve)

방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동구매’를 벤치마킹하여 ‘원자재 공동구매 서비스’를 2007년 2월부터 도입함으로써, 고가의 정부비축 위험을 줄이면서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방출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부 원자재 시장분석 전문가 2명을 채용해 내부 전문가 집단(In-House Think-Tank)으로 활용하는 등 구매적기 포착을 위한 국제원자재 시장분석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분석한 국제원자재 시장정보를 정부비축 웹사이트(www.pps.go.kr/reserve)와 전자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이 제공하는 국제원자재 시장정보는 일일과 주간 단위로 생산되며, 2007년도 연간 18만회 이상의 정보이용을 목표로 매일 비축물자 이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원자재 비축규모 단계적으로 늘린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 5월에 이어 2007년

5월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는 국제적 공급 장애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비축규모를 확대하고 가칭 ‘정부비축사업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불확실성에 대비할 계획. ‘공동구매 서비스’를 활성화 해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할 예정 ”

지금까지 정부비축은 우리나라 경제성과 과를 같이하며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여 왔다. 그러나 비축규모가 국제적 공급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적정비축규모(국내 수입 수요의 최소 2개월분을 의미)와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며, 비축사업 운영과 관련한 범국가적인 협조와 공동대응 체계가 미흡해 몇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08년도 역점 추진과제로서 보유재고 규모를 적정비축 규모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축사업 관련 정부 협의체를 통한 부처 간 협조

체계 강화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먼저, 자원과 등 국제적 공급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비축규모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비축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한 방출량 확대로 현재 조달청 보유 비축재고는 품목별로 국내수입 수요의 10~30일 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 비축은 가격안정기에 구매하는 것이 특히 긴요한 분야로서, 국제 상황에 맞추어 구매적기를 포착하여 국내수요의 2개월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물자 확보 계획에 발맞추어 현재 5,304억원에 머물고 있는 비축자금을 약 1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한 범정부적 협의체(가칭 ‘정부비축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축 관련 주요업무를 협의 조정함으로써 높아져 가는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부처 간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광업진흥공사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가 참여하여 비축물자의 선정 및 비축물자 구매·방출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개념의 방출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현재 비축물자 방출규모의 50.4%를 차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자재시장 분석정보 제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 해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달청의 이러한 원자재 확보 노력과 2008년도 비축사업 운영방향이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을 가르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 원자재 안정 공급, 비상이다



김영삼  
산업자원부  
철강화학팀장  
(kysam@mocie.go.kr)

**국** 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납 등 비철금속의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과거 산업용 원자재 가격은 8~10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

여 왔는데, 2002년 이후부터는 과거와 달리 상승 추이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 초강세를 보이는 '슈퍼 사이클'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개도국들의 고성장에 힘입은 세계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원자재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것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원자재 가격 '슈퍼 사이클' 조짐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재와 비철금속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재의 경우 가격이 급등한 철스크랩(고철)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철근·형강(주: 각종 단면형상을 가진 봉모양 압연재) 등이 올 2월 이후 20% 수준의 가격 상승을 보여 왔고, 우리나라 조선 건조능력 확대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조선용 후판도 10%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

구리·납 등 비철금속 또한 비교적 낮은 채고 수준과 타이트한 수급여건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에너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간 거래량이 작던 희소금속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납사 가격도 유가 급등에 따라 연초 톤당 521달러에서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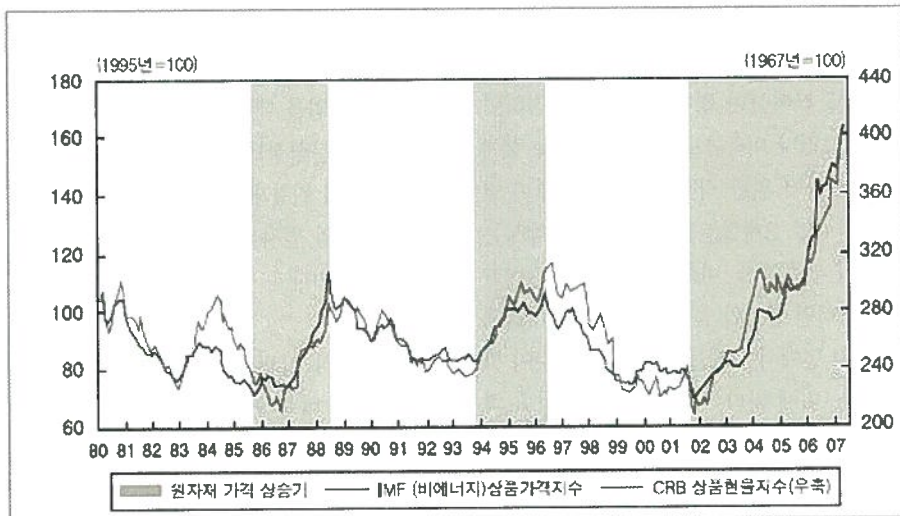


800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대만과 중동의 설비 확충과 섬유·가전 등 전방산업의 경기 둔화로 10% 이하의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은, 연간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원자재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상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달러화 약세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원자재와 같은 실물자산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그림〉 비에너지 부문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 IMF, CRB

황은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재 자급률이 낮은 비철금속 부문(아연 제외)은 장기계약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파동 등 외부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단기간에 걸친 가격 급등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자동차부품업체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105개 품목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에 정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산업용 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기청, 조달청 등의 관련기관 및 원자재 생산·수요 업체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추진 중

에 있다.

첫째,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산업용 원자재 수급안정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니켈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과 원자재 구매자금 조기배분 및 추가 확보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둘째, 주요 원자재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철강 소재성 제품, 니켈 등 원자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활동 사례로는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신설(800만톤, 2006~2011), 동부제강의 전기로 사업(250만톤, 2007~2009),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400만톤, 2007~2010) 및 니켈공장 신설(3만톤, 2007~2008) 등이 활발하게 추진



포스코가 지난 5월 준공한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은 가동 5개월 만에 하루 4,300t의 철을 본격 생산하는 체제에 돌입했다.

경기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고성장이 앞으로 원자재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세계 원자재 가격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급률 낮은 비철금속, 외부변화에 민감

이러한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자재 수급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철강재의 경우 국내 공급이 부족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냉연과 도금강판의 생산능력 확대로 수요가 증가한 열연강판·슬라브·빌릿 등 소재성 제품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 건조능력 확대로 수요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수급동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비축분을 늘리고 관세를 조정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영 애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조선용 후판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업체의 설비 Full 가동 및 생산능력 증대와 수입 확대를 통한 공급물량 확보를 통하여 현재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할 만큼 충분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업체의 수급상



지난 6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전기료 제강방식'으로 201mm 강판 슬래브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중이다. 또한 현재 약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철강재의 원소재인 철스크랩의 회수율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림으로써 철스크랩 자급 국가를 꾀하고 있다.

셋째, 2007년 1월 1일부터 철광석 등 주요 기초원자재 10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인하 및 관세철폐 등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가격이 급등한 니켈과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당 원자재를 구매하는 수요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넷째,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007년 계획되어 있던 3,148억원의 '원자재구매자금'을 조기 배분하고, 하반기에 3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다.

다섯째,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전략적 비축품목을 확대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006년 1,101억원을 지원한 해외광물자원 투자에 대해 금년에는 84.4% 증액한 총

2,0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광물자원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연내에 2천억원 규모의 '광물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입은행 등 시중 금융권의 자체 자금을 국내 자원개발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광물자원 개발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 니켈 함량 적은 스테인리스 강판 개발 등 R&D 강화

조달청은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에 대해서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가능한 방출 품목을 작년 1개 품목에서 올해 6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 2월말 산자부와 재경부 및 조달청 간의 조정회의를 거쳐 주요 희소금속 15개 품목을 비축기로 결정하고, 재원 소요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니켈·코발트 등 6개 품목은 조달청이, 크롬·티타늄 등 9개 품목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분담하여 비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가의 원자재 의존 비율이 낮은 기술 집약형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요대비 공급부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철금속 부문은 대체재 기술개발 R&D 지원 강화를 통해 신재료를 발굴하는 등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켈 함량을 적게 사용하면서 성능은 동일한 스테인레스 강판을 개발하고, 구리 등 자동차 부품용 필수소재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알루미늄 합금소재로 대체하는 기술들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여가도 완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산업용 원자재 공급기반 마련에 온 힘을 다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에너지 통장

년 월 일	적요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 액	취급점
2005	에너지수입액			-₩63,426,000,000,000	
1	전기 플러그 뽑기	760,000,000,000			
2	TV시청 한시간 줄이기	312,000,000,000			
3	채널 수시로 바꾸지 않기	700,000,000			
4	냉장고 가족수에 맞게 사용	624,000,000,000			
##### 우리가 가진 빛을 줄여 가는 간단한 방법, 더 많습니다 ##### 에너지절약					

잔액란에 '-' 표시된 금액은 대출금 잔액임

우리가 가진 마이너스 통장  
값기 어려운 빛이 아닙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현장에서는...

원자재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현황과 내년도 전망,

대비책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 <정리 :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손종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b>2007년 원자재 수급 현황?</b>	내수가 2006년 대비 7.7% 증가한 5,347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금년 상반기에는 수요증가율이 높고 하반기는 정체 현상. 수출은 해외수요 호조로 5.7% 증가한 1,923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이같은 내수와 수출호조를 배경으로 생산도 6.3%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6천만톤을 넘어선 6,083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수입은 내수호조 및 국내공급부족 품목을 위주로 10%이상 크게 증가할 것.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자재는 납사 비중이 거의 100%. 납사는 국내 공급과 수입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사용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07년 국내 납사 사용량은 3,210만톤으로 전년비 3.5% 증가, 국내 공급은 전체 55%인 1,765만5천톤
<b>2007년 원자재 수급 어려움은?</b>	상위공정인 냉연단압업계의 핫코일 구덕 난과 가격상승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고, 냉연시장의 설비과잉에 수요부진이 겹쳐 경영난이 가중됐어. 스테인리스제품의 원자재인 니켈가격 급등락으로 가격하락을 예상한 수요자들의 구매기피하여 7월이후 스테인리스업계의 생산 일시 중단 사태 발생	신규 정제 설비의 가동 부재 속에, 낮은 납사 재고로 인해 공급 불만이 야기되면서 타이트한 수급 상황 발생.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최근의 원유가격 급등과 아울러 하반기 비수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석유화학 업체의 수익성 악화.
<b>2008년 원자재 수급 전망은?</b>	조선업의 호황과 건설업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철강재 소비증가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 예상. 수출은 원화강세 우려에도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입은 중국의 수출억제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절대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줄지 않을 듯.	신규 정제 설비 확충으로 원활한 공급 예상. 수요면에서도 대형 신규 NCC 설비의 가동 부재로 전년도의 수요 증가세가 완화되면서 타이트한 상황에서 벗어날 전망. 향후에도 원유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제조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역마진이 우려.
<b>원자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준비할 사항은?</b>	브라질·호주 등 원료업계의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응해 한중일 철강사가 공조를 통한 협상력 강화에 힘써야 해. 원료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단기적으로 원료의 다변화가 시급. 실제 회원사들이 납사의 대체원료로 LPG 사용을 확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 메탄올·석탄 등을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을 추진해야 해.
<b>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b>	철강업계는 구조적인 상위공정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상위공정 부문에 활발히 투자를 계획. 이러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의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석유화학 원료용 LPG에 대한 관세, 특수세 부과는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는, 석유화학 원료용 LPG에 대해 관세 및 특수세를 폐지하고 원료의 다변화를 촉진해야



정해진 한국비철금속협회 상근부회장



강병호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 사무총장



김육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기동은 연초 LME 가격의 하락세 예상으로 일부 물량이 수출되었으나, 가격의 급반등으로 일시적인 국내수급 불안정하여 수입으로 대체. 동 스크랩은 對 중국 수출물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국내 스크랩 물량 부족 가능성이 상존. 연·아연·알루미늄 등은 중국이 수요급증 및 자국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관세 부과로 수입물량 감소하고 수입가격 상승.

중국의 對미, 對일 수입량의 감소로 인해 후반기 수입스크랩가격의 인하 및 상대국의 환율 하락. 국내 수입스크랩 물량이 전년대비 24.4%의 증가추세. 10월부터 국내스크랩 가격의 인하가 지속.

원자재 가격이 2004년도에 폭등한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의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 이는 제품생산업체의 국내외 경쟁력 상실 및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선진국 경제 회복과 BRICA 국가의 성장에 따라 수요는 급증, 1990년대말 이후 광산에 대한 투자부진과 자연재해·파업·보수 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 글로벌 저금리 기조로 인한 과잉 유동성, 투기적 펀드들의 분산 및 위험자산 투자, 달러화 약세로 인한 실물투자 증가 등이 가격 상승 요인.

국내 철스크랩 자급도는 70%를 넘어서 단계로 20~30% 수입이 적정선. '선' 국내스크랩 전량구매 '후' 수입물량 조절로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수입 상황에 따라 국내 철스크랩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해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

생산업체는 내수시장에서는 최종 수요자에게 원자재 가격상승분의 제품가격반영이 어렵고,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월 판매 원료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관행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아. 원자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고 있어 가격 인상분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기동은 수요업체의 부진과 장항제련소 가동중지 검토로 수출 28.6%, 수입 10.3% 감소. 연은 밧데리업계의 생산 및 수출증가세 지속으로 수출 6.7% 감소 수입 11.1% 증가. 아연은 LME가격 안정세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수출 4.5% 증가 수입 8.2% 감소. 알루미늄과는 변화 없을 것이며, 니켈과는 가격 변동 폭이 커 수급파악 어려워.

전기로 업체에서는 2008년까지 400만톤을 소화하는 신증설 설비가 가동될 계획. 자가발생·가공·노페스크랩의 발생 총량은, 국내 철스크랩 공급은 2010년 경 2,408만톤, 2015년 경에 2,837만톤 내외로 늘어날 것. 자급화는 2022년경에 가능.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인상의 피해를 그대로 받을 것. 원자재 가격인상이 적절한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원자재 수급문제보다는 가격상승, 생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한 원가부담 가중 및 채산성 악화 등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

국내외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광산을 개발·인수 하거나, Recycling을 고도화하는 등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도입 조건을 개선해 부산물 및 희유금속 회수 증대에도 힘써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후 전문기관에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수요업체의 국내 구매량·수입조달량의 예측기구 조성이 필요. 분업화 풍토 조성, 제강사 간, 납품업체 간 과열방지 및 불순물 혼적의 악성업체를 축출하기 위한 협회차원의 거래 인증제 도입이 필요

합성수지 가격예고제 도입과 정착을 통해 현행 관행을 시정해야 해. 대기업에 정당한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가 부당하게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 방지에 노력해야 해

해외광산 개발에 대한 정부의 폭 넓은 지원이 요청되며, 새로운 조업 및 환경개선기술의 개발과 그 적용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금융 및 세제지원이 필요.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금융·토지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 수출입 승인제 실시로 수입물량을 조정하여 국내 업계의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 폐자원 재활용 사업체에 대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해야

장기적인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 국내외 환경규제 해소 등 플라스틱 산업관련 공동 애로사항 등을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업체와 단체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구성해야

# “우리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경제 담당 교사, 경제학 전공 10%뿐

한국인의 경제 교육 뿌리가 부실하다. 고등학교 경제 담당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가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손정식 한양대 교수는 이것이 학교 경제교육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서울 무교동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우리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가졌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주제인 ‘학교 경제교육 환경’에서 외연을 넓혀 경제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재정부가 후원하고 경제교육 전문기관 18개로 짜인 경제교육협의회의가 주관하는 등 참여 단체들도 대폭 늘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경제교육이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갖는 기회였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교육이 어떤지도 살펴봤다. 이를 위해 ‘학교 안’과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 조사를 분석했다. 또한 경제 교과서의 표준 개념 12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시된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덧붙여 각종 고교 교과서에 기술된 ‘대공황’이 서술상 어떤 오류를 지니고 있나를 지적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세미나에는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했거나 현재 회장으로 재임 중인 3분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경제교육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 온 전문가, 언론계 인사, 교사들이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등장했다.

첫째 세션은 박명호 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박 교수는 우리 경제교육의 취약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한 「경제교육 지원법」 마련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경제 전문가 중심의 경제교육협의



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둘째 세션에서는 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가 이어졌다. 손정식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용자 숙명여대 교수의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 성인 학습자들 가운데 불과 11%만이 경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교육의 필요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특히 금융활동과 관련된 경제교육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세션은 경제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를 다뤘다. 한경동 외국어대 교수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학습 의욕과 흥미를 북돋는 데 한계를 지닌 경제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교육 표준안’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개의 기본 경제개념을 정립했고, 33개의 내용 요소, 75개의

주제로 확장시켜 표준 개념을 마련했다.

끝으로 KDI 김두얼 박사는 대공황을 서술한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①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서술 ②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서술 ③대공황 회복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왜곡된 내용을 꼼꼼히 짚어냈다. 특히 교과서가 세계 경제사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의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역사·법 등 학제적 접근을 통해 경제적 시각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민간·학계가 협력하는 경제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교육이 세계화와 개방화를 다루는 영역을 늘려야 한다.

넷째, 경제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자료의 전달 체계를 다양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공공 경제교육은 정보의 통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여론 형성은 경제학계의 적극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회의 시간은 예정보다 늦게 마무리 되었다. 세미나에 대한 언론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한국인의 경제교육 뿌리가 부실하다’에서 ‘경제 전공 교사 10%뿐’까지 다양한 제목으로 모든 언론들이 이번 세미나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경제교육에 달려 있음을 되돌아본 기회가 되었다. 경제교육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을 공론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사진·기사 제공 : KDI 경제교육협의회 사무국

## 또 다른 블루오션, 농촌

- 1949년생
- 서울대 금속공학과
- 美 Syracuse대 석사
- 중앙대 행정학 박사
- 행정고시 17회
- 과기부차관
-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국무조정실장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일시 : 2007년 11월 9일(금)  
장소 : 농림부장관 집무실

농촌에서 젊은이와 아이들을 찾기 힘들다. 농업이 비교우위에 밀려 천덕꾸러기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 현재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EU와의 FTA도 곧 타결될 전망이다. 개방이 확대될수록 농업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를 때 농림부의 수장을 맡은 임상규 장관에게 농림업의 미래와 대안을 듣고 싶었다.

과천 농림부장관실은 활기차고 분주했다. 어느 장관실 같은 근엄과 고요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장관과 사진 한 컷 찍는 게 소원이라고 찾아온 농민, 시상식 꽃다발을 장관에게 전하고 싶다는 중년 부부, 농민행사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을 맞아 임 장관은 연신 악수하고 껄껄 웃고 사진 찍느라 바빴다. 인터뷰 시간 내내 활기를 잃지 않고 미래 청사진을 펼치는 장관의 얘기대로라면 농촌은 또 다른 블루오션이었다. 위기가 기회라고 농촌이야말로 새롭게 희망을 파종할 만한 지역이었다.

장관이 활력이 넘쳐 보기에 즐겁다. 임 장관도 농촌 출신인가? 농업에 태생적인 애정을 가졌나?

당연하다. 우리 세대 중 농촌을 고향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아버지 따라 밭도 갈고 똥장군도 저보고 돼지도 키웠다. 농촌의 흙 냄새 자체에 향수를 가진 사람이다. 1982년 이후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담당하면서 농림 예산을 편성해왔기에 농림부는 내게 낯선 곳이 전혀 아니다. 일도 신난다. 한 주에 두세 번씩 현장에 꼭 나간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이 평소 내 소신이다. 농업과 임업에 내재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법 또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농촌은 식량 생산만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 도시인이 찾아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돌아올 자연이 살아있는 휴양공간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이틀 뒤가 마침 농민의 날이다.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정한 이유가 있느냐? 그날은 '빼빼로 데이'라는 종래의 풍속 대신 '가래떡 데이'로 만들어 색색의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먹는 행사를 벌인다는 소식을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읽었다.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더라.

한자로 십(十)과 일(一)을 나란히 쓰면 흙토(土)자가 된다. 그래서 그날을 농민의 날



로 정했고 쌀 소비운동을 촉진할 겸 가래떡 데이 행사를 여기저기서 벌이기로 했다.(원래 '가래떡 데이'의 아이디어는 안철수 연구소가 낸 것으로 11월 11일 서양과자 대신 가래떡을 만들어 직원들끼리 나눠먹은 데서 유래했다 한다)

FTA 비준 이후의 농촌 현실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농촌의 피해가 가슴 아플 지경인데 FTA가 발효되면 더욱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장관으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방금 장관도 말했듯이 농촌의 침체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의미 그 이상의 박탈감을 안겨 줄 것이다.

농민이 자신감을 갖고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까지 농림예산을 20조4천억원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중장기 투융자 계획'도 당초 119조3천억원에서 123조2천억원으로 늘렸다.

우선 축산과 원예 등 개방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겠다. 농촌진흥청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 곡물과 원예작물 33가지를 개발해 중자 증식과정에 들어갔다. 옛기름을 만드는 보라색 보리(식혜가 보라색이 된다), 껌질째 먹는 배, 항암효과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성 보리, 화병에 꽃으면 수명이 세 배나 길어지는 장미, 연두색 신비디움 등 새로운 품종들이 개방 파고를 이겨낼 것이다.

얼마 전 농림부에서 영화 '식객'을 상영했다고 들었다. '식객'에 나오는 훌륭한 요리들을 세계시장에 내다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장관은 과기부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내면서 국가 R&D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림 부분에도 R&D를 도입할 건가? 연간 100조원 규모인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던데?

식품산업은 향후 농업의 핵심 수요처다. 미래 농업발전의 성패가 식품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대외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자 식생활 변화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최상의 방법이 외식과 가공 등 식품산업을 통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마련 중이다. '식품산업 육성 종합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농림 R&D는 식품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다. BT·NT·IT 등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 친환경기술 개발, 재배기술 개발을 두루 강화할 것이다.



내년부터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한식 세계화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에서 영화 '식객'을 상영한 것도, 주인공들을 홍보 도우미로 삼은 것도 세계적으로 탁월한 우리 음식에 대한 홍보 전략 마련을 위해서다. FTA로 농식품 수입이 늘겠지만 기술 집약적인 화훼·특수작물 등은 거꾸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얼마나 되나?

2002년 16억달러이던 것이 작년엔 23억 달러가 됐고 2025년엔 100억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유망 30대 농산물'을 지정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다. 노인들만 남은 들판은 쓸쓸하다 못해 우울할 정도다. 장관의 계획대로라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현재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3%가 채 안된다. 농촌을 문화 낙후지역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발전전략을 세우고 전원마을

을 조성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창업 교육을 늘리고 젊은 후계 인력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농촌의 고가나 폐교를 전통 음식, 놀이, 세시 풍속을 전승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산도 마련해뒀다. 앞으로는 농촌이 활기를 되찾아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뼈가 섞인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말한 적이 있나? 신문마다 농림부장관이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 육류협회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공격이 난무하더라.

정말 기가 막힌다. 기자들이 앞뒤 말을 잘라먹고 교묘하게 공격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쇠고기 수입 위험을 평가하는 8단계 절차가 있다. 지금 5단계를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현저한 위험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왜곡 보도한 것이다. 양쪽이 팽팽한 줄다리를 벌이고 있고 단 한 차례도 줄속으로 협상한 적이 없다.

수출국과 잔류물질 검사 기준 등 동물·축산물 수입에 관한 구체적 위생 조건을 상호 협의하는 6단계는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다. 세계 116개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

는데 20개월 미만의 소를 사는 건 일본뿐이고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소를 사오기로 돼 있다.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걸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지난번 방북에서 남북합작 비료공장을 짓자고 제안했나?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 그쪽 농업관계자들과 만찬장에서 얘기하던 중에 비료와 농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술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정도다.

농업인 신문고란 것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농촌문제에 언제나 귀를 열어놓고 발 빠르게 해답을 찾으려 한다.

아침을 뭘 먹나?

하하. 꼬박꼬박 밥을 먹지 먹진 뭘 먹겠나.

그는 정부 내의 입장 차를 조율하는 데 능숙한 조정의 달인이다. 설득력과 대화술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비결을 물었더니 대답은 간결하다. 자기 입장을 고집하지 않기, 무조건 상대방 말을 들어주기!

근무시간 이후 전 직원이 모여 백주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호프 데이'는 농림부의 새 풍속도다. 그런 자리에서 직원들 이야기를 들을 때 임 장관이 애용하는 건배사가 있다. "당신 멋져"인데 풀이가 더 멋지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때로져 주면서!"

이화여대 교직원인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만 둘. 별명은 불도저. 아닌 게 아니라 추진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발이 넓어, 장관된 지 석 달 만에 벌써 웬만한 농촌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다. 임 장관이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촌에 웃음과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천번만번 기대한다. ■

글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사진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사진작가

오동명 이 바라본 세상



삶이 보이는 창

# 남대문시장



9 층 건물 옥상에서 남대문시장을 내려다보자니 연못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상점이나 노점에 진열된 상품들은 먹이가 되고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된다. 연못보다 그 흐름이 더 화려하고 다양하지만 그 율동은 더 단조롭고도 획일적이다. 마치 새가 된 양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다가 9층에서 내려와 그 시장의 균중 속에 파묻혀 본다.

새벽 2시나 오후 5시나 오로지 사는(生) 것, 특히 버는(賣) 것만을 좇는 이들의 얼굴엔 표정이 없다. 그렇다고 딱히 무표정이라 할 수도 없다. 표정은 있으되 한 가지로 집중한다. 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자들, 짐이 더 무거워야 즐거운 이들은 오늘도 짐이 가벼우니 즐겁지가 않다.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꽤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지방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몸피만 크면 뭐합니까!”

부피만 컸지 실속은 없다는 말로 들려온다. 얼굴을 찌뿌리며 발걸음을 쟀다. 무거워서가 아니라 힘겨워서다. 이것을 우리 삶이라고 부르는가?

1997년 IMF 이후 10년 내내 내리막길이라는, 남대문시장 30년 짐꾼의 말문은 거침없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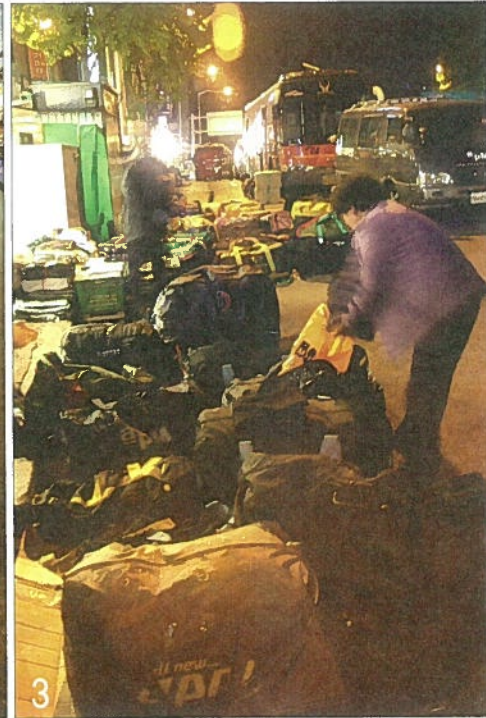
“웬만한 건 인터넷이나 대형할인점에서 모두 사니 남대문시장까지 걸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거기다가 가겟세까지 올리니 가격으로 경쟁이 되어야지. 이러니 더 죽을 쓸 수밖에. 내년엔 그래도 지금이 낫다고들 할 거유. 작년도 재작년도 그랬듯이 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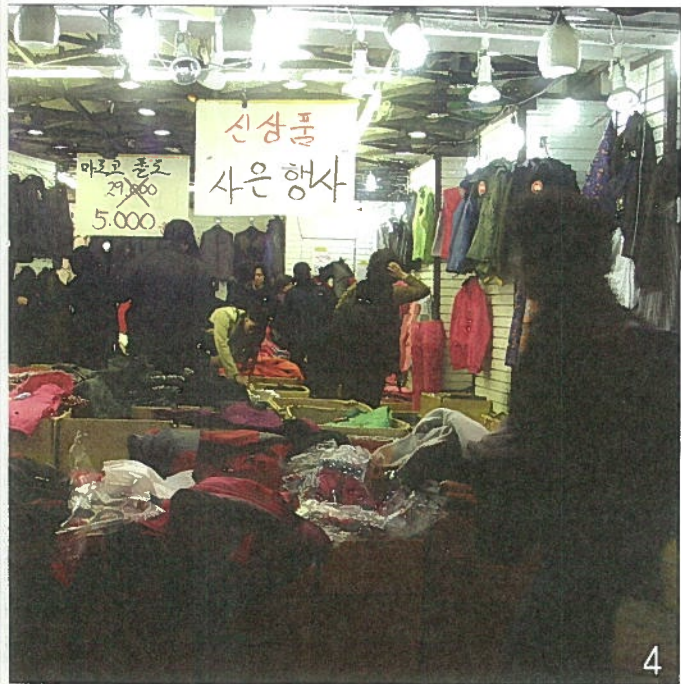
유난히 졸고 있는 상인들이 자주 눈이 땀다.

“그럴 수밖에, 그전엔 3교대로 하던 일을 종일 혼자 다 해야 하니 몸이 어디 견디겠냐구!”

방금 잠에서 깬 얼굴을 하고 있는 상인은 그나마 자리라도 지키고 있어야 빠듯하게 먹고 살 수 있다 했다. 남대문시장에 활기가 없다. ‘골라 골라’ 그 요란한 호객도 거의 들리질 않는다. 들려도 그전 같이 듣는 재미가 없다. 신명나질 않아서일 게다. 남대문시장이 이렇거늘 다른 재래시장은 말해 무엇하랴.

남대문시장이 활기를 되찾게 하는 일, 결국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은 국민의 삶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닐까? 대안 없는 문제의식만 키우며 남대문시장에서 꼬박 하루를 지내야 했다. 남대문시장은 삶이 보이는 창이다. 남대문시장엔 의자가 없다. 의자를 대신하는 곳이 식당인데 식당이 아니어서는 쉴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무척 불편함을 느꼈고 불쾌감마저 들었다. 물건을 팔려고만 했지 손님을 맞이하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의자 부재의 남대문시장으로는 고객을 끌어들이 수 없다. 이걸 단지 의자 하나만 두고 하는 말은 아니





4



5



6

다. 손님에게 의자조차 배려하지 못하는 남대문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값을 물어보고 흥정하다 발을 돌리는 사람에게 으레 욕을 퍼붓는다. 욕은 아니어도 쌍스러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 남대문시장 상인의 다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그렇다. 경기침체, 또는 인터넷이나 대형할인점에 손님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긴 하지만 고객을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 ●●● 남대문시장 즐기기

남대문시장은 대체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까지, 주로 지방상인을 상대하는 도매의류상가가 문을 연다. 일반인을 상대하는 상점들은 오전 8시쯤 문을 열기 시작하고 노점상은 오후 4시가 넘어야 거리에 거의 찬다.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상점들도 간혹 있기는 하다. ■



7

### ▶ 사진설명

1. 이색복장을 한 호객군
2. 짐꾼들은 늘고 일은 줄고
3. 새벽기차로 올라온 지방상인들
4. 매일 파격세일, 비싸도 5천원
5. 목걸이 5만개, 귀걸이 10만개 액세서리 상가
6. 한국식 노상 카페, 앳을 의자 품귀인 남대문 시장
7. 환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연인들



오/동/명

경희대 경제학과  
'문화설계', '아빠의 선물' 대표  
각종 잡지에 사진칼럼 연재 중

» 의료기기 표준화

# 빨리 표준화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기가 국제화된 규격을 갖춰야 한다. 이에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표준 정비체제를 만들어 우리 기술의 세계화를 서둘러야 한다.



김현일  
기술표준원  
신산업기술표준부장  
(hikim@kats.go.kr)

**의**료기기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고품질 제품을 원하는 소품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의 디지털화, IT 발달로 인한 원격진료(Telemedicine) 활성화, 마이크로 로봇의 발달, 나노기술·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품종화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수요자인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의료기기의 품질평가 혁신을 위한 지원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혁신적인 품질평가를 위해서는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한·미 FTA에서도 기술표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개발·제조·허가·시판에 필요한 성능평가 및

기술기준이 국제 규격과 일치되는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 의료기기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의료기기 제조는 신소재·메카트로닉스·IT·BT·NT 등의 다양한 요소 기술이 임상 의학과 융합·복합되어 발전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형 분야로서 궁극적으로는 신뢰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산업이다.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에는 2천16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5.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의료기기 생산현황'은 미국 775억달러, 일본 152억달러, 독일 150억달러, 영국 48억달러로 미국이 전체 의료기기 세계 생산 규모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수출에 있어서도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독일·일본 등이 뒤따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 8억달러, 수입 12억달러, 수출은 5억달러로 국내 시장

규모가 늘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04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는 '00년에 비해 2.8배 증가하여 1,668개에 달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8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급속히 발전했다. 그러나 '04년 의료기기 제조업 GDP 대비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0.76%로 미미한 실정이다.

### 국내 의료기기산업 4년 새 2.8배 증가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적인 공적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n,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가지고 있고, 선진국들이 모여서 만든 의료기기관리국제정합화기구(GHTF :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에서 40여종의 관련 규격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규격을 개발하여 보급중에 있다. ISO는 외과용 이식재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12개의 기술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에서 775종의 표준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자의료기기와 초음파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IEC는 2개의 TC에서 160여개의 표준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기타 유럽표준(EN : European Standard)은 4개 분류 276종의 규격이 있다. 미국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 Committee F04의 35개 소위원회에서 의료용 소재에 대한 물성·조성·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표준을 제정·운영한다. 선진의료기기협회(AAMI :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는 251개 TC 및 작업반에서 130개 이상의 규격·규정·기술 정보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표준협회(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분야 표준화 현황은 기술 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규격

〈표 1〉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64	1,856	1,952	2,054	2,161

자료 :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 Book 2006



2004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는 1,668개에 달한다. 시장규모는 생산 8억달러, 수입 12억달러, 수출 5억달러로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진)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전을 찾은 관계자들이 의료기기들을 직접 조작해 보고 있다.

(KS) 671종과 식약청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114종의 기술 기준이 있으며, 기술표준원에서 국제규격과 일치시키기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국내 부처로는 기술표준원을 비롯해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식약청 등으로 표준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 의료기기 표준화·세계화 시급해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개발·표준화 기반 구축을 위한 각 부처 및 표준 수요자간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도 부족하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영세

하여 ISO·IEC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적고, 표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성능평가 표준개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국내·국제 표준개발 수요가 빈곤한 상황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신뢰도 향상을 위한 표준 품질관리 체계도 부족하여 국산 의료기기는 의료계와 국민의 불신을 받고 판매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분야의 표준화를 확대하여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의료기기 국가표준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가표준 정비체제를 확립하여 우리 기술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표준화를 통해 의료기기 품질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장 및 기술 트렌드에 따른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의료기기 표준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활성화시키고, 의료 관련 이해 당사자 및 수요자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기 관련 업체의 국내·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신수요 분야 표준을 발굴하여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전통의학과 관련된 의료기기의 표준을 개발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고 우리 제품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넷째로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국제적 품질관리에 의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각 규제 부처의 기술 기준과 조화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구해야 한다.

의료기기 산업이 바이오 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며, 다품종 고부가가치 업종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의 안정·성능 평가를 위한 표준개발과 표준정책 수립에 힘써야 할 때다. ■

〈표 2〉 의료기기 제조업 현황

(단위: 억원, %)

	국내총생산 (GDP)	제조업 GDP	의료기기 등 총생산	GDP 대비	제조업 GDP 대비	제조허가 업체수
2000년	5,786,645	1,512,430	8,724	0.15	0.58	595
2001년	6,221,226	1,517,660	11,941	0.19	0.79	1,025
2002년	6,842,635	1,619,520	13,481	0.20	0.83	1,177
2003년	7,213,459	1,691,138	13,256	0.18	0.78	1,446
2004년	7,784,446	1,988,632	15,083	0.19	0.76	1,668

자료: 의료기기산업협회

»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08~'12)

# 한국의 퀴리부인과 아인슈타인을 기다린다

과학영재 육성정책은 교육기관과 대상자 규모를 키우고  
우수인력 조기 발굴·지원기반을 구축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필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정  
(pph@most.go.kr)

**지**식 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과 그 기술을 익힌 핵심인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질과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역행 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던 '70년대와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개량하여 내부 역량으로 승화시킨 '80~'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들어 일부 부문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선두권을 유지하는 세계 기술혁신의 프론티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인력은 과거의 신속한 학습·인지 능력을 갖춘 인재가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해답을 찾아 가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혁신 인재

이다. 선진국들이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유연한 제도운영을 통해 과학영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는 학습·인지능력 아닌 창의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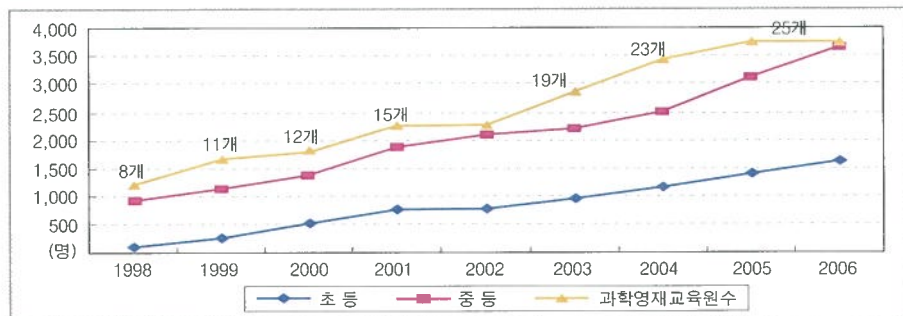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미래 핵심 과학기술인력인 과학영재의 발굴·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으로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08~'12)'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최초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으로, 향후 5년간의 과학영재 발굴·육성의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어 교육단계에서 퇴직단계에 이르는 전(全)주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교육은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 지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지정·운영('98년~),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정·운영 및 과학고 영재교육 지원('03년~), 대통령과학장학생제도 시행('03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과학신통 프로그램('06년~) 등을 시작했다. 이로써 과학영재들이 특화된 과학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교육의 수혜 대상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왔다.

〈그림 1〉 전주기적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

초등 3년 이하	중학생 이하	고등학생	대학·대학원생
과학신통 프로그램('06~)	과학영재교육원 ('98~, 25개) ※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원(208개)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정·운영('03~) 과학고 영재교육 지원('03~, 19개)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03~) 대학원연구장학생 제도('03~)

〈그림 2〉 과학영재교육 수혜자 현황



**[비전] 과학영재 발굴·육성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차세대 핵심 리더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목표] 2012년까지 학년별 평균 상위**

0.7%의 과학영재에게 학교급별·수준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지금까지 정부의 과학영재 육성정책이 교육기관과 대상자 규모를 키우고 우수인력 조기 발굴·지원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5년간은 그간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선도과학자 또는 미래 핵심 연구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특별 관리한다.

**전략2. 과학영재 교육기관 특성화**

현재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운영중인 과학영재교육원은 시·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과 교육대상 및 교육방식을 차별화하여 국가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수준과 관심영역에 따라 특성화된 과학영재교육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학영재교육원은 대학의 연구·실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학생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저변확대와 심화교육에 대한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사과정(Mentorship Program)의 경우 학생 개인별 능력과 관심을 고려하여 학생 주도의 연구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사사과정'의 교육비율을 현재의 12%에서 20%까지 확대하며,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적용하여 과학영재교육의 총체적인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고등학교급 과학영재교육 혁신의 시범기관인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에 대해서는 창의성 계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과학고로 확산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그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개교 이후

지난 7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제15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서 초등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주력할 방침이다.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 계획에 반영된 중점 추진전략별 주요 추진 방향을 살펴보자.

**전략1.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

과학영재교육의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관계 부처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국가차원의 과학

**영재교육을 체계화**

국가 과학영재 교육대상의 범위는, 학년별 약 0.3~1.3%(평균 약 0.7%)로 하되 교육 기관별로 특성화된 영재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실험·탐구 위주 프로그램(도전·창의, 심화)은 과학

기술부에서, 영재교육 기회와 저변확대 차원의 기초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이공계박사 수요의 상위 약 10%에 드는 신규 과학영재(5~600명)에게는 창의적이고 도

<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방식 및 지원 규모

	프로그램 방식	학년별 대상 비율
도전·창의 프로그램	• 창의적 잠재역량 개발 극대화를 위한 실험·탐구 위주 영재교육 제공 • 국가차원 집중관리	상위 0.1% 이내
심화 프로그램	• 과학·수학 분야 별도 교육 지원 • 실험·탐구 위주 과학영재교육 기반확충	상위 0.3% 이내
기초 프로그램	• 영재교육 기회제공	상위 1~1.3% 이내

\* 과학영재교육 대상자 상세목표(2012년, 학년당) : 초등학생(4~6, 약 8,100명(1.3%), 중학생(약 6,300명(약 1%)), 고등학생 이상(약 2,100명(약 0.3%))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운영체제 개선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과학고등학교의 영재학교 전환 등 과학영재학교의 확대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보 가능성, 실질적인 실험·탐구 위주의 과학영재교육과 대학입시 제도와의 연계문제, 한국과학영재학교 운영체제 개편방향 등 국가의 전반적인 과학영재교육 여건과 인프라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전략3.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 효율화

과학영재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해 영재성 발현을 위한 지속적 자극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 구축

과학신동 프로그램은 지역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적극 활용하여 후보를 선발하고 이들을 장기 관찰하여 최종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종전 일괄선발에 따

른 저연령 아동의 정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소속 대학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 강점교과 또는 교육단계를 특화하는 등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별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교과목별 책임교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지원주체(과학기술부)와 학교운영 지원주체(부산시 교육청)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관리·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KAIST와 포항공대와의 협약을 통해 졸업생을 특례입학시키는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대학입학에 필요한 학업성취 기준을 개발하여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실험·연구과제(R&E) 사업은 수요증가를 고려(현재 과학고 학생 중 약 13% 참여)하여 기존 대학교수 중심에서 학생·교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제당 연구비

지원규모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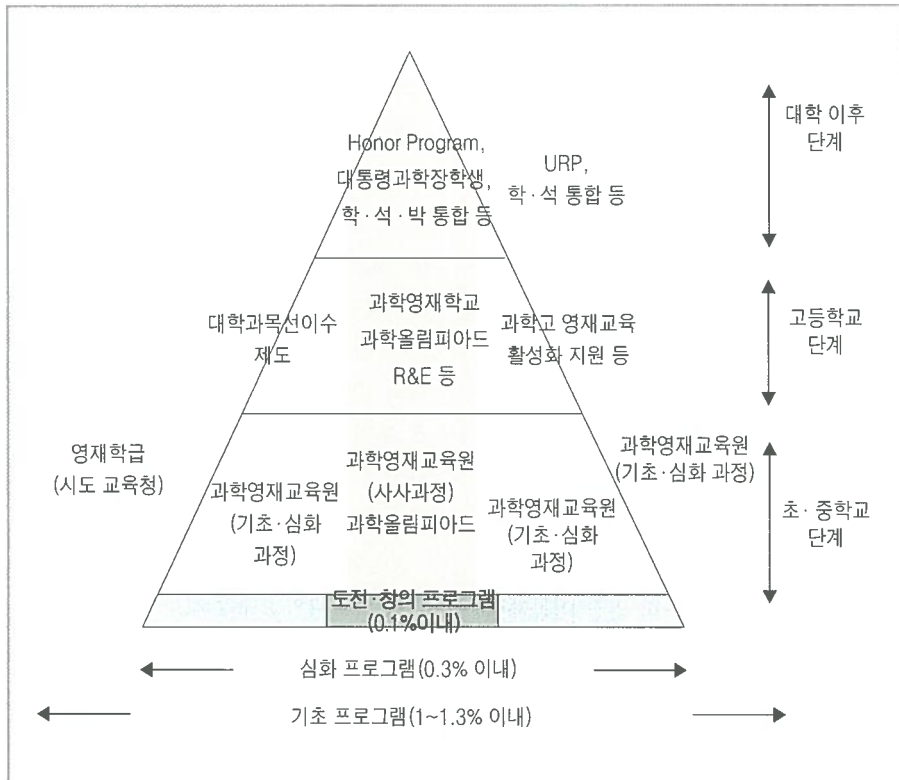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과 기초과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올림피아드가 상급 학교 진학 및 의대 입학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폐해를 감안하여 정부의 지원방향을 경시대회에서 과학캠프 등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험·토론 위주의 요소를 강조할 계획이다. 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가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병역 이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간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 과학영재교육의 연속성 문제가 지적되어온 대학단계에는 Honor Program(우수학생 대상의 도전적이고 차별화된 심화교육 과정),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등 도전적인 연구·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대학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전략4. 과학영재 교육인프라의 확충

과학영재교육의 체계화, 고급화를 위해 교육관련 정보관리, 국제협력 등 교육인프라 확충을 추진

과학영재교육 수혜자 현황과 진로정보, 교육자료 등에 대한 통합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수립의 신뢰성을 높이고, KAIST 과학영재 교육연구원은 국가 과학영재교육의 싱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과학영재교육 수혜자들은 이공계 분야로 진출할 것을 권하고 예비 핵심 연구인력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그림 3〉 새로운 국가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





# 통계를 알면 대박을 낚는다

쥐를 잡아 꼬리를 학교에 가지고 가  
공책과 연필을 받았던 기억이 있  
다. 1960~70년대 모든 언론에서는 쥐를  
몇천만 마리 잡았다는 통계를 정기적으  
로 발표했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접한  
대표적인 통계가 쥐잡기 통계와 농산물  
수확량 통계였다.

신문을 펼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통  
계. 우리는 과연 통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통계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정설은 그렇다이다. 통계표를  
보고 뭔가 의미를 어렵듯이 알고 아이디  
어를 얻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할 가능  
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에서 국가통계를 활용해  
성공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 발표가 있

었다.

국가통계를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로 독  
신가구 증가 통계를 활용한 벤츠의 소형  
차 개발, 인구통계를 활용한 미국 시어스  
의 생활용품 판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과 음주율 증가 추이를 적용한 두산BG의  
저알코올 상품 개발, 인구통계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등이 소개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처음처럼(소  
주)'이다. 국민음주현황, 경제활동인구,  
인구통계 등을 활용해 빠른 속도로 고령  
화로 접어들고 있는 현상을 파악한 두산  
BG는 30~40대를 사로잡으면 50대 이  
상의 소비자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  
해 이 제품을 기획했다고 한다. 술을 자  
주 마시는 40대 공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음주율 증가('95년 15.3%에서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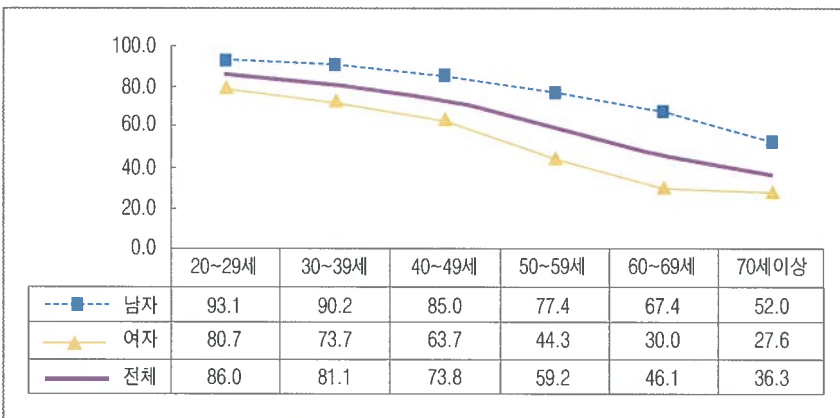
년 32.7%로 급증), 생활패턴의 다양화 등  
을 감안해 숙취 부담은 줄이면서 부드럽  
게 마실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했  
다. 결과는 제품 출시 5개월 만에 1억병  
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로 이어져 회  
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우리가 무심코 접하는 통계들이 기업에  
서는 제품개발·마케팅·유통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통계를 잘 활용한 기업  
은 막대한 이윤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통계에는 많  
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해 세계경제의 모습  
과 우리의 경제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  
인가에 대한 '경제게임' 내용이 소개된  
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게임의 기본틀은  
통계로, 통계의 종합예술 작품은 '경기전  
망'이라는 계량화된 결과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소비생활  
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짐작  
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는 관련통계  
를 적극 활용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  
해야 한다. ■

<그림> 성별·연령별 음주율



자료 :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표> 연도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통계청)

(단위 : %)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39.2	42.8	47.0	48.8	50.1



윤철환  
KDI 경제정보센터  
책임전문원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 마련

# 유류세 Down보다 에너지 소비 Down을

연료비 부담이 적은 LPG 경차의 보급이 올해 안에 허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절 설치 자금 용자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취급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다.



이명순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gallopx@mole.go.kr)

**국** 제 유가가 크게 상승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도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배럴당 8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13일 발표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이 그것이다.

정부의 고유가 대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중국 등 신흥 개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유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OPEC(석유수출국기구)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은 석유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

### 석유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제자리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과 처방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는 대신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개

선,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 투명화 등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유가상승이 기업의 수익성과 가계수지를 악화시키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경제의 규모와 소득이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어 아직까지는 견딜만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욱 오를 우려가 있고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각종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먼저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석유제품 가격조사제도 개편,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시스템 구축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 투명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연료비 부담이 적은 LPG 경차의 보급이 올해 안에 허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회사의 준비를 거쳐 2009년부터 차량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민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은 보다 싼 차량을 적은 연료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용자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취급 금리도 인하(1.5% 인하)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

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율리 국내 석유제품의 공급자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부대책을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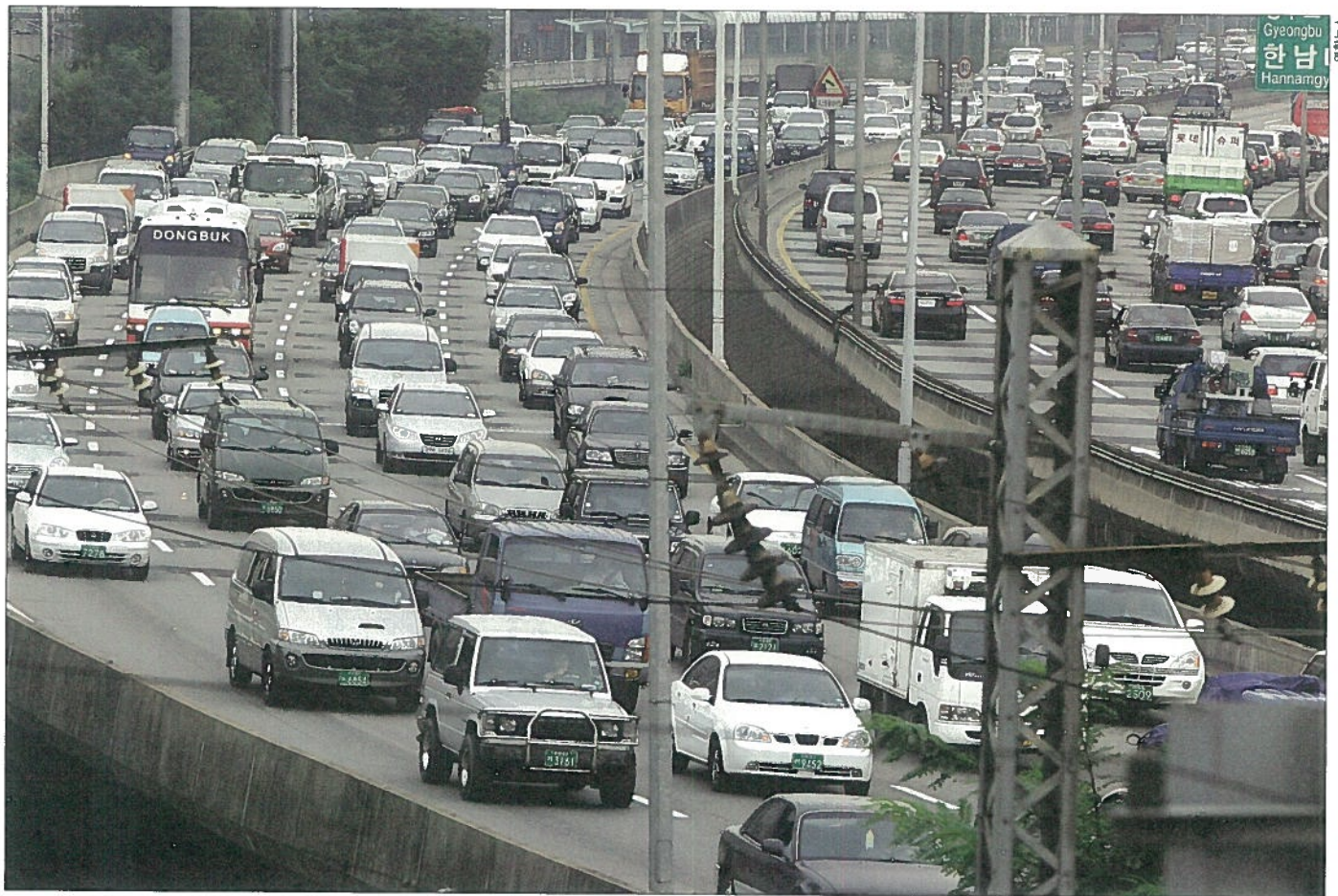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세금을 낮추어 기름값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은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올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세금을 내린다고 해서 휘발유·경유값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국내 석유제품은 가격 결정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흡수되어 버릴 수도 있다. '99년 5월 유류세를 51원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원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험도 있다.

또한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소비량에 비례하여 혜택이 늘어나므로 대형 승용차를 운행하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경제 전반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기름을 쓰는 만큼 치러야 하는 비용도 늘어난다. 세금을 깎아서 유류 소비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면 우리 모두가 부담하는 비용은 결국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낮춰 휘발유 가격이 10% 내렸다고 하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을 10% 내리면 소비는 5.7%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중 휘발유 소비량이 약 6천만 배럴이므로 휘발유 소비는 약 350만 배럴 증가하고 이것을 충당하려면 약 4,200만 배럴의 원유를 더 수입해 와야 한다. 개개인이 지불하는 휘발유 가격이 조금 내린 대신, 나라 전체로는 36억불의 경상수지 악화 요인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부담이 된다.



휘발유 가격을 10% 내리면 소비는 5.7% 늘어난다.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 정체되고 있는 서울 강변북로

### 서민·영세자영업자·농어민에게 직접 지원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도 있다. 서민·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농어민들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초점을 이러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두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겨울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지급한다. 통계청의 가계수지통계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이 고유가로 인해 최근 2년간 13만8천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난방비 7만원을 지급하면 유류

비 부담 증가분의 절반 수준을 보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상승을 반영하여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중 수도·광열비 항목을 월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증액 지급할 계획이다.

서민·저소득층 가계가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겨울 3개월 동안 교통·특소세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특별소비세를 최대한 인하(30%)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난방용 유류로 가장 많이 쓰이는 등유의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특소세 인하에 더해 탄력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최대 110원 가량의 등유가격 인하가 가능하다. 약 400만의 등유 사용가구는 연 7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가장의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에 생계·주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체납된 전기요금(가구당 50만원 한도)과 난방비(월 6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을 150% 이내인 6만 가구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금액도 월 6만6천원으로 올린다.

생업을 위해 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유가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립시 영세자영업자에 대

<표> 소득 대비 광열·교통비 지출 추이

	'97~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분위	15.3	14.8	15.8	15.0	15.7	15.2	14.9
5분위	8.5	8.1	7.4	8.0	7.8	7.7	8.3

주 : 1분위는 전체소득자 중 하위 20%, 5분위는 전체소득자 중 상위 20%를 말함.

한 유류비 부담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이미 확정된 바 있다. 유류비 부담이 큰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은 내년 5월에 있을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적용을 통해 사업자당 약 15만원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소유의 화물차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사업자당 평균 4만원 감면될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최근 2년간 유류비 부담 증가액이 약 4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단순경비율 인상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통해 이 중 절반이 보전될 것이다.

### 지방중소도시에도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시설난방용 유류 사용이 많은 시설·원에 농가의 경우에도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최근 2년간 약 17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부정유통문제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던 농업용 면세유를 실수요량에 맞게 충분히 공급하고, 지자체의 시설·원에농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토록 유도한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선택, 작물별 적정온도 관리 등 에너지 절약형 재배·관리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근해어업가구도 어선용 유류비 부담 증가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협 유류 공급업무와 관련해 부과되는 유류취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연·근해어업 선박 관리를 위한 감척사업을 확대하여 유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보일러 교체와 간이난방시설 보급 등을 위해 2011년까지 약 10만호에 총 4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약



서울 명동거리에서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에너지절약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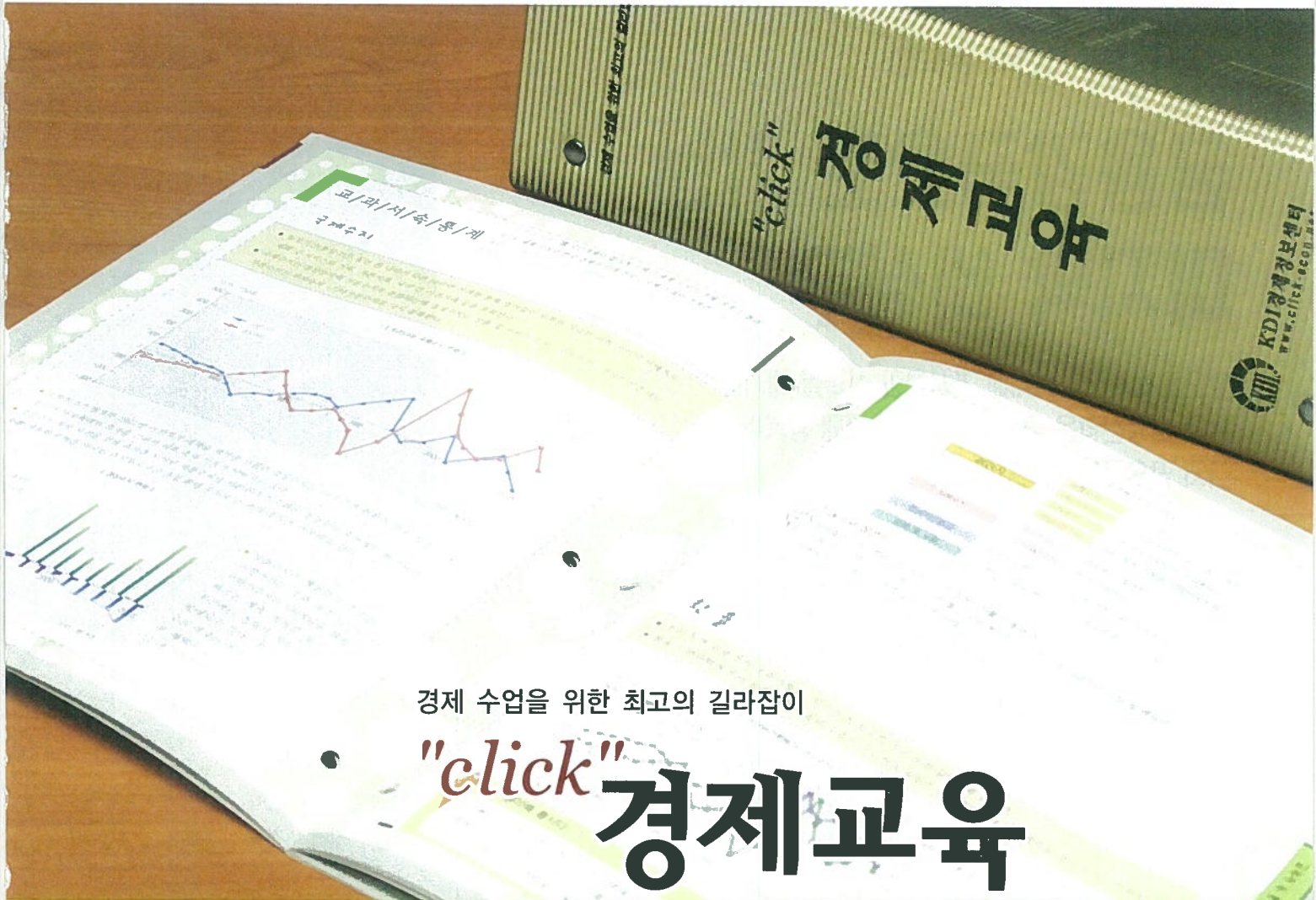
6만호에 대해서는 내년중 약 190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배관망 시설설치에 대한 용자사업을 확대하여 지방중소도시까지 저렴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예상되는 총 지원효과는 1조4,0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서민·영세자영업자·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1조775억원,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이 3,247억원이다.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고유가 시대에 근본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에너지 절감과 효율 개선 등 시장원리로 대처해 나가자는 것이 그 하나다. 그리고 유가상승 부담을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사회적 배려라는 것이 나머지 하나다.

정부는 새로운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업, 가계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우리 모두가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경제 수업을 위한 최고의 길라잡이

# "click" 경제교육

선생님들의 경제수업을 도와드립니다

- ☑ 경제기초개념 경제 관련 기초개념을 그림 형식을 빌려 시각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 교과서 속 통계 주요 학습 통계에 관한 용어 해설, 추이 분석 등을 담았습니다.
- ☑ 시사경제 해설 경제기사 속의 경제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합니다.
- ☑ 경제 글 쓰기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제개념이나 이론을 글쓰기 사례를 통해 지도합니다.
- ☑ "질문있어요"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경제 관련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 원하시는 곳에서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가 절약됩니다.
  - 고급 바인더를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25,000원 2년 45,000원
- 구독문의 KDI 경제정보센터 "click" 경제교육 편집실  
전화 : (02) 958-4623 e-mail : jungja@kdi.re.kr

»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 금융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앞으로 3~5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경쟁에서 도태돼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은  
그저 꿈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도규상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장  
(dohks@fsc.go.kr)

**최** 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부쩍 늘어났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은 2007년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G7'의

프랑스·캐나다나 아시아 주요 경제강국인 홍콩·중국 등을 제치고 전체 131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는 저서 '미래의 물결(Une breve histoire de l'avenir)'에서 2025년 무렵 'Eleven'이라 불리는 11대 강국이 급부상하는데, 한국이 'Eleven' 중에서도 강국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새로운 성장동력은 금융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만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4만달러 강국의 반열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반도체·조선·철강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견인차였듯, 국민소득 3~4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을 손꼽고 있다.

반면 우리의 금융 부문 현실은 어떤가? 그동안의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과당경쟁에 따른 쏠림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 금융회사들은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에 비해 규모나 수익다각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성이나 국제화 수준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밖으로 시각을 돌려보자. 현재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짧으면 3년, 길게 봐야 5년 이내에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국제경쟁에서 도태되어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은 그저 꿈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원칙 중심, 인허가 간소화, 창구 일원화

무엇보다 명확한 비전에 기반한 실천 가능한 종합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번에 금감위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100대 과제'이다. 이 로드맵은 금감위·금감원의 모든 구성원과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와 같은 정책수요자는 물론 외부 민간전문가 그룹의 고민과 지혜가 집결된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드맵은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 비전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①금융감독 패러다임의 전환 ②정책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③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④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⑤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 위상 재정립이라는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추진할 12개 부문 100대 추진과제와 30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 추진과제들은 ①정보화 ②국제화 ③전문성 ④청렴성의 4대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추진과제를 살펴보자.

먼저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이다. 즉, 종전 규정 중심(rules-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s-based)으로, 업권별 칸막이식 감독에서 기능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허가 등록업무의 접수창구 일원화, 감독기구·금융회사간 접촉창구 일원화, 불필요한 업무보고서 폐지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획기적



연말뉴스

외부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감독기구 임직원의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감원 예결산 심의과정에 금융회사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획기적인 자정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주저하지 말자

향후 반기별로 추진 상황을 30개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의해 점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의 성패는 국민들의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 여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민

전문가들은 국민소득 3~4만달러 달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꼽고 있다. (사진)지난 10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7 제3차 금융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검사 방식의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서면검사 방식으로 대체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영업행위 및 해외진출 관련 규제들도 대폭 철폐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센터, 즉 금융 KOTRA로 개편하는 등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자율성 확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기울일 생각이다. 일례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당해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최적권유제도(Best Advice)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망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성패는 금융감독기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전문성·정보화 역량 강화는 물론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 만족도·인허가만족도·검사수용도·청렴도 등 4대 고객 만족도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는 '좋은 기회도 주저하면 그 가망이 매우 희박해진다(Advantage feeds him fat while men delay)'라는 문구가 나온다. 전세계적인 치열한 금융허브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저할 경우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꿈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갖고 실천해 나간다면 이를 수 있다. 혹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여건이 금융강국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냉엄한 국제경쟁현실을 직시하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바로 시작하면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

.....  
경제정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잡지!

나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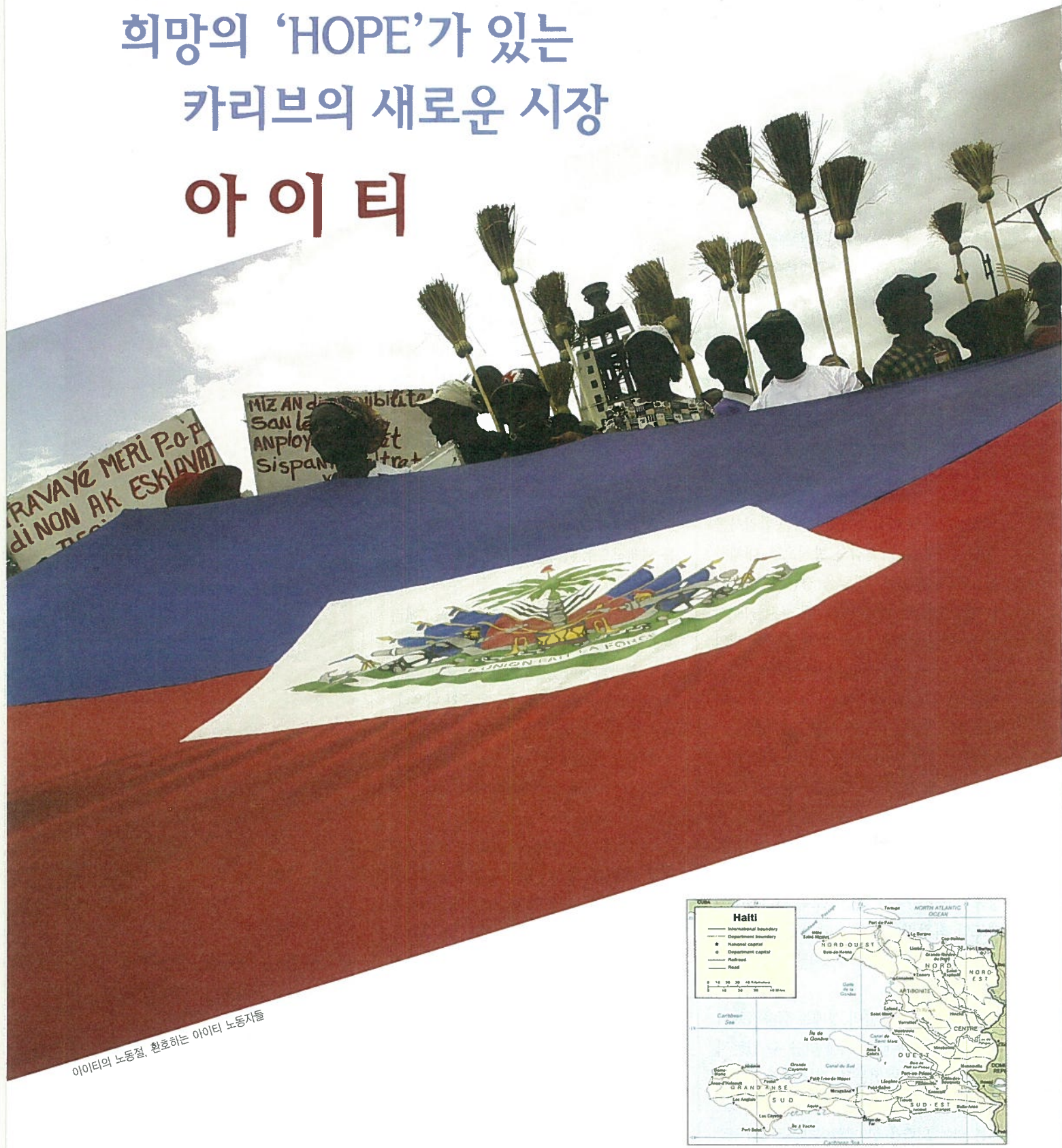
<http://nara.kdi.re.kr>

Haiti



해/외/시/장/리/포/트

# 희망의 'HOPE'가 있는 카리브의 새로운 시장 아이티



TRAVAYÈ MERI PO-P  
di NON AK ESKLAVAT

MIZAN d'...  
San la...  
ANPLOY...  
Sispan...  
Sispan...



아이티의 노동절, 환호하는 아이티 노동자들



‘아’이 티는 더 이상 실패국이 아니다’ 지난 9월26일 UN 총회 연설에서 르네 프레발(Rene Preval) 아이티 대통령은 아이티가 이제는 더 이상 실패국가가 아님을 천명했다.

### 실패국에서 희망국으로

아이티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유엔 평화유지군(Minustah)의 치안확보 및 정국 안정 등을 바탕으로 한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7년에는 GDP가 55억달러로 2003년에 비해 약 두 배 수준으로 꺾충 뛰어올랐다. 인플레이션은 오랫동안 고공행진하다 2007년에 한 자릿수 시대를 맞이했다. 교역량도 꾸준히 늘어 2006년부터는 20억달러 대로 진입했고 1억달러를 밑돌던 외환보유고도 3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제반 경제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아이티는 의류봉제분야 중남미 해외투자진출 적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對아이티 무역특혜법안(HOPE법안 : Haitian Hemispheric Opportunity through Partnership Encouragement Act, 파트너십 촉진을 통한 아이티 반구기회법안, 이하 HOPE) 발효 때문이다. 올 1/4분기까지만 해도 아이티의 의류봉제산업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HOPE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2/4분기에는 중미 카리브해 주변 경쟁국들을 제치고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해 최대의 외화획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희망(Hope)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HOPE법은 미국이 이미 카리브해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특혜법(CBI : Caribbean Basin Initiative)에 추가해 대미 의류시장 진입 시 무관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아이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의 정책적 수단으로 구사되고 있다.

이 인센티브는 대미 의류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남미에 의류 봉제업으로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對아이티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티의 인건비는 여타 중남미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어서 HOPE 법안의 발효가 고임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에 새로운 대안

### 투자진출, 의류봉제업이 유망

아이티는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 1/8 크기의 소국이지만 인구가 950만명에 달한다. 실업률이 높아 노동력이 풍부한데, 인건비가 여타 중남미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노동집약산업인 의류봉제업 투자진출이 유망하다. 1인당



UN 평화유지군의 활약으로 치안이 개선된 아이티

“

아이티는 희망 HOPE법의 발효로, 對미 의류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남미에 의류 봉제업으로 투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아이티는 매력적인 국가이다.

”

으로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개사에 불과하던 아이티 투자 진출 한국기업이 올 연말에는 10개사에 이를 전망이며,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GNI)이 5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의류봉제공장의 월평균 급여(산재보험 등 부가급여(Fringe Benefit) 및 연말 법정 상여금 150% 포함)가 110달러 선으로 인근의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과테말라 등의 약 1/3~1/4 수준이다.

한편, 2001년 아리스티드(Aristide)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반정부시위와 폭력사태가 확산되자 2004년 2월 대통령이 사임했고, UN 안보리의 평화유지군(아이티 안정화군 / Minustah) 파병 결의에 따라 2004년 6월 평화유지군이 파병돼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다. 그동안 치안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외국인들의 對아이티 투자 진출 확대에 일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비오는 거리를 걷고 있는 소년. 인구 950만명의 아이티는 최근 경제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공장 종업원이 대부분 크레올(Creole,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 간에 상인 등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언어(피진)가 그 사용자들의 자손에 의하여 모국어화 된 언어를(말함)어를 쓰고 있어 투자진출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중남미 최빈국, 무장세력 간의 유혈사태 등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한 나라로 알려졌었던 아이티 공화국은 미국과 EU 등 세계 각국의 원조 및 IMF(국제통화기금)와 IDB(미주개발기구), IBRD(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등에 힘입어 국가재건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아이티 시장에 관심을 가져 볼만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이티 투자의 이유를 뒷받침 하는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본다.

첫째, 아이티 인구는 2006년 IMF 추정치에 의하면 950만명으로 천만 명에 육박하는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둘째, 아이티의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자금이 대거 유입될 뿐만 아니라 해외 이민자들로 부터의 본국 송금이 늘어나 아이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확대 추세에 있다.

셋째, 1990년대 중반 무역자유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최고 수입관세율이 50%에서 15%로 대폭 낮춰진데다 국내 제조기업이 취약해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수입수요가 의외로 크다.

넷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자재 공급 등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열리고 있다.

다섯째, 물자가 워낙 부족하다보니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시장지배구조가 워낙 단순해서 소수 몇몇 기업이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간단한 소개서 붙여 유리, 거래에는 인내심 필요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이 지난 9월 아이티에서 개최한 수출대행 상담회에는 아이티 바이어 30여개사가 참가했는데, 한국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열기가 높았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애로가 많았는데, 바이어들은 영어나 스페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반면, 전화를 받는 비서들은 영어가 안 돼 바이어들과 연결되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바이어를 바꿔달라는 정도의 붙여 표현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아이티 바이어들의 對한국 교역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이티 기업들의 일처리 속도는 매우 느려 거래 성사까지는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아이티는 최빈국 범주로 분류되고 있어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티 은행에 개설된 신용장도 불신하는 경향이 많아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티는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거나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또는 정부조달 시장개척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노크해볼 만한 새로운 시장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미래전망이 밝은 나라임이 분명하다. ■

〈표〉 아이티 주요 경제지표

	2003	2004	2005	2006(추정치)	2006(전망치)
GDP(U\$ 억달러)	28.3	36.6	41.5	49.6	55
경제성장률(%)	-0.6	-2.2	2.0	2.3	3.5
인플레이율(%)	39.3	22.8	15.7	13.1	8.9
수출(U\$ 억달러)	3.3	3.8	4.6	4.9	5.5
수입(U\$ 억달러)	11.2	12.1	13.1	15.5	18.4
외환보유고(U\$ 억달러)	0.6	1.1	1.3	2.5	2.8
총외채(U\$ 억달러)	13	13	13	13	12
환율(1달러당 구드/G:U\$)	42.37	38.35	40.45	40.41	37.1

\* 자료원 : eiu.com



권선홍  
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장  
(ksh@kotra.or.kr)

# 외환위기 10년을 돌아본다



1997년 11월 우리 경제를 쓰나미처럼 뒤덮었던 외환위기, 그 날로부터 만 10년이 지났다. 그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졌나. 위기는 완전히 물러갔나. 『나라경제』는 각 부문별로 달라진 한국사회의 모습을 짚어본다. <편집자 註>

# 經濟체질 · 思想체질 다 바꿨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은행의 건전성·수익성 크게 개선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향상돼. '관치금융' 철폐되고 상품 및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큰 폭으로 진전



고영선  
KDI 연구위원  
(yskoh@kdi.re.kr)  
· 서울대 경제학과  
· 美 Stanford대  
경제학 박사

**우** 리나라는 1960년대에 본격적인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을 추구한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사실 20세기 중·후진국에서 벗어나 산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몇 개국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가 1997년 말 맞이한 외환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고자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했다.

## 근본요인론? 자기실현론?

이러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근본요인(fundamentals)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실현(self-fulfilling crisis)론이다.

근본요인론에서는 소위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일컬어지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불건전한 관계로 부실이 누적되

었다는 데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는다.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과 은행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 기업투자와 은행대출이 부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했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이러한 위험공유 체제 하에서 기업은 무리하게 투자를 확장했고 은행은 위험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을 확대했다. 결국 엄청난 규모의 부실이 누적되었고, 정부는 그것이 현재화되었을 때 발생할 국민경제적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외환위기 이전까지 근본적 개혁을 계속 미루어왔다는 것이다.

한편 자기실현론에서는 경제의 근본요인이 건실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각국 경제가 곧 회복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특히 우리의 경우 채무상환능력(solventy)은 문제가 없었고 단지 일시적 유동성(liquidity) 부족이 문제였을 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IMF의 처방에 따라 구조개혁을 시작했지만 유동성이 부족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었다. 유동성 문제는 외국 채권은행과 만기연장 협상이 타결된 후에야 해결됐다. 이는 자기실현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된다.

근본요인론과 자기실현론 가운데 어느 것이 외환위기를 발생시켰는지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어느 이론이든 이를 뒷받침할 계량적 증거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최소한 표면적으로 근본요인의 악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두 요인이 혼재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위기 이후 취해진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과 긴축적 통화 및 재정정책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근본요인을 치유하는 한편 긴축정책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는 이전에 비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1960년대 말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30여 년간 300~40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위기 이후 100~200%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선진국들의 현 수준과 유사한 수치이다.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졌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향상되었으며 소위 '관치금융'이 철폐되었고 상품 및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큰 폭으로 진전되었다.

## 은행 33개→18개, 증권사 30개→1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문제의 근원이었던 정부와 민간 사이의 위험공유체제가 대부분 철폐되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로 정부와 민간 사이의 위험공유체제가 철폐되었다. 또 분식회계 및 재산국외도피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대우 임원들에게 26조원대의 추징금과 함께 중형이 선고된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혁파되었다. 은행 수가 33개에서 18개로 줄어들고 30개의 종합금융회사 가운데 29개가 사라지는 등 금융 부문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외형확장보다 수익성과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영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투자가 둔화되어 앞으로 인구 고령화 등 대내



'97년 12월 3일, 당시 임청렬 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세종로청사에서 칸드쉬 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긴급자금지원 의향서에 서명하고 있다.

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지원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벌문제의 해결은 주주들이 사적구제(private remedy)를 통해 경영진 규율 권한을 행사하기 쉽도록 만드는 한편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재벌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경제권력의 정치권력화를 막아야 한다.

의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일부에서는 위기 이후의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빈곤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자본의 침투와 국부 유출에 대한 논란도 거세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고 대외개방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선 먼저 과거의 성장전략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외환위기는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미 외환위기 이전에 적극적 시장개입과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정책기조에서 점차 벗어나 자율과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IMF 등 국제기구와 그 배후에 있는 선진대국들의 강압에 의해 이

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상품·금융·노동 등 각 부문의 시장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는 단지 이러한 변화에 촉매역할을 했을 뿐이다.

### '소국 콤플렉스' 일랑 벗어던져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혁신을 이끄는 여러 정책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쟁의 창달과 대외개방이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정부가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국내기업들이 해외경쟁에 노출되도록 유도한 데 기인한 바 크다. 앞으로는 국내시장 안에서 경쟁압력이 보다 고조될 수 있도록 대내적·대외적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대내 개방과 관련해서는 시장진입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독과점 및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공정

대외 개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과 농업을 중

심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소국(小國) 콤플렉스'를 벗어던지고 과감히 세계시장과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침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해외활동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부족을 걱정해야 한다.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고 보다 많은 외국기업이 국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현상을 걱정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도록 시장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반면 과거와 같은 직접적 개입과 간섭은 시장실패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추세인 빈곤 확산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복지예산 > 경제예산, 복지국가로의 첫 발 떼다

성장지상주의 철학이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은 복지 부문에 상당한 진전.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복지예산을 확충해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가져야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joulee@kyungpook.ac.kr)

- 서울대 경제학과
- 美 Harvard대 경제학 박사
- 대통령 정책기획실장
-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외**환위기 10년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들어 놓았다. 뭐니 뭐니 해도 저성장과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다.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불만에 가득 차 있다. 아마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자영업자의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만큼 업종마다 과당경쟁이 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양극화는 소득·고용·기업·산업·지역 등 모든 면에서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고용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빈곤이 증가한 점은 그중 가장 심각한 증세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1997년 이전에는 장기간 거의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라는 일격을 맞고서 급격히 악화됐고 그 뒤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빈곤도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뒤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10년의 상처를 미처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불길한 조짐이 지평선 너머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 이후에는 인구 증가가 멈추리라고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게 뻔한데 우리는 아직 과거의 상처조차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를 확충하는 일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성장지상주의가 지배적 철학이었고 지금도 그 위세는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이다. 복지를 이야기하면 마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성장 일변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복지지출을 늘리고, 양극화를 해결하고, 빈곤을 축소하는 과업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10년은 복지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를 도입했

다. 그 이전의 생활보호제가 국가에 의한 사회·보호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시민권적 성격이 처음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획기적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 실업·빈곤의 급증이 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 보장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이 제도가 큰 진전인 것은 사실이나 한 가지 결점은 보충급여라는 제도의 특성상 노동능력이 있는 소수 빈곤가구의 경우에 노동의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 뒤 도입하려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으로 하여금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이 나오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서 시장원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준비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영세기업·자영업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이들 업체에서의 임금 지급 상황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장애이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이다.

## 사회복지 공무원 더 늘려라

둘째,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성장지상주의를 채택해 왔다. 예산구조를 보더라도 그 징표가 쉽게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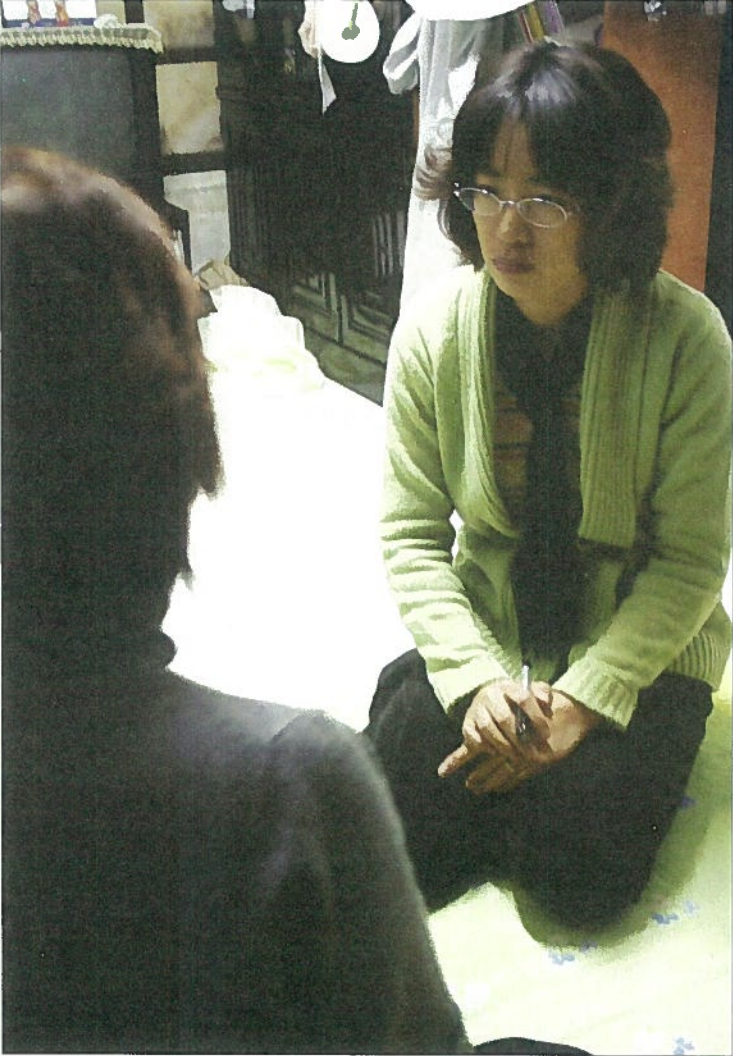
〈표 1〉 각국의 복지예산과 경제예산 비중

(단위 : %)

	한국	미국	호주	스웨덴	이태리	OECD 평균
복지예산/총 재정	25.2	57.2	52.0	54.1	49.3	54.7
경제예산/총 재정	19.9	6.5	6.4	9.9	3.9	9.1

주 : 한국은 2005년, 다른 나라는 2003년.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5



김영희

‘작은 정부’로의 개혁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뉴질랜드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을 대폭 늘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진)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견된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경제예산은 늘 복지예산을 능가해 왔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선진국 예산에서 경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어서 OECD 평균이 9%에 불과한 반면 이들 나라는 예산의 대부분을 복지 부문에 지출하고 있어서 OECD 평균이 55%나 된다. 즉,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의 6배나 될 정도로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복지라는 공공재의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 경제개발이야 원래 시장의 영역이니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의 제공 말고

는 사실 정부가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추월한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처음 일어난 일이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표준에서 벗어난 기형적 예산구조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축하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으나 결코 자만할 일은 아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떤 정도에 불과하므로 갈 길은 멀다. 〈표 2〉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아직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소득의 차이를 고려해서 선진국

들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있었던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복지지출이 훨씬 낮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동안 등한시해 온 복지지출을 꾸준히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했다. 복지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민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들 복지 공무원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엄청난 과로에 시달려 왔다. 우리나라의 국민 대비 복지 공무원 숫자는 매우 적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이 숫자를 1,8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여 공무원 숫자 늘이는 것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의 숫자로 볼 문제가 아니고, 이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작은 정부’로의 개혁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뉴질랜드에서 1980년대 대대적으로 정부 개혁을 할 때도 다른 많은 부문은 공무원 숫자를 줄였지만 복지·교육·의료 등의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늘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과잉인 부문도 있고 부족한 부문도 있어서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사회복지 부문은 인력이 크게 부족한 부문이므로 인력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몇 가지 발전 말고도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기뻐 언덕이라 할 수 있는 ‘긴급 복지 콜제도’를 최근 도입할 것을 비롯하여 지난 10년은 복지 부문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 현실이 애당초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 길은 멀고도 멀다.

이제는 무조건 성장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고 복지를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특히 빈곤층 어린이 보육·교육 등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은 지금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 중요한 성장 요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심각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성장 자체도 한계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환경은 비록 열악하지만 심기일전해서 최소한 복지국가의 입구에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두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표 2〉 각국의 사회지출 수준 비교(2001)

(단위 : %)

	한 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1	2005					
공공사회지출	6.1	8.6	16.9	14.8	27.4	28.9	21.2
총 사회지출	8.7	11.4	17.5	15.2	28.8	29.5	22.6

주 :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율  
자료 : OECD 2005, 한국 2005년은 추정치

# IMF, 금융엔 보약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 증진되고 각종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기반 마련돼. 금융·실물의 동반성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시스템 재편해야**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제도연구실장  
 (dhkim@kii.re.kr)  
 • 서울대 경제학과  
 • 日 Tokyo대 경제학 박사

**국** 내 금융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수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97년 말 2,103 → '06년 말 1,320개)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98년 600을 밑돌던 종합주가지수는 최근 들어 2,000을 넘나든다.

주식시장 시가총액 역시 140조원에서 800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직접금융시장도 외형상 눈에 띄게 발전했다.

은행의 경우 퇴출·합병을 통해 고질적이었던 과잉점포 문제를 해소하고 부실채권 매각으로 건전성을 높이면서 수익성 중심의 영업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당기순이익의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 부문의 이익창출 능력이 미흡한 가운데 대기업의 탈은행화, 수신경쟁 격화로 순이자 마진 및 이자수입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보험권의 경우 상위 3~5개 대형사에 의한 과점구조가 형성·유지되고 있지만, 외국계 보험사의 약진으로 국내 대형사의 시장

점유율이 위축되고 있다. 아울러 생·손보사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다.

증권권의 경우 유일하게 업체수가 증가하였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자본축적이 어려우며 위탁매매 등 중개업에 치중하는 단순한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수익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 외국자본 국내금융업 진출 활발

외환위기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몇몇 시중은행은 증권업과 보험업을 아우르는 금융그룹을 형성해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일부 생보사 역시 자산규모를 늘리면서 대형화 추세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각 금융권은 겸업화 경쟁을 통해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해 권역별 고유업무의 특성과 권역간 차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외국자본은 경쟁을 촉진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감독 및 규제체계, 각종 금융인프라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국내외 금융회사간 경쟁은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을 위축시키고 공공성 의식

을 약화시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경향을 낳고 있다. 또한 개방화의 폭과 속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이 크게 발달하면서 은행들은 CRM(고객관계관리) 기반의 통합채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저부가가치 업무를 비대면 전자금융 채널로 이관하는 한편 일선 점포를 고부가가치 채널로 특화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전자금융의 발달은 통신업과 금융업의 융합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전 의장이 경고하였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고령화에 대비하여 펀드·역모기지론 등을 설계할 전문 금융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지 않은데다 연금시스템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정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 머니게임장으로 변한 자본시장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단기성 수신자금은 금융권간 또는 부동산시장으로 빈번하게 이동하면서 경제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쓸림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분적 부실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는 사례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02년 88조원에서 '06년 말 217조원, 연평균 13.3%로 급격히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고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 등장했다. 특히 금융자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금융부채는 가계 부담을 늘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했다.



외환위기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경영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극적인 외자유치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진) 2003년 9월 3일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한국소매금융시장 진출을 기념해 자선단체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 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중이 낮고 매매회전율이 높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본연의 장기 기업자금 조달기능보다는 단기 매매차익 실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게다가 중소형 증권사가 난립하고 시장을 선도할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은 지연되어 기업자금 중개기능이 위축됨은 물론, 기업간 인수·합병 역할도 외국계 투자은행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머니게임의 장으로 전략해 버린 자본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내기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필수**

외환위기는 국내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험(risk)과 수익(return)의 존재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은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보수적 성향을 체득했다. 이에 따라 단기 안전자산과 소매금융을 선호하고 위험투자와 장기 기업금융은 회피하여 실물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우리 금융산업은 수익구조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실물산업 역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혁신기업이 창의적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을 꾀해야 한다.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서

비스를 창출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와 금융산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재벌-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정부-시장, 대기업-중소기업, 산업자본-금융자본, 은행-자본시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금융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소수의 대형 금융그룹과 허리 역할을 수행할 다수의 중소형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형 은행 및 보험사 중심의 금융그룹과 독립계 금융투자회사는 상호 경쟁하면서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중소형 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의 클러스터나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서민금융 클러스터는 선두그룹을 추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 최저임금 근로자 2.3% → 12%로

**전(全)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은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으나 실업률은 약 0.7%p 높아졌다.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아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djp@knou.ac.kr)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경제학 박사

**외** 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제도변화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을 도입한 것이다. 이 법률의 기본 내용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부수적 조건을 충족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전에 판례로 인정되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이는 외환위기 당시와 그 이후의 노동시장의 유연한 작동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기초로 다수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부도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명예퇴직금이라도 받고 퇴직하는 것이 낫겠다는 개인적 계산이 보태져 다수의 근로자가 퇴직을 수용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 정규직 근로자 보호막 센 편이다

그 이후 경영상 위기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하는 등 법원 판례가 현실 여건을 일부

수용하는 변화는 있었으나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규정 변화는 없었다. 이후 법률 개정에서 해고 예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규제가 약간 완화된 것도 있으나, 3년 이내 채용 때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와 같이 규제가 추가된 것도 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도 정리해고에 관한 절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 강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중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규직 고용 보호에 더하여 올해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비정규직 보호’ 조치가 추

가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과거에는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차례 반복·갱신할 수 있었으나 2007년 7월부터는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 것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이 같은 당국의 시각과 정책 의지의 결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에 잘 나타나 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의 확대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영향률은 1998년의 0.4%를 저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에 12%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14%에 이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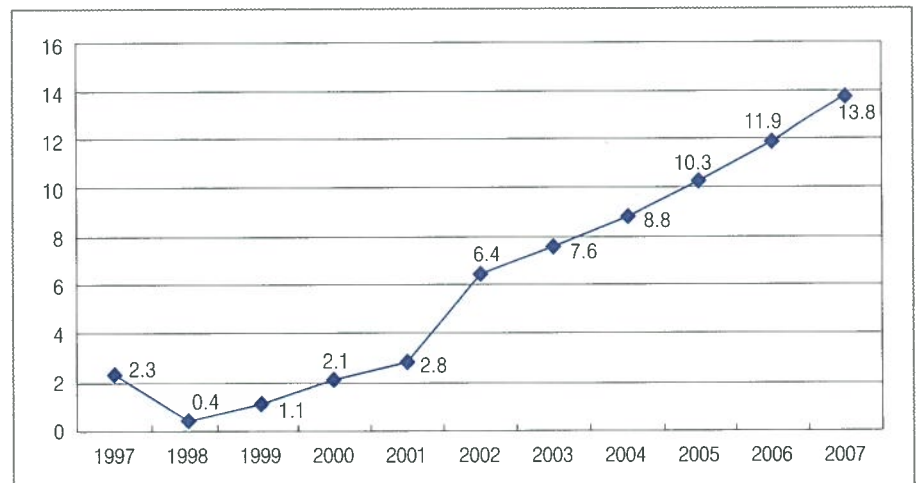
## 노사관계 제도정비, 국제 추세 못 미쳐

지난 10년간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도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3자개입 금지의 폐지,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허용 등 노조의 활동을 조장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규제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노동이 없는 임금’ 관행의 근절 등 글로벌 원칙에 맞는 관행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추세와는 반대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로 구성된 산업별 노조가 등장하여 산업별 공동

〈그림〉 최저임금 영향률 추이

(단위 : %)



주 : 영향률은 수혜 근로자수를 적용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비율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7 KLI 노동통계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27.2%로 OECD 회원국 평균(44.3%)에 비해 매우 낮다. (사진) 서울시내 모 대학의 취업정보 게시판 앞을 한 졸업생이 지나가고 있다.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등장했을 경우의 단체교섭 진행 방향 등도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현 정부는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과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구했다. 예컨대 참여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은 노조원 분신사망으로 빚어진 두산중공업 분규

에 개입하여 해고자 복직, 노조원과 조합에 대한 재산 가압류 해제, 파업기간 중 임금손실보전 등에 합의하도록 기업을 압박했다. 최근에는 골프장 캐디, 래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을 준근로자로 인정해 이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의 입법도 추진했다.

<표>는 실업률과 고용률 등 주요 노동시

장 지표가 과거 1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전연령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실업률은 약 0.7%p 높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이전보다 낮고, 실업률은 이전보다 높아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6년에 OECD 회원국의 전연령 평균 고용률이 66.1%,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4.3%(한국은 27.2%)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인력 활용도가 낮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그 격차가 매우 크며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주요 고용관련 지수의 변화

(단위: %)

		'97	'98	'99	'06
전연령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65.5	63.8	63.7	66.1
	고용률	63.7	59.2	59.5	63.8
	실업률	2.7	7.2	6.6	3.4
청년층 (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48.4	46.2	45.9	46.9
	고용률	45.6	40.6	40.9	43.4
	실업률	5.7	12.2	10.9	7.5

# 산업·경제의 ‘작은 정부’, 복지·문화의 ‘큰 정부’ 만들어라

산업·경제 분야에서 효율적인 정부, 복지·교육 부문에 효과적인 정부가 형성되자면, 공무원의 유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 관료의 유능해지려면 정책 기획, 입안, 집행, 평가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whcho@ssu.ac.kr)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美 Ohio주립대 경제학 박사

등 경제 지원 기능이며 셋째는 사회복지, 교육, 건강, 문화 등의 사회 형평성 증진 기능이다.

**정**부가 할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권 보장, 국방, 안보, 질서 유지의 기능이며, 둘째는 산업, 금융, 에너지, 통신, 중소기업

무현 정부(2003~2007년)에서는 4.2%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저성장과 고실업(잠재실업 포함)이 만연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경제성과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특히 2003~2007년간 개도국인 아시아국가의 평균 성장률이 7~8%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저성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1985년 0.3114에서 1997년 0.2829로 하락하여 분배불평등이 개선되다가, 2005년 다시 0.3104로 상승해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85년 당시 OECD 국가 중 가장 소득 불

평등이 심각한 나라는 미국·영국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의 수준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각했던 1985년의 나라들과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을 구현해야 하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성장·불평등 심화를 낳고 있다.

## 2. 지난 10년간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정부의 기능에 대해 보수주의 진영(예컨대 한나라당)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창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큰 정부, 규제받는 시장을 강조하며 소모적 논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보면 간명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생산적 논쟁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복지서비스, 공공비영리기관(단 시장적 서비스제공의 공기업은 제외)을 포함하는 ‘일반’ 정부의 총 지출은 2003년 기준으로 223조6,489억이었다. 이를 3대 분야, 국가관리(일반공공서비스, 국방, 치안 등), 산업경제, 사회문화(건강, 문화, 교육,

〈표〉 UN의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분야별 재정지출 비율

(단위 : %)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앵글로 색슨 국가	미국	29.6	10.6	59.8
	영국	22.9	6.7	70.4
	아일랜드	16.1	15.3	68.6
북유럽 국가	스웨덴	7.4	8.5	84.1
	핀란드	19.0	9.3	71.7
	덴마크	18.7	6.3	75.0
	네덜란드	24.6	10.5	64.9
유럽대륙 국가	독일	18.7	8.0	73.3
	프랑스	20.0	5.9	74.1
	벨기에	24.3	10.4	65.3
	룩셈부르크	14.0	11.0	75.0
한국 제외 OECD 국가 (18개국) 평균		18.8	11.0	70.2
한국		22.7	32.4	44.9

자료 : OECD(2006)

## 1. 우리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위 세 가지 정부기능을 경제적 관점으로 좁혀보면 첫째, 사유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지원에 의한 효율과 경제적 번영의 추구, 둘째, 사회복지, 교육, 건강, 문화 증진에 의한 사회적 통합 및 형평 증진이 된다.

이와 같이 정부기능을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을 평가하자면 우리나라 정부는 본연의 기능에 실패해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외환위기 직후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예외적 년도인 1998년을 제외한 후 1999년~2007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5%이다. 김대중 정부(1999~2002년)에서는 7.2%, 노

사회보장)로 나누었을 때, 국가 관리에는 총지출의 22.7%, 산업 경제에는 32.4%, 사회문화 분야에는 44.9%를 지출하였다. <표>에서 보듯,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산업경제 분야 지출이 지나치게 높고 반면 사회문화 분야의 지출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

이와 같은 통계는 한국정부혁신의 주요과제가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 사회문화 분야에는 큰 정부에의 지향성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일반정부 재정지출 중 산업경제 부분의 비중을 32.4%에서 OECD 평균인 11.0%까지 줄인다고 가정하면, 2003년 기준 48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산업경제 분야에서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절약된 재정지출이 새로운 정부서비스 수요 분야인 자녀돌봄, 자녀교육, 노인고용, 노인돌봄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지출한다면 세금의 증대 없이, 국가채무의 증대 없이 복지·교육 재원은 충분히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 비대한 현재 정부야말로 복지 및 교육 재정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산업·경제 부문에서의 작은 정부, 복지·교육 분야에서의 큰 정부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공부문 전체의 기능조정을 단계적으로 행하는 전략을 지난 10년간 구사하지 않았으므로, 한편으로는 저성장, 일자리 위기,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 심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정부개혁, 노동시장유연성제고개혁 등 4대 부문 개혁을 내세워, 정부개혁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1998년과 1999



산업·경제 분야에서 절약한 재정지출을 새로운 정부 서비스 수요인 자녀돌봄·교육·노인고용에 지출한다면 세금 증대 없이 복지·교육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사진) 수원 국제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 공무원들이 강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년 두 차례 정부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 주도의 정부개혁이 추진되었다.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수행할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개혁은 유야무야 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재벌규제는 김대중 정

부규제를 답습하고, 정부부문에 관한 한 큰 정부를 지향해 공무원 수,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다양한 정부혁신 팀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 혁신은 있었으나 이들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혁신에 불과했다.

### 3. 앞으로 10년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작으나 효율적인 정부 구현

산업·경제 부문 재정지출 비중을 앞으로 10년간 두 단계로 나누어 대폭 축소해야 한다. 예컨대, 2003년 기준 산업경제 지출비중인 32.4%를 제 1단계(2008년~2013년)에서는 20%까지 제2단계(2013년~2018년)에서는 OECD 평균수준인 11%까지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는 정부 부처 통폐합, 유사한 '일반' 정부기관 간의 통합, 대대적인 민간위탁 및 이양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대대적 민영화를 수반하게 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위탁 및 이양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정부 산업·경제부문의 대대적 구조조정의 청사진이 만들어져야 한다.

금융부문, 기업지배구조,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통신, 언론)에 있어서 규제완화 및 폐지로 작은 정부를 구현할 때, 정부 본연의 기능 즉 효과적인 감독체계확립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구축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 복지·교육 부문에서는 크고 효과적인 정부 구현

일반정부 재정지출 중 산업경제 부문의 비중을 2003년 기준 32.4%에서 1단계로 20%까지 축소시키면 약 25조원의 재원이 절약된다. 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 주거복지, 자녀돌봄 복지, 자녀교육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복지, 실업자의 재취업 훈련, 한계 근로자의 평생교육 지원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복지재원이 확충될 때, 정부는 정리해고의 용이성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취약 때문에 엄격한 고용보장의 노동법을 갖게 되었다면 반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당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진 이후엔 해고가 쉬워지고, 재취

업 또한 쉽게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 정부 유능성을 높여라

산업경제 분야에서 효율적인 정부(그러나 작은 정부), 복지교육 부문에 효과적인 정부(그러나 큰 정부)가 형성되자면, 공무원의 유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 관료가 유능해지자면 한편으로는 정책 기획, 입안, 집행, 평가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5급 이상 정책분야 공무원 채용을 1/2은 개방형 임용, 1/2은 행정고시 임용으로 하여 공무원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전문가가 공무원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지서비스 분야는 영국식의 책임운영기관(기관장을 개방형으로 임용, 기관장이 공무원 인원채용 및 공무원조정의 실질적 권한 행사) 또는 일본식의 독립행정법인(총수입의 대부분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되, 소속인원을 전부 비공무원화 또는 비공무원으로 충원하여 급여 및 인원 조정을 민간 비영리 법인처럼 행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진전

정부가 유능성을 발휘하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업무분담, 책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주민의 고용, 일자리 그리고 지방주민의 교육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행정부 지방 이전 없이도, 공기업의 지방 이전 없이도,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개발 없이도 지역균형발전은 이룰 수 있다.

지방에게 법인세를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에게 10~15%까지 감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지방교부금을 감액해 줄 권한을 제공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시

켜, 지역단위 탁월한 인재가 양성되고 배출되도록 선진국형 자율교육체계를 각 지방이 경쟁적으로 구축하면, 지방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 4.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기까지 성장(효율)과 형평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성장(효율)과 형평 간의 조화는 실제로 가능하다는 국가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는 낡은 정부 재창조를 이루어 내어 성장(효율)과 형평간의 조화를 낳는 한국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 부문은 구조조정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 또는 조직의 이익을 희생하는 본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이익 또는 공무원 조직이익을 위하여 공공적 이성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선진국에 진입하자면 낡은 정부를 재창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정부부문의 유능성, 청렴성, 높은 서비스의 질, 공공적 이성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 수립·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부문의 혁신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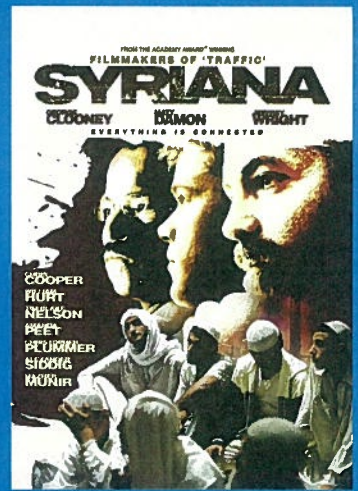
## 시리아나

감독 : 스티븐 개건 출연 : 조지 클루니, 맷 데이먼

# 석유를 위해선 무엇이든... 고유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보여주는 <시리아나>

박일한 파이낸셜뉴스 기자  
(jumpcut@innews.com)

「경제」시네마, 「생각이 팡팡 튀는 팝콘리더십」 저자



2004년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의 스티븐 립 회장이 그의 저서 「고유가 시대의 투자전략」에서 “10년 안에 오일 100달러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를 비웃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과거 예상했던 1조배럴(40년 사용분량)보다 많은 3조배럴이라는 미국지질학회 보고서나 석유 개발기술 발달로 매장량은 더 발견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경제 성장을 원하는 중동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산하고, 러시아·앙골라 등에서 추가로 석유개발에 나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스티븐 립의 우울한 전망은 3년도 안 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04년 이전까지 배럴당 20달러 중반에 불과했던 국제 유가는 어느새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가 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고유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탁월하게 그린 영화가 <시리아나>(감독 스티븐 개건, 2005년)다. 중동지역의 정치적 긴장 고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등을 생생히 묘사해 유가 급등의 원인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야기는 중동지역 정세만큼 복잡하다. 열 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중동의 한 산유국에서 왕위 계승자인 개혁파 나시르 왕자는 기



존에 미국과 맺은 배타적 관계를 끊고, 경쟁 입찰을 통해 천연가스 채굴권을 중국에 넘겨주려 한다. 보다 높은 수익을 얻어 진정한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 의도에서다. 당연히 미국은 이를 저지하려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미국 에너지 다국적기업인 코넥스가 카자흐스탄 원전 채굴권을 손에 넣을 중국계 에너지 기업인 킬린사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합병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락한다.

유가 급등은 전쟁이나 혁명 등 다양한 경제외적 요인이 배경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중동국가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암투와 정쟁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고유가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과 신흥 개발국가들의 석유소비량은 급증하는 반면, 중동의 석유 생산시설은

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수급불안'이다.

영화에서는 실제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면서 '석유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중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석유 채굴권을 획득하고 대형 에너지 기업 인수에 적극 뛰어든다. 하지만 미국은 CIA까지 동원하며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려 한다. 석유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태도다.

미국이 석유 독점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유의 생산과 소비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자국 경제와 세계 지배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란 게 석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은 자체 수요 원유의 66%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게다가 석유메이저들은 대부분 미국기업이다. 당연히 석유는 미국 경제를 지탱해 주는 근간인 셈이다. 나아가 대부분 국가는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 석유 생산·유통 등에 독점권을 가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손바닥을 벗어나 안정적인 원유 조달처를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매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석유 소비를 늘리는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유 조달처가 필요하다.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다국적 에너지 기업을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을 미국은 큰 부담으로 여긴다.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중국은 지속적으로 석유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중국은 중국해양석유유한공사를 앞세워 미국 9위 석유업체인 유노칼 인수를 추진했다가 미국 의회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리듯 상황은 역전되고 있다. 중국은 유노칼 인수가 무산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카자흐스탄 3위 원유 생산업체인 '페트로카즈'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이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

# 제2의 'IMF'는 없다

## <외환위기 Before & After>

KDI 경제정보센터는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경제 분야 전반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11월 14일~17일 e-mail을 통해 실시됐고 조사대상자는 경제학과 교수(56명), 연구원(47명), 기업인(68명), 금융전문가(49명), 투자분석가(48명) 등 총 268명이었다. (편집자 주)

### 경제전문가 81.0%, “경제사정 좋아졌다”

경제전문가 대다수(81.0%)는 현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했다(매우 좋아졌다 14.6% + 좋아진 편이다 66.4%). 특히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근거로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65.4%)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꼽았다.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평가한 경제전문가들(7.5%)은 ‘계층·부문간 양극화 심화’(55.0%)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외채구조’와 ‘기업경영’이 가장 개선돼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4.34), ‘과잉·중복 투자 등 방만한 기업경영’(4.10)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 및 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능력’(3.34), ‘관치금융’(3.56), ‘정경유착’(3.63) 등은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혁성과? 기업>금융>노동>공공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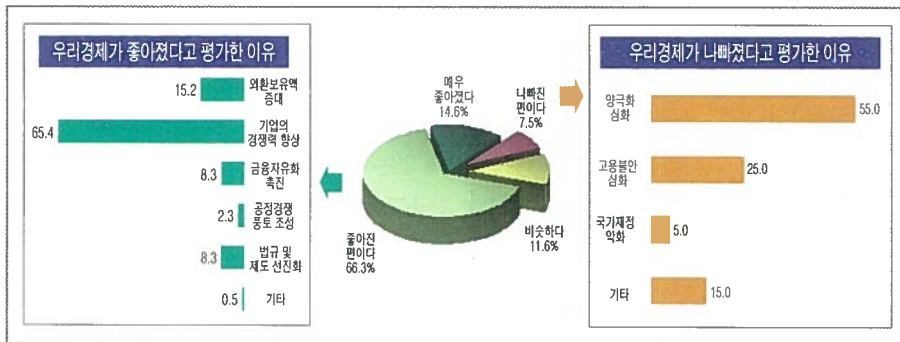
경제전문가의 59.3%가 4대 부문(기업·금융·노동·공공) 중 ‘기업 부문’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금융 부문’(38.1%)을 꼽았다.

또한 각 부문별 개혁 내용에 대한 세부 평가(5점 척도)를 부문별 평균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기업(3.66)과 금융(3.70) 부문이 노동(2.92)과 공공 부문(2.90)에 비해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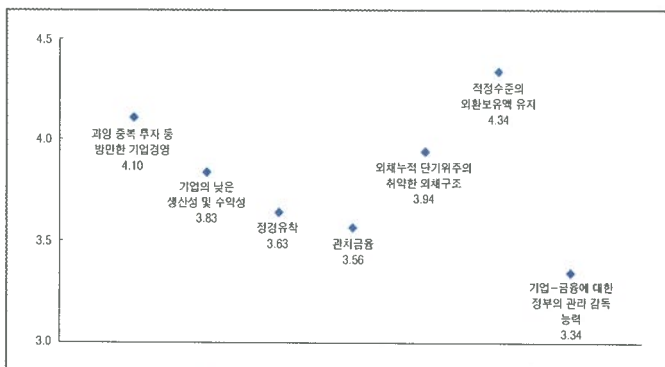
4대 개혁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부문의 세부 개혁 내용 중 ‘채무구조 개선’(4.28), ‘기업의 투명성 제고’(3.99)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지만, ‘핵심 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강화’(3.24), ‘기업환경 개선’(3.24)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금융부문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건정성 확보’(4.11)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지만,

<그림 1> 외환위기 이전과의 경제상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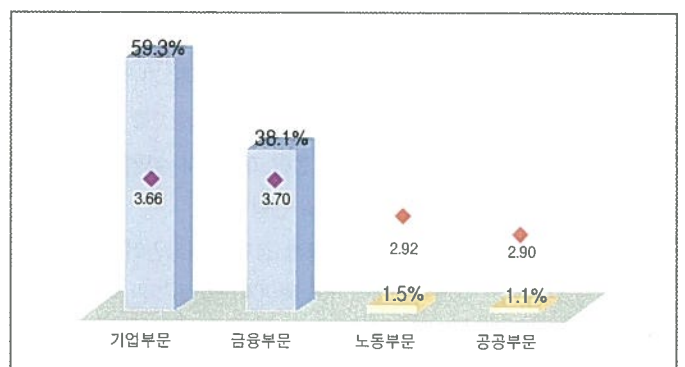


<그림 2>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개선 제도



[매우악화(1)-보통(3)-매우개선(5)]

<그림 3> 4대 개혁 부문에 대한 평가



[매우악화(1)-보통(3)-매우개선(5)]

‘금융감독 제고 및 조정시스템 선진화’(3.45)는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 부문의 경우 ‘노동의 유연성 확보’(3.15) 및 ‘노사관계 개선’(2.97)은 외환

위기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일자리 창출 노력’(2.66)은 약간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공공 부문 경영 효율성 제고’(2.86)와 ‘공기업 민영화’(2.94) 모두 외환위기 이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매우 낮아

경제전문가 83.2%는 고유가, 美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가계부채 증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현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전문가 88.1%가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18.7%),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11.9%), ‘고용불안 해소’(11.2%), ‘FTA 확대 등 개방화·국제화’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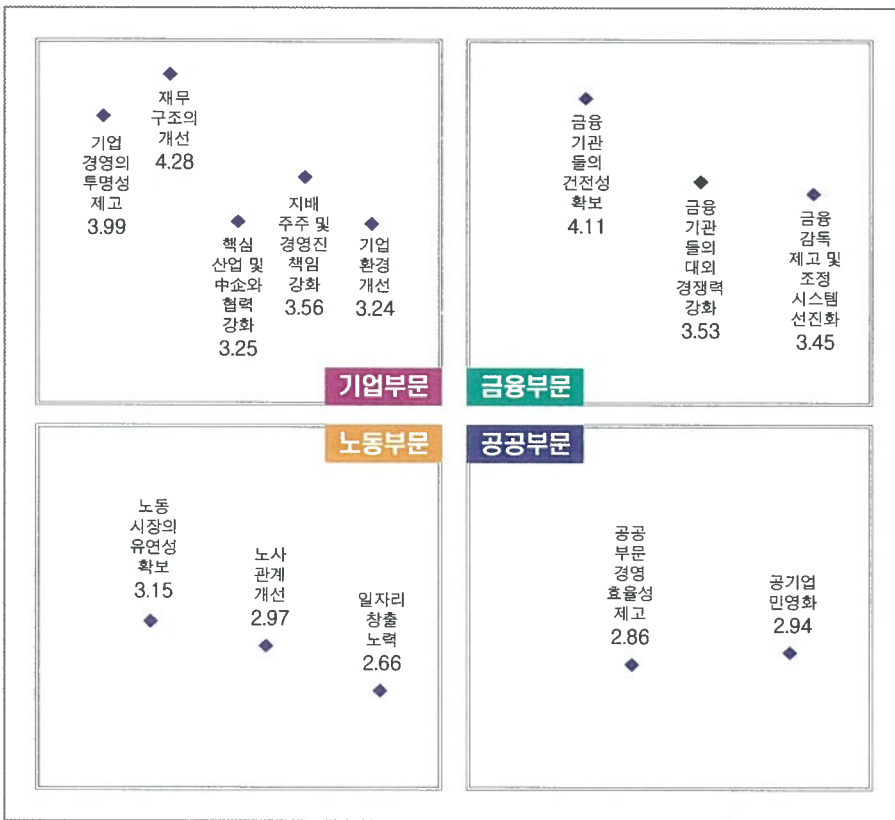
특히 기업 부문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63.3%)와 ‘과감한 투자 유인책’(44.9%)을, 금융 부문에서는 ‘자본시장 통합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49.3%), ‘금융규제 완화’(48.5%), ‘금융 전문인력 양성’(44.0%)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한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61.7%), ‘고령화사회 대비 사회시설 및 고용구조 마련’(45.5%),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37.6%) 등을 지적했다. 공공 부문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47.4%), ‘정부의 경쟁시스템 구축’(44.4%)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과 공공 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그림 4〉 4대 부문 개혁별 세부 평가



[매우악화(1)—보통(3)—매우개선(5)]

〈표〉 향후 개선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물가안정	2.6%	3.7%	4.1%
② 내수진작	5.2%	7.1%	4.1%
③ 부동산시장 안정	9.7%	9.7%	6.0%
④ 재정 건전성 증대	2.6%	4.1%	6.3%
⑤ 고용불안 해소	11.2%	11.2%	5.6%
⑥ FTA 확대 등 개방화·국제화	10.8%	10.4%	11.2%
⑦ 적정 환율 유지	2.2%	3.7%	2.2%
⑧ 불필요한 규제 완화	18.7%	16.4%	8.6%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5.2%	3.4%	7.5%
⑩ 노사관계 안정	6.3%	14.6%	10.1%
⑪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5.6%	2.2%	5.2%
⑫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11.9%	7.8%	14.2%
⑬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척결	4.9%	3.7%	6.3%
⑭ 기타	3.0%	1.9%	8.6%

# 당신은 1% 인간인가?

## W 버스를 놓치다

내가 전문의 시험을 마치고 대전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할 때였다. 한 친구가 서울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좋은 강연이 열린다고 와서 물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경제강연 들으러 서울 간다고 하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겠느냐며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 강연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서 MBA 마치고 온 백수 친구를 꼬셔서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강연이 시작되자 웅성웅성해졌다. 강연자가 찢어진 청바지에 UCLA 티셔츠에 뉴욕양키스 모자를 쓰고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격식을 갖춘 강사를 기대했던 십여 년 전에 그런 복장은 가히 파격이었다.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고 강연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30분이 채 못 되어 맨 앞줄만 남고 다 나갔다.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연자가 강연의 주제를 적겠다고 해서 칠판에 'WWW' 라고 적더라. 그리고나서는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 W의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다. W 안으로 은행도 들어오고 국가기관도 들어오고, 이걸로 전쟁도 하고 핵무기도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였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망상장애이거나 테트리스 게임 만들다 미친 인간인 줄 알았다. 그 개념은 이해하겠지만 너무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자 백수 친구가 별떡 일어나더니 10만원만 꿍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유를 물어보니 깊은 감명을 받아서 강의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말려도 말을 듣지 않기에 돈 얼마를 쥐어 주고 나는 다른 친구와 밥 먹고 술 마시고 헤어졌다.

그날 밤 백수 친구와 W(강연자를 지칭)는 새벽 2시까지 마포 주먹고기 집에서 얘기했다고

한다. 백수 친구는 W 다리를 붙들며 어떻게 하면 그 세계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고 통사정을 했고 W는 몇 가지 제안을 해준 다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한다.

다음 날 백수 친구가 전화를 하더니 다짜고짜 월급 받은 전부를 내놓으라는 게 아닌가. 물어보니 대구에서 웹호스팅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월급 전부를 다 내놓으라는 건 심하지 않느냐고 버텼지만 결국 월급의 90%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그 후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한 전자매일 회사가 대구에서 일년 반 만에 250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99년 초에는 공중파 광고까지 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980억인가의 지분을 받고 넘기게 됐다. 문제의 W는 자본금 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강남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 사업을 시작했고 급기야 1조6천억의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참 많은 고통을 받았다. 스스로를 죽이고 싶었다. 친구가 잘 된 게 배아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였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친구 눈에는 보이고 내 눈에는 안 보였을까.

그 해답은 제레미 러프킨의 저서를 읽다 발견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3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0만년 전에는 돌도끼가 전부였다. 그런데 30만년 동안 문명이 발달해 오는 과정에 있어 모든 인류 구성원이 문명발달에 기여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 중 0.1%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망망대해에서 새로운 땅을 찾으면, 0.9%의 직관 있고 안목있는 인간이 그들을 따라가고 후원하고 건설해 온 게 오늘날의 문명이라는 것이다. 러프킨은 나머지 99%를 잉여인간이라고 불렀다. 섭취와 배설을 반복하며 이산화탄소만을 발생시키는 존재로 봤다.

이런 현상이 90년대만 있었느냐, 내가 아는 한 이런 일은 10년, 길면 20년, 50년 주기로 반복되어 온 역사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다음 파도가 다시 쳐서 모래톱이 깎여나가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99%의 인간은 자기가 이해 못하

뻥한 투자서는 가라!  
깊이 있는 인문적 시선으로  
경제와 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나라경제』의 명 칼럼니스트 박경철.  
지난 달 9일 KDI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그가 강연한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그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변화의 물결 속에 놓인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본다.

는 세상이 펼쳐진 걸 보고 투기다, 거품이다, 광풍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거품이 가라앉으면 '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말하는 것이다.

1800년대 영국에서는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 목장을 만들어서 양을 길러 양털을 공급해 모직산업에 일으킨 산업혁명이 있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공학이 발달할 때,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할 즈음에 정유사업을 하던 록펠러는 자동차 사업의 성공을 예견하고 미국 전역에 주유소를 세워 주유소의 94%를 독과점해 버렸다. 1920년~40년 사이 모토로라는, 잠수함 설계에 있어 무전기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무전기를 개발하고 납품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1970년대 반도체가 개발되는 것을 보고 퍼스널 컴퓨터를 만든 것과 1990년대 IT까지, 매년 새로운 0.1%의 W가 무엇을 만들어 내면 그것을 읽고 거기에 뛰어든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문명의 파이를 계속해서 키워왔다. 그런 기회들은 매년 새롭게 주어졌지만 나머지 99%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지나쳤던 것이다.

### “누가 이걸 사” 한마디에 벼락을 맞다

그 후 하루는 병원에서 원장님이 부르더니, “요즘 응급실에서 삐삐를 잘 안 받는다. 원성의 소리가 높다”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속으로는 ‘저도 사람인데 잠도 좀 자야지, 어떻게 매번 받겠습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삐삐가 울려도 옆에 전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핑계를 댔다. 그랬더니 갑자기 원장님이 시키면 물건을 책상위에 툇 내놓으며 “이건 니 꺼다”라고 하시는데 툇 보니 핸드폰이 아닌가. 그때 발목 잡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이 병원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 다시 삐를 문졌다고 다짐했다.(웃음) 그때 핸드폰이란 물건을 들고 압구정동에 가는 것은 요즘 페라리 오픈카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들고다니지 않겠느냐 했더니 친구들

이 “어떤 바보가 이런 걸 사겠느냐, 재벌집 회장이나 줄부들이나 사는 거지”라고 핀잔을 주더라. 그 순간에 나는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 포드가 1903년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모두들 비웃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난한 이유는 기차는 백명이나 타지만 자동차는 4명밖에 못 타는데, 생산 비용은 기차 한 대나 자동차 한 대나 같으니 바보 아니냐는 것이었다. 헨리 포드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을 비



웃는다. 기차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밖에 갈 수 없지만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륙을 내륙으로 연결하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될 거다.”

결국 헨리 포드는 1907년에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만들었고 큰 성공을 거두어 자동차산업은 마침내 미국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

병원에 와서 핸드폰 어디서 샀느냐고 물었다. 회사는 한국이동통신이고 제조회사는 모토로라라는 미국회사라고 했다. 나도 0.9%의 안목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SK 텔레콤이 상장되고 그때 상장가격이 5만원

가량 할 때 용돈 100만원 쓰고 생활비 조금 쓰고 나머지는 다 그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이전 10년간 주식투자의 거래기술을 엄청나게 공부했지만 10년간 공부했던 거래기술을 다 무시하고 단지 ‘이것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후 1999년말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 2000년 이후로는 새로운 W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 했다. 몇 억원씩 샀으면 재벌이 되어 산하에 KDI 같은 연구기관을 두었음지 모르지만, 월급 받아 쓰고 남는 돈으로 투

자를 했기에 재벌이 되지는 못했다. 이익을 본 금액이 많진 않았지만 투자와 거래를 처음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목적만으로 싸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사 비싸게 팔려고 시도하는 게 거래다. 거래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좀더 바보에게 조금 더 비싼 값으로 팔아넘기는 것일 뿐이다. 반면 투자란 통찰력과 직관의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다.

### 거래 아닌 투자를 하라

그러다 딜레마가 생겼다. 2000년대가 시작되는데 내 눈에 2000년대의 W버스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개동철학 논리에 의해 W를 가상으로 생각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이전에는 기계의 힘으로 문명을 건설해왔다. 문제는 사람이 기계를 만들긴 했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기계가 주인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석면 마시고 쓰러지고, 이타이타이병에 시달리고... 인간은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기계문명의 특징이다. 결정적인 건 이놈의 쓰레기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 부가가치가 다했을 때 쓰레기가 되지 않고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는 가역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 답은 바이오·헬스케어, 인간을 즐겁게 하는 레저·엔터테인먼트, 비가역적인 쓰레기들을 만들어내지 않거나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되돌리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환경, 엔트로피를 증가하지 않게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대체에

크기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나는 순이익의 몇십 배, 몇백 배쯤 되겠다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 기계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던 시대에서 사람의 머리가 부가가치를 내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인간 자체가 생산수단이 되는 시대. 이게 2000년대다.

내년 말쯤이면 다시 이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될 것이다. 2000년대 버스를 제대로 올라탄 것 같지만,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버스가 올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이다. 다음 버스가 안 보이면 내가 앞에 탔던 버스로 운송아 잡는 것일 뿐 아니냐. 그래서 밤에 잠도 안온다.

오늘 강연의 결론을 내리자면 거래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현장에서 생선 파는 생선장수 할머니한테 못 당한다. 거래라는 것은 거래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 대신 여러분은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자와 거래자를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을 사기로 결정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나 정보와 관련된 게 아닌 당신이 가진 통찰, 직관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다. 직관과 통찰의 비중이 50%를 넘을 때 당신은 거래가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다. 하지만 50%를 넘지 않는다면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런 거래는 할 필요가 없다. ■

중간중간 윗트 가득한 입담에 백여 명의 청중은 연방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0.1%의 인간과 99%의 잉여인간을 이야기할 때에는 모두들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경철 원장의 높지 않은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메시지는 강황하지 않고 간결하고 명료했다. 통찰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역사란, 부란 무엇인가, 인간 진보에 대한 성찰 없이 뿔과 가치를 논하지 말라는 그의 철학이 유쾌하게 웃는 중에 청중의 가슴 속을 묵직하게 울렸다.

정리 길준범 나라경제 기자



이다. 기계문명의 생산물은 비가역적이다.

2000년대 기계문명은 한계에 왔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웰빙이라는 화두다. 그 때 웰빙이 천년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거대한 테마라고 생각했다. 그 이전에는 기계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세상, 즉 사람의 세상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게 주역 하는 사람들에게는 후천개벽이 오는 거고, 미래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해 지구가 끝장나기 전에 반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즉 사람의 시대가 오는 거라고 보았다.

그래서 나는 2000년 이후 새로운 W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기계와 대립되는 존재, 비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인, 자연계에 작용을 가해 부가가치를 갖게 하면서도

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더 주목했던 게 금융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중심되는 시대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9년 말에 얻었던 일부의 성과를 모조리 투자해서 2001년도에 바이오 벤처 기업을 시작했고, 다른 데 엔젤투자를 몇 군데 병행했다. 유전자 진단 시약을 만드는 벤처기업은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해 내년엔 상장을 한다.

건강이나 레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나는 울산 자동차 공장이나 포스코 공장에 강연하러 가보면 이 엄청난 시설과 자원을 소모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하루에 얼마나 벌지 좀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파이낸스 센터를 가면 여기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오늘 하루 거래해서 얻는 부가가치

## 소도 짚신을 신었다

**한** 눈이 쌓이는 추운 겨울밤. 화롯불에는 고구마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절절 끓는 아랫목에서 어린 손녀는 할머니의 약손으로 배앓이를 삭히고 있다. 윗목에서는 수염 허연 할아버지가 지푸라기를 발에 놓고 새끼를 꼬고 있다. 할아버지는 몇 가닥의 지푸라기를 양손에 넣고 조금 비뻤을 뿐인데 정교하고 예쁜 새끼줄을 연방 만들어낸다. 어린 손녀는 마냥 신기해 지푸라기 몇 가닥을 손에 넣고 비벼보지만 이내 흩어져버리고 만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모습이다. 농사를 업으로 삼고 살던 우리 조상들은 농사 짓고 남은 짚 한 묶음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 소여물로, 퇴비로, 신으로, 망태기로, 지붕에 엮을 이엉으로. 이처럼 짚은 삶의 요소요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추수가 끝난 눈에 쌓인 짚뭉더미를 보며 추억을 곱씹는 이들에게 명륜동에 자리 잡은 짚풀생활사 박물관을 소개한다.

이 박물관은 1993년 청담동에서 문을 열었고 2001년에 명륜동으로 이전했다. 첨단 유행의 거리인 청담동보다는 아무래도 유서 깊은 명륜동이 짚풀생활사 박물관이 들어서기엔 더 좋은 장소일 것 같다. 박물관은 전시관 두 개 층과 체험실로 이루어졌고, (사)짚풀문화연구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1층에 위치한 제전시장에는 주로 공예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장춘금의 그랑매트, 문충렬의 기와집, 유기경의 장가가는 날, 양중규의 둥구미신, 정기택의 망태기 외에도 울망줄망한 바구니, 짚신 등이 한 면을 차지한다.

고무신이 대량생산되기 전까지 짚신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대중적인 신발이었다. 일반 짚보다 고운 짚으로 섬세하게 삼은 미투리, 처녀나 새색시용으로 벗짚의 새끼기로 총을 박아 삼은 '고운





벼짚이나 밀짚, 보리짚뿐 아니라 왕골, 골풀, 애기부들 같은 풀들도 생활용품을 만드는 알뜰한 소재가 된다.

신, 상주의 '엄짚신', 눈 쌓인 길에도 고딕없는 '둥구미신'이 1전시장 중앙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특히 머리카락을 섞어 삼은 짚신은 450년 전 경북 안동 이용태 묘에서 발견된 짚신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부인 고성 이씨가 망부에게 머리카락으로 삼아 바쳤다고 한다. 내외의 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망부를 기리며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았을까

짚신을 들꽃처럼 표현한 작품 앞에서는 "짚신도 짝이 있다"는 속담이 얼마나 짚신을 모독한 말인지를 느끼게 한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다. 임채지의 '십이지탈'은 열두 띠 동물의 특성을 섬사하게 묘사해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다. 짚기러기·짚겨북이·짚자라·짚공작을 보면서 짚풀 하나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한 작가들을 시샘했다.

밖으로 난 계단을 따라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제2전시장이 나온다. 이곳은 짚풀로 만든 전통 생활용품 등을 전시해 놨다. 15가지 방법의 망태기 엮음새와 20여 가지의 보리짚·밀짚 엮는 방법을 재현해 보여 준다.

갈대로 엮어 짠 상자인 고리짚, 싸리채로 엮고 기름종이를 바른 채롱, 땡땡이 텅굴로 엮은 땡땡이 바구니, 죽순 껍질로 만든 죽피 바구니, 몸은 버들가지로 아가리는 소나무로 엮은 버들바구니, 버들로 엮은 동고리, 대바구니, 갈대 바구니, 도롱이, 망태기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기를 눕혀 두고 흔들어 재우거나 안에 넣어 지고 다녔다는 애기구덕, 들일 갈 때 불붙이면 하루 종일 불씨로 사용할 수 있던 화승(역새이삭을 칩으로 감아 만들었다)은 제주방언이라 이름도 낯설다.

짚풀로 만든 개집을 보고 있으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하다. 짚풀은 탄력성과 보온성이 뛰어나고 늘 보송보송해 개집으로는 이상적인 소재이다. 오물이 묻은 짚은 좋은 거름이 되니 버릴 데라곤 하나도 없다. 소와 관련된 용품도 의외로 많다. 먼 길을 가거나 논밭을 갈 때 소의 발을 보호해주기 위해 사용한 쇠신을 비롯해 목타레·부리망·길마·쇠등솔까지... 특히 소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만

든 쇠신은 조상들의 정다운 마음이 따뜻하게 담겨있다.

왕골, 골풀, 애기부들, 통싸리, 종려나무털, 소테나무 껍질 등은 한켠에 세로로 전시되어 소재의 궁금증을 덜어준다.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 새끼를 묶어 수를 셈하던 방법인 '결승'도 이채롭다.

체험실에서는 짚풀로 복조리, 달걀꾸러미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을 짚풀을 눈여겨보고 박물관에 연구회까지 둔 인병선 관장. 인 관장은 '껍데기는 가라', '금강' 등을 쓴 우리의 대표적 저항시인 신

동엽 선생의 부인으로, 해외에까지 우리 짚풀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다.

박물관 앞마당에는 짚풀이 수북이 쌓여 있다. 비단처럼 고운 결을 가지진 않아도, 화려한 색을 지니진 않아도, 비쩍 마른 황갈색의 짚풀더미는 박물관을 나서려는 걸음을 다시 잡아 세운다. 잠시 동안 나는 어린 손녀로 돌아가 새끼 꼬는 할아버지와 약속이 따뜻하던 할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추수 끝난 논에서 사촌언니들과 마른 지푸라기를 가지고 놀다 새끼맷게 그을렸던 어린 날을 추억했다. ■

글 이정미 나라경제 기자  
사진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 관람 Tips

-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4
-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5:30  
(입장은 관람종료 30분전까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은 휴관
- ▲ 관람요금
  - 성인 : 4,000원(20인 이상 단체 3,000원)
  - 초·중·고생, 65세 이상 : 3,000원  
(20인 이상 단체 2,000원)
  - 짚풀공예 체험 : 3,000원
- ▲ 문의전화 : 743-8787/8
- ▲ 찾아가는 길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 버스 : 혜화동 로터리 방향  
(초록)1011, 1012, 1018, 1019, 2112  
(파랑)101, 102, 143, 150, 162, 171, 172, 272, 301 등  
(빨강)9101, 9410

# 막 내린 대중 마케팅 시대 IMC 그리고 ...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마케팅 업계에 새바람이 불어왔다. 이른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이하 IMC)이 등장한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제품을 Launching하거나 새로이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할 때 주로 사용되던 마케팅 믹스 4Ps(Product, Price, Place, Promotion)가 IMC의 4Cs(Consumer(or Customer), Cost, Convenience, Communication)에게 서서히 자리를 내준 것이다.

## 탈대중화와 시장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미국 사회에서는 '광고'라는 아주 특이한 존재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막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 마케팅 4Ps가 출현하게 된다. 4Ps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굳건했기에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즉 당시의 경제체제가 생산과 제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대변되는 '대중'이라는 용어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대는 무엇이든 획기적인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면 팔리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가 바로 대중매체를 이용한 대중 마케팅시대이다. 서로 비슷하고 차별화되지 않은 규격화된 소비자들에게 규격화된 대량생산 제품을 팔기에 적합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탈대중화 되어가더니, 가족의 수가 줄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이 확산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미디어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데,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변해야만 했다. 현명

다. 아니 새로운 4Cs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어야 했다. Product(제품)보다는 Consumer(소비자) 또는 Customer(고객)를 생각해야 했고, Price(가격)보다는 Cost(비용)를 연구해야 했고, Place(판매장소)보다는 Convenience(구매편리)를 염두에 두어야 했고 마지막으로, Promotion(판촉)보다는 고객과 끊임없는 Communication(대화)와 관계를 실시해야 했다.

이제는 확연히 IMC의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은 앞 다투어 IMC를 표방하는 광고대행사를 찾아 대행사를 바꾼다. 대행사들도 우리 실정에 맞는 IMC를 찾느라 부산하다. 정부에서도 정책마케팅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정책소비자(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는 이미 IMC에 대한 교과목이 생기거나 비중을 강



전세계 광고회사 중 제일 먼저 IMC를 실행한 회사는 Ogilvy & Mather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전략을 수립했다. 그림은 Ogilvy & Mather(www.ogilvy.com)의 홈페이지.

한 기업의 오너들은 기업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기업에서 열심히 만들지만 하면 무조건 팔리던 시대가 끝난 것이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 이제는 4Cs 전략을

표준화·획일화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소비자들은 점차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게 되었고, 소비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비자가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변화하기 급급해졌다. 그리하여 마케터들은 기존의 4Ps가 더 이상 이 시대의 시장상황과 맞지 않음을 깨달았

화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케팅이나 광고 관련 세미나에 가보아도 주제가 온통 IMC다.

아직도 IMC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가는 아니 뛰어가는 소비자·고객·국민을 알아채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마케팅과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정책마케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글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 「The MOFE Way」

## 재경부다운 재경부를 위한 길

- 「The MOFE Way」를 선포하다



지난 11월 9일, 재경부는 2007년 제2차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재경부 고유의 조직문화인 「The MOFE Way」를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재경부 직원들은 '재경부다운 재경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The MOFE Way」를 구성하는 3대 핵심가치, ① '고객을 위한 열정'(Passion for Customer) ② '역량강화'(Excellence) ③ '신뢰와 인간존중'(Trust)과, 핵심가치별 행동규범들을 준수하기로 외부 고객과 국민 앞에 다짐했다.

# 「The MOFE Way」

## 인사·조직문화 **확** 바꾼다



유광열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  
(ky\_yoo@mofe.go.kr)

**최** 근 기업들은 글로벌화, 무한경쟁, 윤리성 강조 등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그저 부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민간의 역량 강화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도 민간 부문,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정부조직과 정책경쟁을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총괄부처로서 타 정부기관을 선도해야 하는 재정부로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더욱 요구된다.

재 정부는 권오규 부총리 취임 이후 거버넌스 개선을 혁신의 핵심 화두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정책대화, 회의제 운영 선진화, 민간의 역량 활용 강화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버넌스가 지속가능한 혁신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The MOFE Way」(더 모페 웨이)를 정립하고자 한다.

「The MOFE Way」는 재 정부를 둘러싼 여러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 정부가 다양해진 정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직문화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외부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지난 5월말 제1차 재 정부 혁신워크숍 당시 '안에서 느낀 재 정부, 밖에서 바라본 재 정부'라는 주제의 패널토의에 참석한 전·현직 재 정부 간부들과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관련 인사들은 재 정부

에 대한 외부고객과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혁신인사기획관을 중심으로 재 정부 고유의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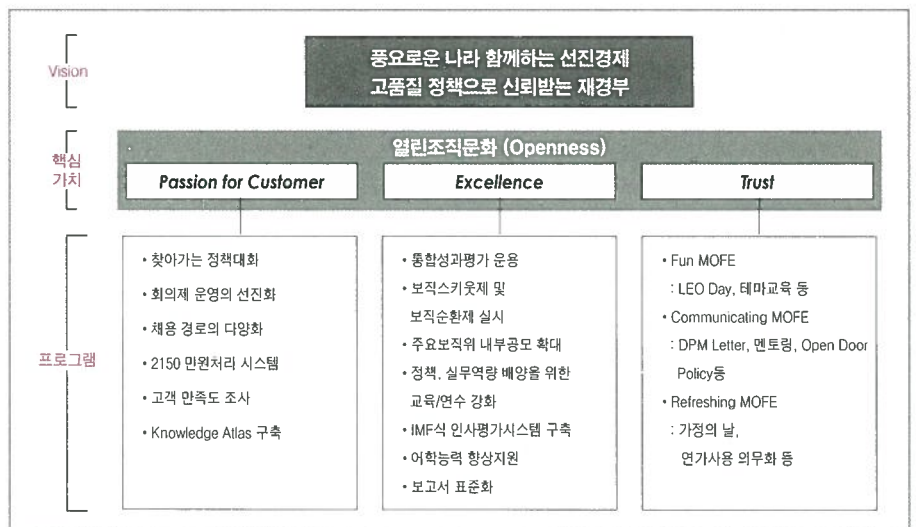
평균 기업수명이 15년도 채 되지 않는 오늘날, 오랫동안 생존하며 최고의 기업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휴렛팩커드(HP), 제너럴 일렉트릭(GE), 토요타(Toyota) 등 선진 글로벌 기업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경영이념, 일하는 방식, 기업문화를 'Way'라는 이름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밟았다.

재 정부는 고유의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재 정부 내 '조직문화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선진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HP, GE, Toyota, POSCO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둘째, 바람직한 재 정부 조직문화 상(像), 핵심가치와 실천 프로그램에 대해 재 정부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정책고객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셋째,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에 의뢰하여 그간 이루어진 사례연

〈그림〉「The MOFE Way」 체계도 및 관련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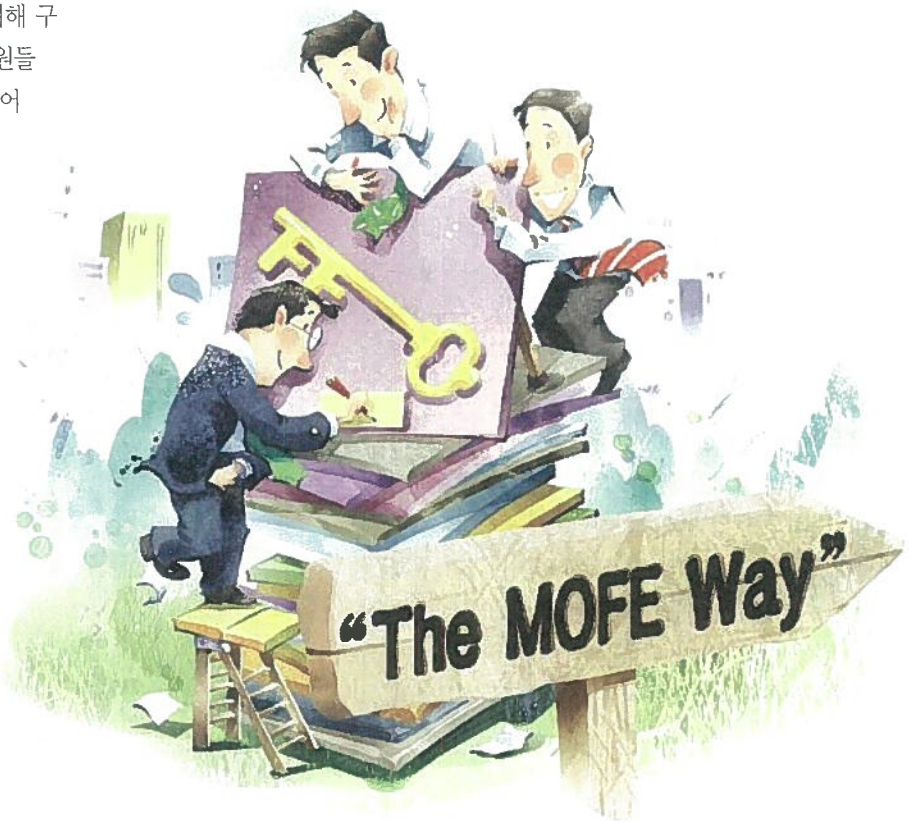
구, 의견수렴 결과들을 이론적·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정립된 「The MOFE Way」는 재정부의 조직문화 지향점을 '열린 조직문화'(Openness)로 정의하는 한편, 열린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3대 핵심가치로서 ①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의미하는 '고객을 위한 열정'(Passion for Customer) ②나로부터의 변화와 준비를 추구하는 '역량강화'(Excellence) ③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변화인 '신뢰와 인간존중'(Trust)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는 재정부가 열린 조직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로 번져나가고, 궁극적으로 외부의 다양한 '정책고객'에게 흘러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여 구성원들의 실질적·자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재정부는 「The MOFE Way」의 기본정신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정책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맞춰 핵심가치와 실천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다. ■



# 「The MOFE Way」

## 고객을 위한 열정



강기룡  
재정경제부 혁신팀장  
(meosum@mofe.go.kr)

「The MOFE Way」는 재경부가 추구해야 할 3대 핵심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핵심가치별 프로그램을 사례 위주로 소개한다.

### #01 고객을 위한 열정(Passion for Customer)

재경부가 지향해야 할 3대 핵심가치 가운데 최우선으로 '고객을 위한 열정'(Passion for Customer)을 채택했다. 이는 정책고객을 업무의 최상위에 두고 정책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심가치를 뒷받침하는 키워드로는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성'(Responsiveness), 대응의 '효율성'(Efficiency),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정성'(Fairness)을 각각 설정했다.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재정부 직원들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권역별 현장방문, 업계 간담회 등 '찾아가는 정책대화'를 실시해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책고객의 소리(VOC)를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피드백하고자 한다. 한편 재정부의 핵심업무인 정책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정보시스템 'Knowledge Atlas'를 구축하여 내부 직원의 만족도도 높여야 한다.

### #02 역량강화(Excellence)

두 번째 핵심가치인 '역량강화'(Excellence)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치열한 정책경쟁의 대열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구성원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역량강화'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역량개발'(Competency)과 직업윤리 측면인 '책임의식'(Accountability)과 '성실성'(Integrity)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부의 어떠한 여건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준비된'

재경부가 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운용중인 '통합성과평가제도'와 더불어, 'IMF식 인사평가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부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과 정책입안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어학능력 검증, 전문분야 교육 확대, 보고서 표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03 신뢰와 인간존중(Trust)

세 번째 가치인 '신뢰와 인간존중'(Trust)은 재경부가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이해해야 하는 따뜻한 가치로 설정했다. 개개인의 자율성

핵심가치  
#01

## “고객을 위한 열정”

Passion for Customer

키 · 워 · 드

<b>대응성 Responsiveness</b> 능동적 자세로 정책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성과를 창출함	<b>효율성 Efficiency</b> 경쟁요소의 도입을 통해 경제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함	<b>공정성 Fairness</b> 객관성을 바탕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함
---	---	--

행 · 동 · 규 · 범

- 자신의 업무성과를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한다.
- 정책고객의 잠재된 기대를 뛰어넘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한다.
- 언제나 정책고객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인다.
- 고객이 제기하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직접 부딪히서 해결한다.
- 고객과 늘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 고객 쪽에서 요청이 오는 것(메일, 전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처리상의 낭비요인을 찾아 제거한다.

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상호존중' (Respect)을 바탕으로 서로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각 개인이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신뢰와 인간존중'을 통해 개인의 역량개발이 조직의 역량확대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재경부가 '즐거운 일터'(Fun MOFE), '소통이 원활한 일터'(Communicating MOFE),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터'(Refreshing MOFE)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그간 재경부 간부들이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항상 사무실 문을 열어 두도록 하는 Open Door Policy와, 신입직원들에 대한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재경부 도서관을 북카페화하여 직원들과 자녀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포함된다.

이번에 마련된 실천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The MOFE Way」를 체감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

**핵심가치 #02**

## 역량 강화

Excellence

키·워·드

역량개발 Competency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식/기술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발전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함

책임성 Accountability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대해 규범이나 조직의 위계구조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함

성실성 Integrity

공명정대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성실껏 업무에 임함

행·동·규·범

- 조직의 성과창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본인의 기여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 조직의 방향을 바탕으로 나 자신만의 일하는 방식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탐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틈틈이 자기개발을 한다.
- 결과만을 중시하기보다 절차와 과정을 중시한다.
-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 기존 관련자식에 대한 정보를 동료에게 적극 제공하고, 역으로 받아들인다.
-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되, 조직의 번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수행한다.

**핵심가치 #03**

## 신뢰와 인간존중

Trust

키·워·드

상호존중 Respect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이해를 높임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구성원들간 다양함을 이루려는 통합된 언어를 통해 정체성을 높임

리더십 Leadership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권한을 위임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재를 육성함

행·동·규·범

- 동료·부하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 방법을 구사한다.
- 자신과 의견이 다른 동료·부하들과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 동료·부하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주변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부족한 주변동료·부하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나눈다.
- 직위와 직급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
-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권한을 위임한다.

# 「The MOFE Way」

## 인사평가 결과로 승진·성과급 결정한다

### IMF식 인사평가지시스템 도입



고광희  
재정경제부 인사팀장  
(khkoh@mofe.go.kr)

**재**경부의 새로운 조직문화 「The MOFE Way」에는 IMF식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재경부는 통합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보직스카웃제 운영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인사운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평가지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성적평가제도는 업무성과와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인사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보다는 주관적인 평판 등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경부는 합리적 인사운영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IMF의 인사평가지시스템(Annual Performance Review)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인사평가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혁신인사기획관과 실무진들이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IMF 인사평가지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하급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목표 설정단계에서 최종적인 평가단계까지 상하급자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성·고객지향성·팀워크 등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왜 그런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급자는 하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솔직한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하급자가 자

신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평가결과는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연봉 결정과 바로 연관되어 있어 상급자나 하급자 모두가 매우 신중하게 평가에 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

재경부는 이러한 IMF의 인사평가지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IMF처럼 평정기간(상반기 1월, 하반기 7월)을 정하여 상하급자간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서술식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동시에 서명·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회도 적극 제공함으로써 인사평가가 개인의 역량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고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근무성적평정'(승진)과 '통합성과평가제도'(성과급)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제도를 앞으로는 'IMF 방식의 인사평가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사평가가 승진·정보와 성과급을 결정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사평가결과와 보상체계 간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경부의 인사평가시스템 혁신은 능력있고 성과가 높은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노력의 제도화이다. ■



# 「The MOFE Way」

## 자기계발과 혁신을 놀이처럼 즐겨라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leemm@korea.ac.kr)

**재**경부가 새롭게 조직문화를 정립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부처인 재경부가 정부기관 최초로, 그것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재경부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조세정책, 금융정책, 국고 및 국유재산 정책, 외환 및 외채관리정책, 대외경제협력정책, 국민생활안정시책을 총괄하는 경제운용의 핵심주체이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재경부 직원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더 자기계발과 혁신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지식의 갱신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과 내부의 혁신강도도 점점 높아져 혁신피로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재경부가 몇몇 제도 개선 위주의 형식적 변화가 아닌 문화 개혁이라는 실질적·전면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은 고무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 재경부 조직문화 혁신의 지향점을 '열린 조직문화'(Openness)로 정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개방성·투명성·유연성 등으로 상징되는 '열린 조직문화'는 다른 3대 핵심가치를 아우르는 기본 전제로서의 가치가 있다.

재경부가 앞장서서 '벽을 허무는 개방'을 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인력 주고받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개방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확충하고 경쟁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한편 재경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가운데 최우선으로 고객을 위치시킨 것은 정책고객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고품질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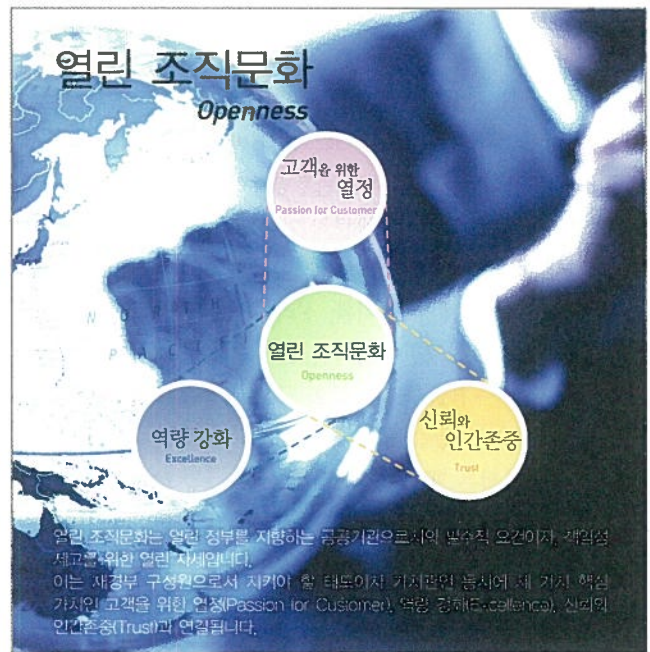
축구선수들은 여가시간에도 축구공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선

수들이 둘러서서 술래에게 공을 뺏기지 않도록 피하다가 패스하는데 실수로 술래에게 공을 뺏기면 새로 술래가 되는 놀이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을 지키고 뺏는 축구기술이 모두 놀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경부 직원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The MOFE Way」도 축구선수들의 놀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예산권과 금융감독권 등 막강한 권한이 분리된 가운데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자기계발과 혁신활동을 놀이처럼 계속해야 한다.

「The MOFE Way」 선포를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재경부의 위상과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큰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혁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건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





# 식민지 고통, 청초한 색기(色氣)

##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

**관**부연락선을 아시는지요? 관부(關釜)라면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와 한반도의 부산, 두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을 오고 가던 정기 선박을 관부연락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관부연락선이란 말 속에는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한과 피눈물이 흥건히 배어 있습니다. 가졌던 토지를 모조리 빼앗기고 다만 절박한 생존을 위해 현해탄을 건너갔던 무수한 한국인의 상처와 슬픔이 관부연락선에는 깃들여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 일본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혹사를 당했던 한국인들의 원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 관부연락선으로 끌려간 이들의 이름

관부연락선이 맨 처음 운항을 시작한 것은 1905년입니다. 당시에는 이끼마루라 불렀습니다. 일제는 관부연락선의 이름을 자주 바꾸곤 했는데, 그 배경에는 한반도에 대한 침략이념과 대륙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부연락선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져왔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끼마루→쓰시마마루→우네까마루→홍제환, 고려환, 신라환→경복환→덕수환, 창경환→금강환, 흥안환→이찌끼마루→천산환→곤륜환 등으로 줄곧 명패를 바꾸어왔습니다.

이 관부연락선은 맨 처음 1,500톤급 소형연락선으로 출발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7,500톤급 대형 선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부연락선에 몸이 실려 떠나간 한국인들

쌍고동 울어 울어 연락선은 떠난다  
 잘 가소 잘 있소 눈물 젖은 손수건  
 진정코 당신만을 진정코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삼키면서  
 떠나갑니다. (아이 울지 마세요)  
 울지를 말아요

- 「연락선은 떠난다」  
 (박영호 작사, 김승규 작곡, 장세정 노래)



은 일본의 시나노가와 발전소, 큐슈 탄광, 홋카이도 탄광 등지에서 민족차별과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심지어는 학살을 당하기까지 했었지요. 1923년에 일어났던 관동대지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인 학살사건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관부연락선은 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한반도 강점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축소판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1937년 2월, 식민지 조선의 여성가수 장

세정은 한 편의 기막힌 가요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연락선은 떠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그저 사랑하던 연인과의 평범한 이별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음미해보면 이별과 눈물의 의미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생살이 찢기는 식민지의 고통과 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관부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 땅으로 떠나면 그 길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득한 황천길이었던 것입니다.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우리 동포들은 이 「연락선은 떠난다」의 구슬픈 곡조에다 슬쩍 가사를 바꾸어서 자신의 처연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의 한 과정이었지요. 그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을 원망하나 나라가 망하는데  
 집안이 망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구나  
 실어만 갈 뿐 실어만 갈 뿐  
 돌려보내 주지 않네  
 눈물을 삼키면서 떠나갑니다  
 연락선은 저옥선

작사가 강사랑이 엮은 『한국레코오드가 요사』에는 다음과 같은 성우의 대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코드를 전축 위에 걸어놓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들으면 관부



### 이동순

영남대 국문과 교수, 시인  
경북대 대학원 문학 박사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dslee50@hanmail.net)



연락선을 타기 위해 아우성치던 부산항 제 2부두의 광경과 소음들이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현재, 그곳은 한 많은 해협이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여기를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실어가고 또 마음대로 실어다 팔았습니다. 부산항, 그 한 많은 부두에는 뼈에 사무치는 원한의 한숨이 점점이 서려있고, 관부연락선 그 연락선 갑판 위에는 피눈물로 얼룩진 한 많은 사연들이 서리서리 젖어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일본을 가려면 먼저 본격지나 거주지에서 도항증명서를 내야했습니다. 이 도항증명서도 부산경찰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로지 '조센징'이라는 이유로 도항증명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보따리나 몸수색을 당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구둣발로 차이며 따귀를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단 하나뿐인 아들을 산 설고 물 선 일본 땅으로 떠나보내야 했으니, 여기 이 노래는 그야말로 만인의 심금을 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 '평양이 낳은 가희'의 청초하고 섹시한 음성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처절한 삶과 한을 다룬 노래 「연락선은 떠난다」를 불렀던 가수는 장세정입니다. 그녀는 1921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생후 두 달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단에 들어갔다는 아버지는 소식도 없고, 조부모의 슬하

에서 자라났지요. 부모를 잃은 쓸쓸함을 어린 장세정은 항상 노래로써 달랬습니다. 십대 후반, 장세정은 평양 화신백화점의 점원으로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백화점 안에서도 각종 음반과 축음기, 악기 등속을 판매하는 악기점 일을 보았지요.

드디어 1936년 늦가을, 장세정은 평양방송국 개국기념 가요콩쿨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노래를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오케레코드사의 이철 사장이 마침 평양에 왔다가 장세정의 이런 모습과 만나게 되었고, 단번에 서울로 스카우트해 갈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철 사장은 장세정을 몹시 어여뻐 여긴 듯합니다. 장세정이 서울로 간 뒤 「연락선은 떠난다」와 같은 빅 히트작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철 사장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케에서는 장세정 음반을 소개할 때 '평양이 낳은 가희(歌姬)란 문구를 꼭 넣었습니다.

흔히들 장세정 창법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죽 뻗어나가면서도 가볍게 코에 걸리는 달콤함을 속으로 간직한 창법, 혹은 청초한 색기(色氣)를 느끼게 하는 창법이라 하지요. 사실 장세정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실감납니다. 장세정의 대표곡으로는 「만약에 백만원이 생긴다면은」, 「처녀야곡」, 「불망의 글자」, 「토라진 눈물」, 「항구의 무명초」, 「잘 있거라 단발령」, 「역마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해방 이후 1948년 봄에 발표한 「올여라 은방울」(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만큼은 불후의 명곡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해방된 역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누구를 신고 가는 서울거리나  
올여라 은방울아 세종로가 여기다  
인왕산 바라보니 달빛도 곱다

장세정은 그녀의 노래를 너무나 사랑했던 한정식과 결혼에 골인합니다. 한정식은 아내 장세정의 무대 활동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오페라, 악극단 공연 등으로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장세정은 대구로 피난 내려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무렵, 대구의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고향초」, 「즐거운 목장」, 「산프란시스코」 등의 음반을 발매하고 히트시켰지요.

1970년대로 접어들어 장세정은 가수 신카나리아가 운영하던 카나리아 다방에 나와서 즐거웠던 추억담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암, 박영호 등 월북 작사가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거의 금지곡 목록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뼈저린 아픔 속에서 장세정은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1978년 장세정은 미국 LA에서 은퇴기념공연을 펼친 뒤, 2003년 향년 82세의 나이로 머나먼 타국에서 고단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

# 국가경쟁력 11위! 12계단 뛰었다



이찬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cleef@mofe.go.kr)

**지**난 10월 31일 세계경제 포럼(WEF)에서 발표한 200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12단계 상승한 11위를 차지했다. WEF가 국가경쟁

력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또한 WEF는 국가경쟁력 분야의 석학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경쟁력 이론에 기초한 척도를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 단계인 '혁신주도형' 국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예상 밖의 성과다.

그간 WEF와 IMD(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고 순위가 등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대응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표면적인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좋은 성과를 가져온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을 찾아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WEF 국가경쟁력 상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WEF, 미래지향적·포괄적 관점에서 평가

WEF(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관으로 IMD(국제경영대학원)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 기관이다. 두 기관의 차이는 IMD가 기업인의 관점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2007년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세부 부문, 113개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700개 기업 경영진에 대한 설문 조사와 경제지표 등 객관적인 통계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2007년 국가경쟁력 평가의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요인(14위, +10), 효율성 증진(12위, +12), 기업혁신(7위, +10) 등 3대 부문에서 골고루 순위가 올라갔다. 12개 세부 부문도 거시경제 안정성(5위→8위)이 다소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가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여건과 시장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상단수 조사결과가 설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 시스템의 선진화,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 혁신역량의 강화 등 정책 결과를 기업인들도 점차 체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수 있는 '고등교육 및 훈련(6위)', '과학기술 수준(7위)', '기업혁신(8위)', '기업활동 성숙도(9위)'가 평균 순위인 11위보다 높아 강점으로 분류되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취학률은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고, 대학특성화,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등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교육 부문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부문은 인터넷 활용 등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분류되었다. 기업 부문에서도 R&D 투자 확대 등 기업 자체적인 혁신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효율성 증진' 12단계 올라 9위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은 2006년 5위에서 8위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다. 2006년 한 해 동안 대외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한 결과 안정적인 물가와 잠재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공공 부문을 혁신하고 정부 부채 감축으로 건전한 재정 부문도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다.

반면 보건·안전 등의 제도적 여건과 금융시장, 노동시장 효율성은 상대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테러위험 관련 비용 항목은 북핵문제 등으로 매우 낮은 순위(78위)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이 항목도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라리아·결핵 등 후진국 병으로 인한 비용도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보건 분야에 대한 관련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자본시장 통합법」 마련, 금융규제개혁 추진 등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부문 성적은 저조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노력이 아직 시장에 체화되지 않은 결과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 등이 구체화되고 실천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순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WEF 평가를 비롯해 IMD 경쟁력 평가, 세계은행(WB)의 기업경영환경 평가 등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해고비용이 과다(107위)하고 고용의 경직성(50위)이 높아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

에 기초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과 취약계층 보호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곧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금융·노동시장 효율성,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이와 같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통계(hard data)에 비해 설문조사(soft data)가 큰 비중(2/3)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 당시의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국내 거주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을 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 순위 변동이 해마다 2~4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2단계 상승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상대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한층 높아진 국가경쟁력을 유지 또는 높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선진화와 대외개방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거주 기업인과 이해관계 집단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쌍방향 대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경쟁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처럼 소규모 경제임에도 높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강소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표 1〉 WEF 부문별 순위 변화

부 문	세부부문	2006	2007	순위변동
기본요인 (24→14)	제도	42	26	+16
	인프라	23	16	+7
	거시경제의 안정성	5	8	-3
	의료 및 초등교육	34	27	+7
효율성 증진 (21→12)	고등교육 및 훈련	21	6	+15
	상품시장 효율성	28	16	+12
	노동시장 효율성	47	24	+23
	금융시장 성숙도	49	27	+22
	기술수준	12	7	+5
	시장 크기	14	11	+3
기업혁신 및 성숙도 (17→7)	기업성숙도	23	9	+14
	혁신	14	8	+6
총 합		23	11	+12

〈표 2〉 세부항목별 강점과 약점 비교

	강 점	약 점
기본요인	정부규제 완화(8) 이자율 스프레드(4) HIV 환자비율(1) 초등학교 취학률(4)	테러위협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78) 조직범죄가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50) 범죄·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40) 말라리아가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99) 결핵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87) HIV가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70) 교육비 지출(76) 결핵발병률(85) 말라리아 발병률(74)
효율성 증진	고등교육 취학률(1)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4) 기업의 직원훈련 투자(5) 수학과학 교육 수준(10) 구매자 성숙도(2) 고객 지향도(4) 보수 및 생산성(9)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2) 인터넷 이용자 수(6) ICT 관련 법규(7)	중등교육 취학률(48) 창업시 행정절차(95) 무역가치치 관세율(78) 외국인 기업소유에 대한 제한(61) 해고비용(10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79) 임금 외 노동비용(71) 고용의 경직성(50) 노사간 협력(55) 은행 건전성(69)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35) 은행대출의 용이성(28)
기업혁신 및 성숙도	기업 클러스터(3) 국제물류 및 마케팅의 내국기업 점유(4) 기업의 혁신능력(7) 정부의 고급기술 구매 적극성(2) 산학연구 협력(5) R&D 투자(6) 발명특허건수(8)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이양 정도(21) 물품·서비스 국내공급자의 효율성(17)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용이성(13)


## 중소기업에 연구장비 싸게 빌려드려요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25개)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3만천개)를 중소기업이 이용 시 이용료를 30~50% 저렴하게 제공하여 고가장비 이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 이용 방법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중소기업연구원(www.kosbi.re.kr)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배너  를 클릭하면 중개창으로 이동
- 중개창의 해당기관 정보제공사이트를 클릭하면 기관별 연구장비 공동이용 안내창으로 이동되며, 안내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

문의전화 ☎ 042-865-3489, 3586(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정보팀)



### 중소기업지원 시험·연구장비 공동이용 안내

기획예산처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시험·연구장비 부족에 따른 기술개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시험·연구장비 공동이용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명	정보제공사이트	지원내용 및 주요장비
 과학기술부	연구장비정보망 (KEOL)	· 전국 350여 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 29,000여 건에 대한 소재정보 제공
 중소기업청	연구장비·인력 종합검색시스템 (TRIN)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에 주관기관의 장비를 이용 할 경우, 기업당 연간 12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료의 60%를 지원 · 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보유장비 21,000여 건의 시험·연구장비 검색 및 이용신청
 K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기기 분석지원	· 대덕병원, 6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2개 출장소(순천, 강릉), 오정캠퍼스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연구장비의 시험·분석 및 공동연구 지원 · ICP-MS, ICP-AES, Protein Sequencing System (PRO),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XRF, NRMS, XPS, Carbohydrate Analysis System, MP-XRD, Elemental Analyzer 등
 KITECH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용실험실	· 23개 공용실험실을 지정하고 첨단 고가장비 500여종을 개방하여 운영 · Weather-O-meter, CCM, ICP, TGA/DSC, GC/MSD, LC/MSD, Durability testing system for cabin air filter unit, Launder-O-meter, SEM, EDS, Industrial Volume CT system 등
 한국화학연구원	공동기자재	· 중소기업 관련 화학분석 지원 및 제반 분석기술 협조 · ICP/AES, ILC, XRD, EA, SEM, EDS, IR, GC/MS, LC/MS, NMR 등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	· 슈퍼컴퓨팅 응용 기술이 필요한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 · 슈퍼컴퓨터(NEC SX-5/6, IBM p690, PC Cluster, HP SMP, HPSS 등)
 KRIS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정 및 시험	·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산업체에 대한 교정/시험 서비스 · Near-field scanner 평탄도 측정 시험, 방사선 차폐율측정 시험, HORN ANTENNA 교정, OUTGASSING 측정시험(TML), ELECTRICAL POWER STD 교정, 레이저 파워미터 교정, UNIVERSAL COUNTER 교정, 표면거칠기 표준시험 교정, Vacuum Leak Test, 자기이력곡선 시험 등
 KIMM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장비 공동이용정보망 (KEN)	· 연구원이 보유한 고가장비 170여 종을 개방하여 운영 · 6자유도진동대, 초고속전공백련심시험시설, STRUCTURE TEST SYSTEM(2), 경증량 충격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금속현미경, NOSE ANALYZER SYSTEM,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 분광기, 부식시험기, 염수분무시험기 등

닫기

기획예산처·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은행



# 빙글빙글, 울렁울렁 어지러우세요?

**날**씨가 추워졌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핑 돌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이 생긴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세상이 핑 도는 것 같고 똑바로 걷기가 힘들거나 차를 오래 타서 멀미 나듯이 울렁거리기도 한다. 어지럼증(현훈)이다. 어지럼증은 빈혈, 저혈압, 갱년기장애, 전정신경염, 매니어씨 병, 뇌저동맥 부전증, 뇌졸중, 뇌종양 등 다양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저혈압 환자의 경우 갑자기 일어나다가 쓰러지면서 몸을 더 다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자세를 천천히 바꾸고 무엇인가를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뇌종양이 있는 경우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오는 것보다 천천히 발생하면서 호전이 없다면 뇌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전정신경염인 경우가 많다.

전정신경은 귀의 달팽이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평형을 유지해주는 신경이다. 이 신경이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듯 약해지면서 평형을 유지하지 못해 어지럽고 울렁거리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지럼증 자체가 뇌졸중의 초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다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된다.

가까운 내과 혹은 신경과를 방문하여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약물치료와 안정가료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전정신경은 안정가료를 하고 5~7일간 쉬면 저절로 좋아지므로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안정을 하고 숙면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 잘 쉬지 못하면 심각한 질병악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동식을 하고 말초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 7~14일 정도면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뇌중추신경 손상이나 내이질환, 빈혈, 심장질환 등이 병발해 있는지 정밀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질환이든 그 발생은 무리한 코로나 정기검진의 부주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건강관리,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를 권한다. 건강칼럼을 마치면서 『나라경제』 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 ■

2008년 1월호부터는 김철규 하늘꽃 한의원 원장의 건강칼럼이 이어집니다.

## 두통·보행장애·감각이상엔 뇌졸중(腦卒中) 의심해야

어지럼증은 귀나 뇌, 심장 등의 문제에서 올 수 있다.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은 두통, 설명할 수 없는 보행장애, 편측 운동기능장애, 감각 이상 등의 증세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럴 땐 뇌졸중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빈혈의 경우는 어지러우면서 저혈압 증세를 동반하는데 정밀한 원인진단과 철분섭취가 필요하다.

이명, 청각 감소, 호전되지 않는 만성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내이(內耳) 질환인 매니어씨 병을 의심해야 한다. 이비인후과에서 귀에 대한 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저혈압이 있으면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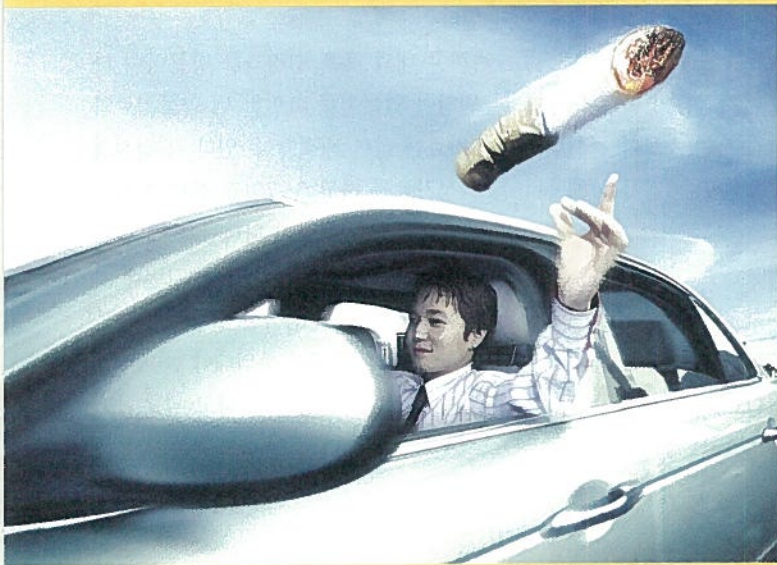


## 전정신경염, 4~50대 어지럼증의 주된 원인

4~50대 직장인들에게는 빈혈, 저혈압, 전정신경염 등이 어지럼증의 흔한 원인이 된다. 일교차가 심하고 추운 날씨에 감기를 오래 앓았거나 고혈압 환자가 무리한 일을 많이 한 뒤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면

버리면 돌아온다?

Before



After



공공장소에서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기!

당신이 무심코 버린 공공에티켓, 당신은 오늘도 몇 번이나 버리셨습니까?

공공에티켓, 버리면 당신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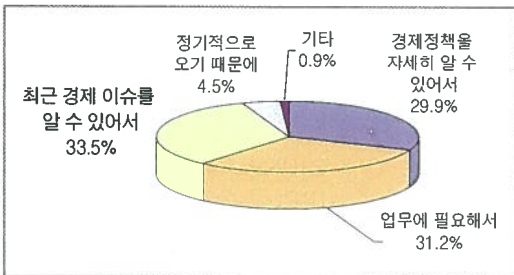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나라경제』는 2007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무상 독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On-line(나라경제 홈페이지)과 Off-line(우편,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모두 221명의 독자들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독자들의 의견은 2008년 『나라경제』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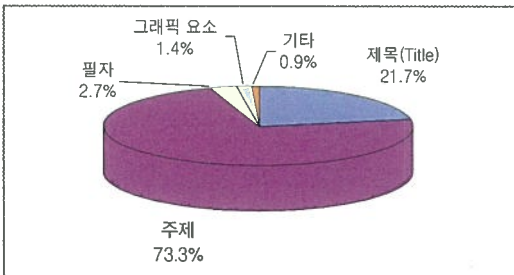
## ■ 『나라경제』를 읽는 목적

- '최근의 경제이슈를 알 수 있어서' 라고 응답한 독자가 가장 많았고, '업무(학업)에 필요해서', '경제정책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읽는다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음.



## ■ 기사 선택의 기준

- 응답자의 73.3%가 '주제' 라고 응답했으며, 21.7%가 '제목' 이라고 답해 기사 선택의 기준은 '주제' 와 '제목' 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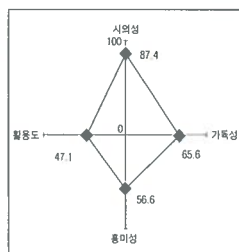


## ■ 『나라경제』 콘텐츠에 대한 평가

-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사가 읽기 쉽게 쓰여 있다', '기사들이 흥미롭고 재미있다', '업무(학업)에 활용도가 높다' 는 평가항목에 모두 '그렇다' 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 중 '활용도' 항목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불만족의 비율도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나라경제』의 업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나라경제』에 대한 평가(%)

	시의성	가독성	흥미성	활용도
매우 그렇다	21.3	10.4	10.9	8.6
그렇다	66.1	55.2	45.7	38.5
보통	10.0	28.1	37.6	36.2
그렇지 않다	1.8	5.4	5.9	15.4
전혀 그렇지 않다	0.5	0.5	0.0	1.4



## ■ 관심 있게 보는 코너·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코너

- 관심 있게 보는 코너를 묻는 질문에 '경제정책해설' 과 '세계경제현장' 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해외시장리포트'와 '특집' 이 뒤를 이음(중복 선택).
-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코너에는 '특집' 과 '경제정책해설' 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밖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도의 응답을 보임(2개 선택).

〈표 2〉 관심 있는 코너·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코너

관심 있게 보는 코너	%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코너	%
경제정책해설	77.4	특집	39.5
세계경제현장	56.1	경제정책해설	34.5
해외시장리포트	53.8	세계경제현장	4.1
특집	53.4	글로벌포커스	4.1

## ■ 개선해야 할 점이나 추가되길 원하는 코너에 대한 의견

- 내용이 딱딱하므로 좀 더 가벼운 코너들을 추가하면 좋겠다
- 통계치·경제동향·경제지표 등을 포함시켜 달라
- 비판이나 토론코너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신는 것이 좋겠다
-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칼럼을 확대하자
- 경제용어 해설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등

## ■ 『나라경제』 디자인에 대한 평가

- 『나라경제』의 표지·사진·표 등 디자인이 세련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그렇다', 5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다른 항목들에 비해 디자인 부분이 낮게 평가되고 있음.

『나라경제』 독자 만족도 조사에 답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팀)



김희삼

KDI 연구위원  
(hisamkim@kdi.re.kr)

- 서울대 경제학과
- 美 Wisconsin대 경제학 박사
-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

## 자선에 관한 단상

을 발견했다. 자선행위는 가정에서 배우자의 이타심을 원하는 이성에게 자신의 자질을 암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성에게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그러나 성별을 막론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는 잘 보이고 싶은 이성과 함께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자선을 행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선이론은 자선행위를 효과적으로 늘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헌금봉투가 실수로 비치되지 않았던 날 헌금총액이 평소보다 많았는데,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노출될 헌금의 액수를 의식했던 것이다. 무인 모금함보다 유인 모금함이, 자선을 기다리는 고정식 모

내는 경우가 많다. 방송사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만한 영상이나 사연을 소개한 후에 ARS 전화 한 통으로 성금을 모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선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복지가 미비한 상황에서 행정력으로 자선을 동원하다보니 정부 주도의 기부금 모집이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었던 점이나 각종 비영리단체의 모금과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각박한 인심을 타이기 전에 자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

**연**말이면 거리 곳곳에 짙어가는 종소리와 함께 빨간 자선냄비가 등장한다. 자선의 동기는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자선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타적 선호'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어린 자식이 맛나게 밥그릇을 비우는 것을 바라보던 부모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것처럼, 남이 누리는 것에서 자신이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족감을 얻는 경우다.

자선행위 자체가 주는 뿌듯하고 긍정적인 느낌 때문에 자선을 행한다는 이론도 있다. "Feel good about yourself- Give blood!" 미국 적십자사의 헌혈 광고 문구다. 이런 느낌을 '따뜻한 빛'에 비유하여 'warm glow'라고 부른다. 물론 이것은 순수하게 독자적인 느낌이 아니라 주변의 칭송을 통해 얻는 명예감이나 타인의 비난을 모면한 안도감 등과 같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일 수 있다.

심리학자들의 최근 실험에서는 자선행위가 다른 사람, 특히 이성에게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는 데서 촉발될 수 있다는 것

금함보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동식 모금함의 실적이 높은 것도 자선행위가 주변의 시선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성의 눈을 의식한 자선행위가 많다면 자선 모금함을 테이트나 프리포즈 장소로 인기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실제로 자선단체들은 모금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한다. 어떤 미국 자선단체는 반송봉투와 함께 동전 몇 개를 넣어 보내며 기부금을 못 내면 동전만은 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실상 동전만 돌려보내기는 야박하게 느껴지므로 기부금을 보

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비영리단체는 정보공개를 통해 기부금 사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학교에 헌납하는 식의 '청산형' 기부보다 지속적인 소액기부가 활성화되고 연말에 집중되는 '체험형' 자선행위가 일상적인 활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짜더라도, 그 위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 그 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것은 민간의 자선활동이다. ■

“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학교에 헌납하는 식의 ‘청산형’ 기부보다 지속적인 소액기부가 활성화되고 연말에 집중되는 ‘체험형’ 자선행위가 일상적인 활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



# "일상에서의 탈출"

산림휴양포털 '숲에On'

숲에 온 |



산림휴양포털 '숲에 On'에는 자연휴양림, 등산, 산림체험, 숲 해설, 「국민의 숲」 등 숲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일회용품, 오늘은 심!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회용품의 사용을 쉬는 것-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만은 뿌듯해질 거예요.  
일회용품 줄이기 - 말보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